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필요지표(통계)진단연구 :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2018

통 계 개 발 원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8년 통계개발원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필요지표(통계)진단연구」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통계개발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필요지표(통계)진단연구」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홍 기 석(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자	신 석 하(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 정 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 호 신(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 영 일(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 무 상(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우교수) 변 준 석(통계개발원 사무관)
연구보조원	송 민 영(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오 수 진(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임 나 연(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장 성장과 안정: 개념 및 사회적 이슈	7
제1절 성장과 안정의 개념	7
1. 성장 및 생산성	7
2. 안정	12
제2절 새로운 경제적 이슈와 취약/중점 분야	19
1.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경제적 이슈	19
2. 구조적 변화와 취약/중점 부문	25
제3장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8
제1절 외국의 사례	28
1. 해외의 국가발전지표	28
2. 주요국 국가발전지표 사례 및 비교	34
제2절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49
1. 성장 영역	50
2. 안정 영역	65
제4장 성장·안정 영역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48
제1절 성장·안정 영역 통계 개선방안	84
1. GRDP 개선 방안	84
2. 가구내 생산의 가치 측정	89
3. 디지털/공유 경제의 측정	94
4. 인적자본	96

제2절 성장·안정 영역 통계 실행계획	100
1. 부문별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100
제5장 국가주요지표 개선방안	116
제1절 국가주요지표 현황	116
1. 국가주요지표 ‘성장과 안정’ 영역	116
제2절 평가 및 개선안	120
1. 국가주요지표 평가	120
2. 국가주요지표 개선안	123
참고문헌	135
부록	138
제1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38
1. 국민계정체계와 국민소득통계	136
2. 지역소득통계	149
3. 관련 통계의 현황	155
제2절 주요 국가의 국가발전지표 목록	160

표 목 차

[표 1] 각 지표의 등장시기, 등장배경 및 주요 특징	32
[표 2] 종류별 각국의 지표	34
[표 3] 현행 우리나라의 국가주요지표 중 성장과 안정 영역	35
[표 4] 뉴질랜드의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 영역	37
[표 5] 뉴질랜드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의 세부지표	38
[표 6] 호주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의 경제 부문 영역 및 하위영역 주요지표	42
[표 7] Measures of Ireland's Progress의 경제부문 지표	44
[표 8] 국가별 지표 비교 : 성장과 안정 영역	47
[표 9] 국가발전지표 성장 영역: 현재의 성장	52
[표 10] 국가발전지표 성장 영역: 미래의 성장 가능성	54
[표 11]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55
[표 12] 주요국 R&D 및 특허 비중	62
[표 13] 금융안정 관련 지표	70
[표 14] 국가발전지표 안정 영역: 금융안정	71
[표 15] 일반정부 3개년 정부운영표	74
[표 16] 국가발전지표 안정 영역: 재정안정	77
[표 17]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GRDP 측정 사례	79
[표 18] 국가발전지표 균형발전 영역	82
[표 19] GDP와 GRDP의 비교	86
[표 20] 부문별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105
[표 21] 한국의 재정수지(순융자) 및 경기조정 재정수지	111
[표 22] 2017년 연금충당부채	112
[표 23] 부문별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113
[표 24] '성장'영역 지표체계	119
[표 25] 성장'영역 지표체계 개선안	124
[표 26] 안정'영역 지표체계 개선안	130
[표 27] 현행 지표체계와 개선안의 비교	131
[부록표 1] 산업연관표의 구조	143
[부록표 2] 생산세 및 생산물세의 구분	147

[부록표 3] 국민계정체계의 제도단위와 제도부문	149
[부록표 4] 지역계정(생산·지출·분배)지표의 포괄범위	152
[부록표 5] 미국 지역소득통계의 작성순서	155
[부록표 6] 뉴질랜드 국가발전지표 목록	160
[부록표 7] 호주의 2012년 국가발전지표 목록	163
[부록표 8] 호주의 2006년 국가발전지표 목록	180
[부록표 9] 호주의 2006년 국가발전지표의 보완지표 목록	184
[부록표 10] 아일랜드의 국가발전지표 목록	185

그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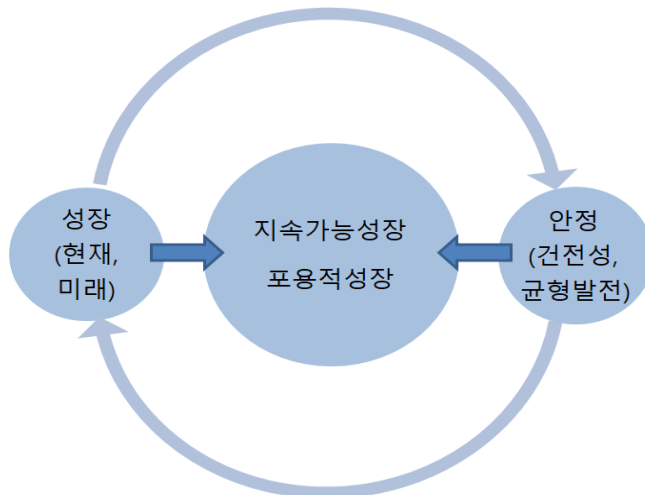
[그림 1] 성장과 안정의 개념	4
[그림 2] 성장과 생산성	8
[그림 3] 재정의 역할	16
[그림 4] 뉴질랜드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의 Framework	37
[그림 5] 호주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의 의견수렴과정	40
[그림 6] 호주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의 대시보드	41
[그림 7] 자산별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기여율	57
[그림 8] 비용접근법에 의한 우리나라 인적자본 추정	59
[그림 9] 평생소득 접근법에 의한 우리나라 인적자본 추정	60
[그림 10] 금융안정과 거시경제 성과의 관계	66
[그림 11]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의 국가간 비교: 제조업, 2013년	80
[그림 12]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의 추이: 국내 자료	81
[그림 13] 국민계정과 가구내 생산	90
[그림 14] 외국의 가구내 생산의 가치	93
[그림 15] ISCED97 진학경로	99
[부록그림 1]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139
[부록그림 2] 기초가격, 생산자가격, 구매자가격 평가시 부가가치세의 처리	146
[부록그림 3] 미국 지역소득통계의 구성	153
[부록그림 4] 지역소득통계의 계정별 작성현황	157
[부록그림 5] 시·군·구 GRDP 작성절차: 2017년 4월 현재	158
[부록그림 6] 시군구 GRDP 승인 및 공표 현황: 2017년 4월 현재	15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인 경제성장은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하여야 함.
 - 현재의 성장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함을 의미
 - 성장과 안정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한 다음, 그 개념에 부합하는 통계지표들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
- 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축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은 다양한 해석과 지표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 Stiglitz-Sen-Fitoussi 보고서는 성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EU의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MIP), Medium-Term Budgetary Framework (MTBF) 등에 의하면 경기변동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가능 성장의 조건
 - 포용적 성장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창출하고, 금전적 비금전적 번영의 배당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을 강조
 - 지역간 균형, 노동-자본간 소득분배의 균형,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축소 등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충격에 대한 경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임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균형발전”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장과 안정 영역의 개념적 틀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음.
- 성장은 현재의 성장만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까지 포괄하여야 하며, 안정은 건전성과 균형발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성장과 안정의 개념은 Stiglitz-Sen-Fitoussi가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장 및 국제기구들이 천명하는 포용적성장과 상통함.

[요약 그림 1] 성장과 안정의 개념



2. 성장과 안정: 개념 및 사회적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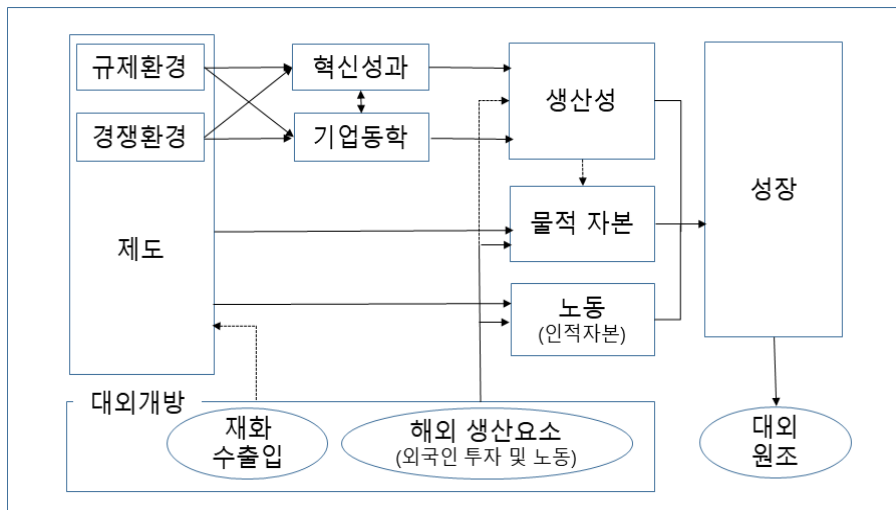
(1) 성장과 안정의 개념

- '성장'의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학의 총생산함수라는 분석틀을 이용함으로써 성장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파악
- $Y = F(K, L)$ 과 같이 총생산(Y)는 경제 내의 자본스톡(K)과 노동(L)

의 크기, 그리고 이를 결합하여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기술 및 생산성(F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총생산(Y)의 성장이 미래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이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시 인적·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과 제도 환경의 개선 등이 요구됨.
- 요소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할 수 있음.
- 성장 및 생산성에 관한 이상의 설명은 그림 2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음.

[요약 그림 2] 성장과 생산성



주: 실선은 직접적인 영향을, 점선은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 ‘안정’의 개념은 ‘성장’에 비해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거시경제적 건전성과 균형발전을 안정의 주요 내용으로 설정함.
- 거시경제적 건전성은 다시 금융건전성과 재정건전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거시경제의 건전성 혹은 취약성을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일 것이므로 금융건전성은 곧 거시경제 전반적인 건전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음.
- 전반적인 금융건전성이 주로 민간부문의 건전성 혹은 취약성을 나타낸다면, 재정건전성은 공공부문의 건전성 혹은 취약성을 나타내는 개념임.
- 거시경제적 건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여러 부문 간의 격차가 심한 사회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균형발전 또한 ‘안정’의 필요조건에 해당
- 균형발전은 대기업 vs. 중소기업, 수도권 vs. 비수도권, 자본소득 vs. 노동소득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국가주요지표체계 여타 영역과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

(2) 새로운 경제적 이슈와 취약/중점 분야

- 성장과 안정의 구체적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특히 당시의 구조적 변화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이슈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중요한 구조적 변화로서 인구 고령화, 4차 산업혁명(기술진보), 위험 및 변동성의 확대 등을 고려함.
-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만성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해짐.
 -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상적인 유형자본만이 아닌 무형자본(인적자본 포함)의 축적, 기술진보 등이 요구됨.
 - 인구 고령화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자원재배분 및 그로 인한 세대간 갈등도 유발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진보는 노동시간, 생산성, 분배 등 여

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디지털 경제, 무형자산의 크기, 새로운 기술의 도입 정도 및 법제도적 준비상태 등에 대한 정량화가 필요
- 현재로서는 어렵더라도 향후 객관적 지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지난 수십년 동안 장기적으로 금융위기의 빈도가 높아지고 개인의 소득 변동성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관찰됨.

- 거시건전성 확보 및 위기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이 확대될 필요
- 소득 변동성의 확대는 소득위험의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횡단면적 소득분배의 악화를 의미할 수도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변화들은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 생산성, 인적자본, 거시건전성,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고려가 심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예를 들어 고령화 및 기술진보로 인하여 일자리의 직무가 변화하고 고용형태나 근로형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재교육, 평생교육 포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

3. 국가주요지표 개선방안

-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국가주요지표 ‘성장’ 영역의 지표체계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 기존의 ‘성장’ 영역 내에 국민경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성장’ 영역을 ‘성장’ 영역과 ‘안정’ 영역 등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
 - 또한 현행 지표체계에서는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가 ‘소득과 소비’ 영역과 ‘성장’ 영역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장’ 영역에서는 ‘소득불평등’ 하위영역을 제외하고 그 대신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분배적 측면을 다루기 위하여 ‘균형발전’을 하위영역으로 포함시킴.

[요약 표 1] ‘성장’ 영역 지표체계 개선안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성장	• 경제성장률	• 1인당 국내총생산 • 가국내생산(위성계정)	• OECD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생산성	• 노동생산성증가율 (시간당)	• 노동생산성증가율 (1인당) •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기업영업이익률	• OECD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물적자본	• 총고정투자율	• 고정자산 비율 (GDP 대비)**	• 총고정투자율
인적자본	• 고등교육이수율**	• 평생학습참여율**	• 고등교육이수율
기업동학	• 창업률	• 벤처기업수 • 기업소멸률**	• OECD 주요국의 창업률
혁신	• 연구개발투자비율 (GDP 대비)	• 특허출원수 (인구 100만명당)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 OECD 주요국의 특허출원수
개방	• 수출입비율 (GDP 대비)	•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 주요국의 수출입비율 (GDP 대비) • OECD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 거주자 해외직접 투자 비율 (GDP 대비)
- 공적개발원조비율 (GDP 대비)*
- 취업 및 이민 목적 내국인 출국자 비율 (전체 취업자 대비)

[요약 표 2] '성장' 영역 지표체계 개선안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성장	• 경제성장률	• 1인당 국내총생산 • 가구내생산(위성계정)	• OECD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생산성	• 노동생산성증가율 (시간당)	• 노동생산성증가율 (1인당) •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기업영업이익률	• OECD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물적자본	• 총고정투자율	• 고정자산 비율 (GDP 대비)**	• 총고정투자율
인적자본	• 고등교육이수율**	• 평생학습참여율**	• 고등교육이수율
기업동학	• 창업률	• 벤처기업수 • 기업소멸률**	• OECD 주요국의 창업률
혁신	• 연구개발투자비율 (GDP 대비)	• 특허출원수 (인구 100만명당)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 OECD 주요국의 특허출원수
개방	• 수출입비율 (GDP 대비)	•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 거주자 해외직접 투자 비율 (GDP 대비) • 공적개발원조비율 (GDP 대비)* • 취업 및 이민 목적 내국인 출국자 비율 (전체 취업자 대비)	• 주요국의 수출입비율 (GDP 대비) • OECD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 기존 지표에서 단순 위치변경 등의 수정

** 신규 편입 지표

[요약 표 3] 현행 지표체계와 개선안의 비교

영역	하위영역	현행지표체계		비고	개선안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성장과 안정	성장	주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주	성장
		보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GDP)	보	
				신규	가구내생산 (위성계정)	보	
	생산성	주	노동생산성 (시간당)		노동생산성증가율 (시간당)	주	생산성
		보	노동생산성지수 (1인당)		노동생산성증가율 (1인당)	보	
		보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총요소생산성증가율	보	
		보	기업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보	
	성장가능성	주	총고정투자율		총고정투자율	주	물적자본
		보	총고정투자증가율	삭제			
				신규	고정자산 비율 (GDP 대비)	보	
				신규	고등교육 이수율	주	인적자본
				신규	평생학습 참여율	보	
		주	창업률		창업률	주	
		보	벤처기업수		벤처기업수	보	
			신규	기업소멸률	보		

		현행지표체계		비고	개선안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주	연구개발투자비용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용 (GDP 대비)	주	혁신		
		보	특허출원수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수 (인구 100만 명당)	보			
	글로벌화	주	수출입비용 (GNI 대비)		수출입비용 (GNI 대비)	주	개방		
		보	상대국별 수출비용	삭제	상대국별 수출비용				
		보	상대국별 수입비용	삭제	상대국별 수입비용				
		주	외국인직접투자비용 (GDP 대비)	주->보	외국인직접투자비용 (GDP 대비)	보			
		보	거주자해외직접투자비용 (GDP 대비)		거주자해외직접투자비용 (GDP 대비)	보			
					외국인근로자비용(취업자 대비)	보			
					취업 및 이민목적 내국인출국자비용(취업자 대비)	보			
		주	공적개발원조비용 (GDP 대비)	삭제					
	건전성	주	통합재정수지비용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용 (GDP 대비)	주	재정수지	안정	
		보	국민부담률	삭제					
		보	정부지출비용 (GDP 대비)	삭제					
		보	정부지출구성	삭제					
				신규	관리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보			
				신규	일반정부 순융자/차입 비율 (GDP 대비)	보			

		현행지표체계		비고	개선안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주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주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	일반정부부채비율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 (GDP 대비)	보		
		보	공공부문부채비율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비율 (GDP 대비)	보		
				신규	사회수혜금 비중 (GDP 대비)	주	사회안전망	
				신규	사회적 현물이전 비율 (GDP 대비)			
				신규	일반정부 사회보호지출 비중 (GDP 대비)			
		보	대외채무비율 (GDP 대비)	보->주	대외채무비율 (GDP 대비)	주	대외안정	
		주	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주->보	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보		
		보	외환보유액비율 (GDP 대비)		외환보유액비율 (GDP 대비)	보		
				신규	단기대외채무 비율 (외환보유액 대비)	보		
				신규	은행업 자기자본 비율 (BIS 기준)	주	금융안정	
				신규	가계부채 비율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보		
				신규	취약부채가구 비율 (부채보유가구 대비)	보		
				신규	기업부채 비율 (자기자본 대비)	보		
				신규	한계기업 비율 (외감기업 대비)	보		
				신규	지역별 GRDP	주	지역균형발전	

현행지표체계				비고	개선안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신규	지역별 1인당 GRDP	보	기업균형발전	
				신규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보		
				신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주		
				신규	대기업 매출액 비율	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경제발전이며, 경제발전의 근간은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언급되는 지표들에는 1인당 소득이나 GDP 성장률과 같이 경제성장에 관한 통계들이 항상 포함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국가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바람직한 성장은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하여야 한다. 1998년의 우리나라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급격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는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며 그 동안 이루어온 경제성장의 성과들을 일시에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장기적 성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성장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성장과 안정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의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그 다음 그 개념에 부합하는 통계지표들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장”의 개념은 비교적 분명하며 그에 관한 통계 지표 및 체계의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편이지만, “안정 및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정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다양한 해석과 지표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Stiglitz-Sen-Fitoussi의 2009년 보고서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에서는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발전의 측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 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2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국민계정의 개선(Alternative indicators from national accounts), 둘째, 삶의 질(Quality of life), 셋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첫째 축의 내용은 국가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 수단인 국민계정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통계 체계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 축은 모든 통계의 궁극적인 평가 기준은 개인의 웰빙과 삶의 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축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성과와 미래의 개인 후생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둘째 축은 국가발전지표체계의 “삶의 질” 영역에서 다루어 지므로, 국가발전지표체계의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는 첫째 축과 셋째 축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¹⁾ 따라서 Stiglitz-Sen-Fitoussi 보고서에 비추어볼 때 성장과 안정 영역의 목적은 성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tiglitz-Sen-Fitoussi 보고서가 강조하는 지속가능 성장이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성장을 지속한다는 의미로서, 현재의 단기적 성장이 미래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제고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석유 채굴과 같이 자연자원 스톡을 훼손하면서 이루어지는 성장이나, 과도한 차입(미래로부터 현재로의 자원 이전)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성장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 성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EU가 공표한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MIP), Medium-Term Budgetary Framework (MTBF) 등은 경기변동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가능 성장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재정적자나 국내신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만일 그로 인하여 미래에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면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을

1) 첫째 축(Alternative indicators from national accounts)의 내용에는 국민계정상의 총생산보다 개인(혹은 가구)의 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계 소득, 소비, 부의 수준 및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소득, 소비, 부” 영역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므로,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는 개인(혹은 가구) 수준에서의 소득, 소비, 부 및 분배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거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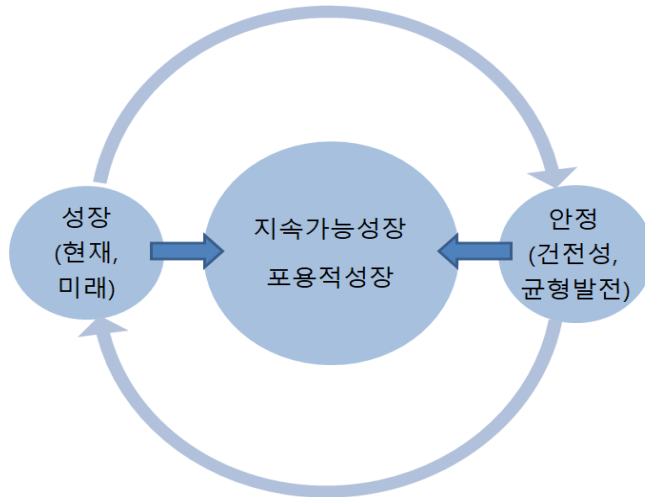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 내에 위험요인이 축적되지 않도록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이상의 내용 외에 공정한 소득분배 및 균형발전도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다. 국가간 자료에 대한 최근의 실증분석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들 간의 공정한 소득분배는 정치적 안정과 장기적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논리에 의하면 지역간 균형, 노동-자본간 소득분배의 균형,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축소 등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충격에 대한 경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임으로써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tiglitz-Sen-Fitoussi 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의 정의로서 자연자원, 인적자본, 물적자본, 사회적자본 등 여러 가지 “스톡”의 보존과 증가를 들고 있는데,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정치적 안정은 사회적자본의 보존 및 증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²⁾의 개념을 보더라도 OECD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창출하고, 금전적 비금전적 번영의 배당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World Bank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 영역의 노동가능 인구에게 고르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균형발전”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성장과 안정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영역의 구성 및 지표의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장과 안정 영역의 개념적 틀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다. Stiglitz-Sen-Fitoussi의 지속가능성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건전성과 균형발전의 내용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포용적 성장은 성장과 균형발전(분배)을 동시에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WHO의 Glossary of Life-course Terms(2015)에 의하면 포용적 성장이란 “A concept that advances equitable opportunities for economic participants during economic growth with benefits incurred by every section of society”라고 정의된다.

[그림 3] 성장과 안정의 개념



한편 최근의 인구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구조적 변화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이슈들을 유발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생산요소의 확대와 후발주자의 이점 등을 통해 장기간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만성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저성장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질적 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므로, 앞으로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먼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전체 노동력 중에서 노인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평균적인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 노동력은 청장년 노동력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술진보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고령화 자체가 노동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 및 생산성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오히려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Acemoglu (2017)).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성의 지표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산업의 등장과 기술의 발전은 가치의 생산과 분배를 어떻게 통계화할지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국민계정 체계 하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상품이나 공유 경제를 통한 생산의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새로운 산업 분야의 생산 가치를 통계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성계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또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AI나 로봇과 같이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 및 자본이 일반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자본-노동의 대체가능성이 높아지면 자본 축적에 따라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인들간의 인적 분배가 아닌 거시적 차원에서의 기능적 분배에 관한 이슈이지만, 실제로 자본소득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적 분배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면이 있다. 앞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추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안에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여가 및 가구나 생산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여가와 가구나 생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어떤 부문들이 취약부문이나 중점부문으로 대두될지, 그리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생산함수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들을 투입 생산요소와 생산성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이 가운데 특히 생산성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지표들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로서 금융건전성, 재정건전성, 균형발전의 개념과 관련 지표들을 정리한다. 2절에서는 인구

6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취약/중점 부분을 논의한다. 3장에서는 2장의 논의에 기초하여 성장과 안정 영역에 관한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한다. 4장에서는 성장과 안정 영역의 통계지표들에 대한 개선방안과 실행계획을 정리한다.

제2장

성장과 안정: 개념 및 사회적 이슈

제1절 성장과 안정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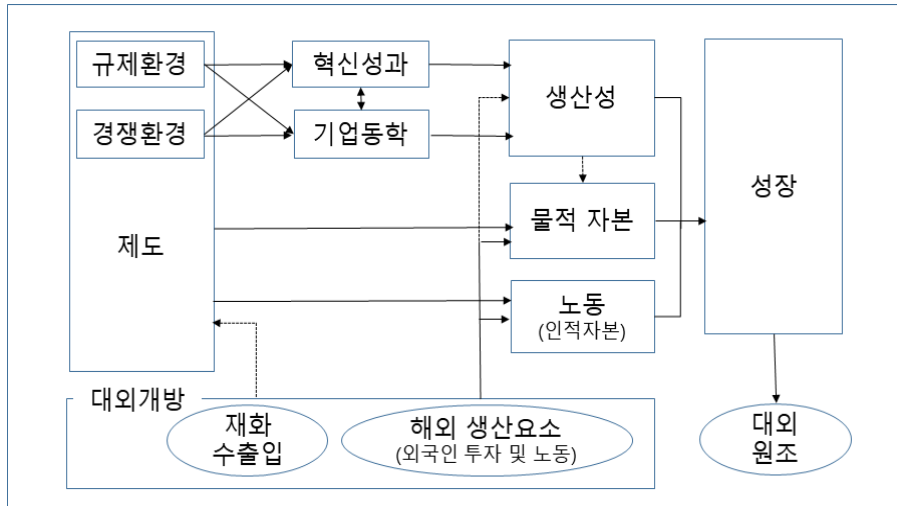
1. 성장 및 생산성

일반적으로 경제 전체의 총생산은 생산성, 노동, 자본 등의 함수로 나타내어진다. 즉 $Y = F(K, L)$ 과 같이 총생산(Y)는 경제 내의 자본스톡(K)과 노동(L)의 크기, 그리고 이를 결합하여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기술 및 생산성(F 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전체 생산량의 증가로 정의되는 “성장”이 미래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의 결정요인인 노동, 자본, 생산성이 증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과 제도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노동과 자본의 단순 투입을 통한 성장과 생산성 증가를 통한 성장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요소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아울러 글로벌화된 경제환경 하에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은 국내 요인만이 아니라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외국과의 교역 및 생산요소의 이동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술의 공유를 통해서 생산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

성장과 생산성에 관한 이상의 설명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 성장과 생산성



주: 실선은 직접적인 영향을, 점선은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노동과 자본

노동의 양적·질적 증가는 성장을 지속하는 데에 중요하다. 노동의 양적인 측면은 인구 규모 및 증가율, 연령구조,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와 관련된 지표들은 대부분 “고용과 노동” 영역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 좀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노동의 질적인 측면은 교육 및 훈련 등에 의한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교육비 비율이나 사교육비와 같은 지표들이 “교육”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성장과 관련된 인적자본은 학교 교육뿐 아니라 직업 훈련, 직무 교육 등도 포함되며, 교육의 비용보다는 결과물과 좀더 가까운 개념이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노동 및 인적자본이 물적자본과 결합하여 생산이 이루어진다. 인적·물적자본을 더 많이 가진 근로자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일인당

생산은 일인당 자본의 양과 비례한다. 물적자본은 주로 기업의 투자에 의해 축적되지만,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간접자본 역시 중요하다. 최근에는 유형 자본 이외에도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개발비 등 무형 자본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생산성

생산성이란 생산요소 한 단위 투입에 대해 얼마만큼의 생산량이 도출되는가를 의미하는 변수며 개인, 기업, 국가의 생산역량에 대한 기술적 수준을 나타낸다. 생산성에는 노동 한 단위에 대한 생산량을 의미하는 노동생산성, 자본 한 단위에 대한 생산량을 의미하는 자본생산성 등 각 요소에 대응하는 요소생산성을 지칭하는 개념들이 있다. 이러한 요소생산성과는 달리 모든 생산요소를 감안한 조합을 구성하고 생산요소 조합 한 단위에 대한 산출량을 총요소생산성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요소생산성은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생산역량에 대한 기술적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총요소생산성 개념이 이상적인 생산성 지표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생산요소 조합을 정확히 측정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산성지표로 노동생산성이나 자본생산성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한 명당 생산성이나 근로시간 한 시간당 생산성으로 측정한다.

생산성이 높을수록 주어진 자원으로 많은 산출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대내외적 경쟁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개선을 의미한다. 국가가 노동과 자본 등 국가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보다 생산성이 높다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 지속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성은 성장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자 국민소득에 큰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국가발전과 개인의 경제적 삶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국가발전지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성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의 경우 긍정적 외부효과가 없다면 한계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자본의 축적을 통해 계속 소득수준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의 경우 인적 자본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부분적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노동력의 증가가 경제 전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반면 일인당 소득수준의 향상에는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수준의 향상이 수반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이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 국가의 생산역량을 나타내는 국가의 생산성은 결국 생산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역량에 대한 기술적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해당 국가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생산성으로 파악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국가의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수준의 지표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기업의 혁신노력 및 성과들이 중요하며 국가적으로는 기업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규제환경, 시장에서의 경쟁 등 외부적 환경들이 있다.

기술 혁신은 직접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므로, 많은 국가에서 연구개발(R&D)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연구개발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입(투자규모)보다는 특허출원 등 연구개발의 성과가 기술 혁신과 좀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기술 혁신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지려면 실제 생산 과정과 관련하여 개발, 적용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경제에서 기업혁신이 우리경제발전의 주된 동력임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우리경제의 쟁점은 혁신적 기업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적절히 자원배분이 돌아가 자원재배분의 효율성을 이루는데 있다. 다시 얘기해서 기업생태계의 생산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끊임없이 진입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경제 내 기업들 중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작아지는 기업생태계 조성

이 필요하다. 최근 국가간 혁신과 성장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이러한 기업동학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한 경제의 제도는 기술 혁신에 비해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도는 경제활동의 게임의 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의 경제적 유인 구조를 결정짓게 된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지며, 동일한 기술 혁신이라도 각국의 제도 차이에 의해 실제 생산과정에서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이루어졌으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생산성의 향상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빨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생산, 유통, 관리 체계가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 기술과 결부된 이해관계로부터의 저항으로 인해 변화가 쉽지 않다. 제도적으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국가에서 새로운 기술의 채택 및 활용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의 규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국가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데 유리하다. 규제는 사회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생성되지만, 과도한 규제는 생산과정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인가 및 인증 등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되어 오히려 시장이 생성되고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공급자들의 시장진입 억제수단으로 변질되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생산성 개선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발전의 성숙 단계에 진입한 국가일수록 새로운 사업영역이 줄어들고 기존 영역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침해한 갈등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과도한 규제로 성장잠재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규제환경은 질적이고 정성적인 측면이 강하여 규제환경을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 외에 제도는 노동과 자본의 축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권의 보호가 잘 이루어진 나라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경제활동에의 참가도 높을 수밖에 없다. 다른 예로 차별이나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담보하는 법제도가 갖추어진 나라에서 자원이 낭비되거나 비효율

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국제 교역이나 생산요소의 이동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부터 기술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경로가 된다. 국제 교역을 위해서는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게 되며, 세계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기회를 얻게 되고, 다른 국가의 재화 및 서비스와의 경쟁 압력을 이용하여 국내 독과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생산요소의 이동을 통해 국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산요소를 보충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의 고급 인력뿐 아니라 자본 및 재화에 체화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기술 및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폐쇄경제보다 개방경제의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과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거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서 한 국가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원조 수혜국과의 우호적 관계 수립 및 시장 개척을 통하여 원조 공여국의 경제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안정

금융안정(건전성)

금융안정 혹은 금융건전성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해당한다. 금융안정의 개념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 등으로 구성)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든 거시경제적 위험은 금융시장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금융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움직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은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또는 자금중개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예컨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는 금융시스템에 참가하여 필요 자금을 조달하거나 여유자금을 운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에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도 영향을 받게 되며, 그 결과 거시 경제적 성과도 저조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인해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된다면 가계의 저축 및 소비활동과 기업의 투자, 고용, 생산 활동 등도 영향을 받게 되며, 그 결과 소비, 투자, 고용, 생산 등의 거시 경제적 성과도 부진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자금중개기능의 위축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경기침체의 폭이 깊어질 뿐 아니라 경기침체 이후 GDP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더라도 잠재성장수준은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 즉 심각한 금융 불안은 1인당 잠재 GDP 수준 또는 소비 수준의 영구적인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적 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안정은 거시적인 경제적 성과와 관련될 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경제적 기회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개인들은 금융시스템 참여를 통해 필요한 금융자원을 조달하거나 여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기능은 주어진 경제적 제약을 벗어나 생애가용자원의 활용을 가능케 하며, 경제적 기회의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조달 및 자금회수 방식을 통해 새로운 기업 및 산업의 등장과 퇴출을 용이하게 하며,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자금공급자인 채권자와 주주가 자금이용자인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통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하게 된다.

금융안정은 이처럼 경제적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금융안정이 훼손될 경우 가계 및 기업의 활동도 위축되며, 심각할 경우 개인 및 기업의 파산도 증가할 수 있다. 금융위기 시 개인들이 겪게 되는 개인파산, 보유주택 매각, 실업 증가, 소득 감소 등의 사건은 기본적인 생계 및 경제적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만, 건강악화와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기도 하며, 사회·정치적 불만과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재정안정(건전성)

정부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집행하며

다양한 차원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전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크게 자원배분(allocation)의 측면, 분배(distribution)의 측면 그리고 경제안정(stabilization)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맡겨 두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가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 및 서비스(이하 공공재)를 직접 공급한다. 공공재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 및 서비스로 경합적이고 배제성이 있는 사적재화와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사적재화는 시장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반면 공공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 및 서비스는 도로, 공원 및 의무 교육 서비스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다. 사적으로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는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또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환경도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발 등 환경을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에 대하여 세금 및 보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효율적인 수준의 환경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의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분배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에 의하여 형성된 분배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 때문에 분배구조는 시장에만 맡겨둔 경우에 비하여 개선될 것이다. 예컨대, 시장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따라 가계의 소득 분배가 결정된 가운데 일부 계층의 후생수준이 매우 악화되어 최소 수준의 삶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세입·세출 정책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 정책을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이라고 한다. 정부의 재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는 취약계층에 직접 현금 및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전지출을 통한 정책과 누진세제 등에 기초한 세입정책이 있다.

세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경기변동을 안정화시키는 정책(stabilization policy)이다. 세출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부진한 경우에는 세출을 늘림으로써 총수요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하고,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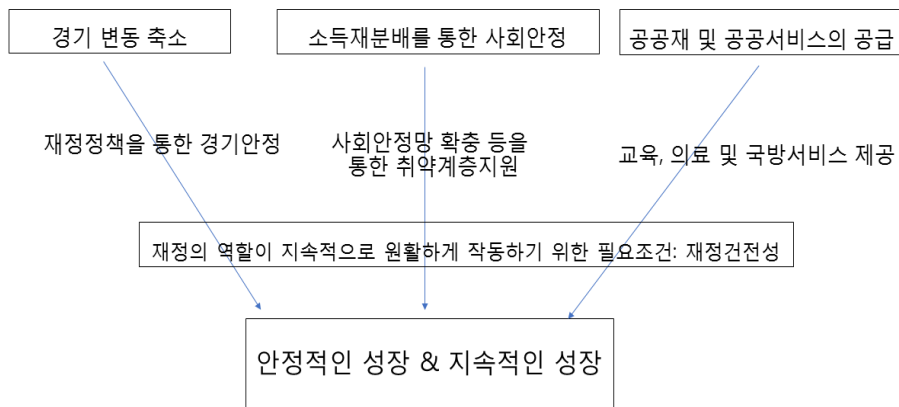
로 경기가 지나치게 활발하여 과열된 경우에는 세출을 줄임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여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는다. 한편 세입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부진한 경우에는 가계의 소득과 기업의 이익이 줄게 되어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경기가 부진한 경우에는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환급을 늘리는 등의 세입정책이 경기안정화 정책이 된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된 경우에는 가계의 소득과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여 세입이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경기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거나 세금환급 규모를 축소하는 세입정책이 경기안정화 정책이다. 이를 종합하여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경기안정화 재정 정책은 경기가 부진한 경우에는 재정수지(=세입-세출)를 축소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진작시키려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며, 경기가 과열된 경우에는 재정수지를 확대함으로써 총수요를 위축시키는 긴축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누진세제 및 실업급여 등과 같은 사회 안전망 제도를 자동 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경기 역행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화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 소득이 높아지는데, 누진세제는 소득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임으로써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자동적으로 유도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악화되어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드는 정도보다 더 큰 폭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도 한다. 실업급여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경기가 악화되어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에게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제도들을 자동안정화 장치라고 한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재분배적 역할도 한다.

비교적 진폭이 크지 않은 예측가능한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이라고 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매우 큰 폭의 경기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재정의 주요 역할이다. 2000년대 후반의 미국 금융위기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활용된 주요 대응 수단 중의 하나가 재정을 투입하여 부실한 금융부문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부실화된 금융 부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이라는 재정이 투입된 바가 있다. 이렇듯 재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5] 재정의 역할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재정 정책의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수행,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입 등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세입만으로 충분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채무(debt)를 발행함으로써 조달해야 하는데, 그러한 채무는 언젠가 정부가 갚아야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의 세입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은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국가채무(또는 국가부채) 만으로는 재정위험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해서는 다양한 발생 가능한 사건들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암묵적인 우발채무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암묵적인 우발채무(implicit contingent liabilities)란 명시적인 정부의 부채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재정위험을 말한다. 정부와 관련된 소송중인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부담,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채부불이행에 따른 중앙정부의 부담, 공기업 부채 그리고 사회보장기금의 파산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이 그에 해당된다. 이러한 재정위험의 파악과 그에 대한 대비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균형발전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달성되더라도 경제 내 여러 부문 간의 격차가 심하다면 그러한 사회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부문간 격차는 대기업 vs. 중소기업, 제조업 vs. 서비스업, 수도권 vs. 비수도권, 자본소득 vs. 노동소득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부문간 격차에 대한 고찰은 개인들 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에서 중심이 되는 이슈는 기업 규모에 따른 성과의 양극화에 있다. 생산성 및 임금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지난 수년간 그 격차가 다소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격차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과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편인 반면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은 저부가가치 저생산성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업 간 생산성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구조 양극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의 약한 경쟁력에 기여하는 원인은 다양하나 이러한 이중구조는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의 높은 생산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분야에 자원이 전략적으로 집중됨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나타나게 된 면이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은 한 기업에 고착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 옮길 수 있으며, 항상 기업은 퇴출되고 다른 혁신기업이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간 양극화 자체보다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고생산성 분야로 이전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과 장애물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고생산성 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가도록 하는 방안이 정책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으로 인력, 자본, 생산이 점차 집중되고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논리적 근거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들 수 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이 해당 지역에 속한 생산기반에 좌우된다는 점과 노동의 지역간 이동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노동의 이동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생산과 생산성의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면 이는 곧 소득의 지역간 격차로 이어질 것이고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성장과 생산성의 지역간 격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격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개인(혹은 가구)들은 노동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자본소득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혹은 가구)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고 자본소득 분배율이 상승하는 것도 개인간 소득분배의 악화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제2절 새로운 경제적 이슈와 취약/중점 분야

1.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경제적 이슈

인구 고령화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노동과 자본의 빠른 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만성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거시경제지표들에 대한 해석 역시 이를 반영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실질 GDP 성장률 3%는 2010년 이전까지는 경기침체를 의미할 정도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취업자 증가수와 같이 인구 규모나 연령구조의 변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지표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저성장 국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할 것이다.

결국 잠재성장률의 제고와 관련하여 향후 생산성 향상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전체 노동력 중에서 노인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평균적인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고령화 자체가 노동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 및 생산성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오히려 생산성을 제고할 가능성도 있다(Acemoglu (2017)).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성의 지표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와 기술 혁신을 좀 더 엄밀히 측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제도적 요인 중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인을 식별하고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의 또 다른 문제로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현 세대가 현재의 정책을 결정하는 반면 정책 결정에 따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에서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현 세대에 비하여 미래 세대는 결정된 재정 정책으로 얻는 혜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 되기가 쉽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대간 자원배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간 자원배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 등을 통하여 자원이 세대 간에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이전계정(NTA) : 국민 전체의 노동 소득과 소비, 공적 이전과 가구내 및 가구간 사적 이전 등을 연령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통계표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정부재정의 운용, 재정부담의 세대별 재배분, 세대간 공·사적이전 등의 지표가 되는 국민이전계정(NTA) 개발 필요성 대두

- 국민계정체계(SNA)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세대간 이전을 측정하여 연령집단 간 경제적 자원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국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미래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이와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 가능

4차 산업혁명

최근 산업의 구조변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와 결합한 IT기기 및 서비스 부문에서 일대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최근 기술적 산업변화의 트렌드를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실제로 산업혁명으로까지 발전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각국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적 기술도입 촉진정책, 기술도입에 대응한 규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 등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시대의 기업조직 및 제도의 규범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수용하기 어렵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적 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 및 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 영역을 열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국가의 생산성이 제고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의 도입 정도, 법제도적 준비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량화된 객관적인 지표로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향후 객관적 지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기술의 융복합과 같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무형자산의 측정기법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술혁신의 경우에도 투입 측면인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통해 파악하기 보다는 성과 측면에서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한 특허 건수가 아니라 특허의 가치까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 상업화되기 어려운 기초과학의 발전이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 및 변동성의 확대

다수의 연구들에 의하면 지난 수십년 동안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왔으며 금융위기의 발생 빈도도 높아져 왔다. 또한 금융 분야의 위험이 발현되고 전개되는 방식도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체계도 도전을 받아왔다. 과거 간과하였던 위험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7-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 상의 위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위험관리 체계의 재설계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금융건전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큰 변화와 함께 기존 지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별 금융기관 건전성에 초점을 둔 금융규제·감독만으로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예컨대,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등에 초점을 둔 기존 바젤Ⅱ 규제체계에 대해 시스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으며, 이후 시스템적 위험과 경기순응성까지 고려하여 한층 강화된 바젤Ⅲ 규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거시감독자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요컨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 및 규제·감독체계도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별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컸었던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택관련 대출의 급증과 주택시장 과열이 위기의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2011-13년의 유럽 재정위기에서는 정부부채와 대외채무가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 발생한 수많은 금융위기 사례에서 이미 지목되었었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대내·외 부채 관리 실패가 최근의 전 지구적 위기 사례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주요 경제주체의 허술한 부채 관리와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자산 확대 등은 금융건전성을 위협하는 대표적 요인이었음을 수많은 역사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 내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부문에서 위험이 급격히 확대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에서도 비교적 강한 규제가 적용되었던 금융기관 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었던 금융기관에서 급격한 대차대조표 확대와 과도한 위험추구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02-03년 카드사태, 2007-08년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던 금융기관

에서 과도한 위험 추구하고 부실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 가계부채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던 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 영역을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으로 일컬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건전성 관련 규제·감독체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다수 나라에서 해당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위험의 생성·확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던 기존 규제·감독체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규제와 규제를 집행하는 감독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가의 금융 규제·감독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작성·공표하기도 한다.

한편 과거 국내·외에서 발생한 금융 불안 사례는 단일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한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험한 금융시장 불안 중 가장 대표적인 2003-04년의 소위 카드 사태가 그러하다. 해당 사태는 신용카드사의 위험 추구행태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계 차입비용 급증에 따른 취약 부채가구 증가, 신용제약 완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기조에 따른 건전성 감독 소홀, 당시 국내 모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에 따른 회사채 시장 불안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사태는 대규모 개인파산과 함께 자금중개기능의 위축과 민간소비 침체를 동반하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저금리기조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주택시장 거품, 대마불사 풍조와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 느슨하고 무책임했던 규제·감독체계,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팽창,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와 복잡성 증가 등이 그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주택시장 과열, 금융규제·감독체계의 품질

문제, 시스템적 위험의 누증, 그림자 금융의 확대 등이 위기의 원인으로 함께 지적되고 있다. 당시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되자 대규모 가계파산과 대형금융기관 부실을 경험하였으며, 경제전반에 대한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례적인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상과 같이 과거 위기 사례에 대한 고찰에 의하면 금융 불안 발생은 단일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한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체계도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최근 한국 경제는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이례적 수준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양상도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적인 측면에서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는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어 거시금융 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가 학계 및 정책담당기관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확대와 일부 자산의 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 등 실물경기 부진은 금리인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 관찰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일부 자산시장의 과열 양상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재정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보듯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입내 세출이라는 재정규율이 폐기된 이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어 가면서 국가채무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국가채무 수준이 수용 가능한가에 관한 재정 지속가능성 이슈는 향후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지난 수십년동안 각 개인의 소득 변동성 또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소득 변동성의 확대는 소득위험의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횡단면적 소득분배의 악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소득위험의 확대 및 소득분배의 악화는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다양한 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소득위험에 대처하고 재분배정책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

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세입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세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이 점점 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세저항 확대를 막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마련을 위하여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에 따라 어떠한 복지 및 재분배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2. 구조적 변화와 취약/중점 부문

인구 고령화는 전반적으로 성장의 둔화와 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특히 노인집단을 중심으로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빈곤의 일차적인 원인은 저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능력이 낮은 노인집단은 그만큼 빈곤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노인들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이나 부(-)의 저축을 통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소득 외에 자산이나 소비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및 기술진보와 관련하여 먼저 논의될 수 있는 취약 집단은 미숙련 근로자들이다. 숙련편향적(skill-biased) 기술변화와 세계화로 인해 선진국 미숙련 근로자들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최근의 기술변화가 숙련편향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숙련근로자와 미숙련근로자 간의 생산성 차이가 확대되고, 이는 임금 차이로 나타났다. 더욱이 세계화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미숙련 근로자들이 국제 생산과정에 편입됨에 따라 선진국 미숙련 근로자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기술변화의 방향성과 세계화라는 추세를 개별 국가 차원에서 바꾸기 어려우므로, 주된 대응은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미숙련 근로자의 생산성을 개선하거나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빈곤 및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는 『소득·소비·자산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체계 진단연구』(2017)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기술진보와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기술진보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발전이 주로 정형화된 직무를 기계가 대체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직무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IBM의 Watson은 의료부문에선 진단과 처방을 수행하고 있고, 로보 어드바이저에 의해 운용되는 자산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에 의해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신기술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며, 신기술과 보완적 관계를 갖는 일자리의 증가가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일자리의 감소보다 크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동화로 어떤 일을 더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자동화되지 않은 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Autor(2015)는 ATM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은행 창구직원이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예로 들고 있다. ATM의 도입으로 은행지점당 은행원 수는 줄어들었지만, 은행지점당 운영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전체 은행원의 수는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일자리의 직무가 변화하고 고용형태나 근로형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사의 경우, 지식전달자로서의 직무는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지만, 토론을 주도하거나 학생과 소통하는 멘토로서의 직무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직무의 변화는 학교교육 이외에도 직업생애 동안 지속적인 재학습이 필요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20년 동안 배워서 30년 일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업생활을 하는 동안 직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학습을 장려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재학습 과정에 포함되지 못해 도태되는 취약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처럼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학습을 좀 더 엄밀히 측정하는 방향으로 통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와 같이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는 일자리(job)의 개념에서 특정의 일(work)에 대한 서비스만을 계약하는 형태로 근로형태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소위 각 이코노미(gig economy)로 불리는 프리랜서 또는 프로젝트 형 고용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온라인 근로, 재택근로, 원격근로 등이 확산되면 근로와 여가의 시간적·공간적 구분이 모호해지며, 일에 대한 보상도 투입시간에 비례하는 형태가 아니라 성과에 근거한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처럼 획일적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게 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하면서 계약관계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고용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적인 측면에서도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고용 및 임금 등 관련 통계의 집계 방식도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조적 변화로 발생하는 모든 취약부문/집단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진보가 가속화되면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혁신기업들이 등장하는 동시에 생산성이 낮고 생존가능성이 낮은 기업들도 다수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취약 기업들이 정부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힘입어 생존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정리되고 여기에 배분되었던 자원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재배분되는 과정에서 기업생태계가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낡은 기업의 퇴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부문을 살펴보면 진입률과 퇴출률이 모두 점차 하락하고 있어서 혁신적 기업의 진입 가능성이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3장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제1절 외국의 사례

1. 해외의 국가발전지표

본 연구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성장과 안정’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는 국가주요지표 체계에 속한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에 관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의 지표체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해외의 지표체계는 나라마다 매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마다 지표체계 개발에 있어 측정하고자 하는 주요 개념 및 측정단위가 달라져 온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지표 연구에 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국가주요지표 수립 당시 수행된 석현호 외(2013)의 연구에서 잘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석현호 외(2013)에서 기술하고 있는 해외의 지표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요약하고, 해외의 국가주요지표 중 우리의 ‘성장과 안정’ 영역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³⁾

가. 국가발전지표의 등장 배경⁴⁾

‘국가주요지표’ 또는 ‘국가발전지표’란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발전(progress)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일련의 선별된 지표들로서, 국민의 웰빙(well-being)과 국가발전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3) 지표 체계내의 영역별 분류 및 명칭이 나라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 포함하고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장’에 대해서는 총계적 관점의 소득, 즉 국민소득을 주요 측정지표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민소득을 포함하는 해외의 지표들은 주로 ‘경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4) 국가주요지표의 등장배경에 대해서는 석현호외(2013) 연구의 제2장의 내용 및 선행연구들을 요약·보완하여 기술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요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웰빙 또는 발전에 대한 정의(definition)뿐만 아니라 개별 지표들의 내용과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말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다양한 명칭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측정대상 역시 ‘살기 좋은 나라’의 개념에서 ‘사회 또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측정 개념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여년 동안 여러 국가들이 개발해 온 지표들의 명칭도 삶의 질 지표, 웰빙 지표, 사회의 질 지표, 지속가능성 지표, 국가발전 지표 등으로 변화해 왔다.

먼저,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복지와 부(wealth)의 배분에 관한 논의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본다(Noll, 2002).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태동하였으며(Noll, 1p), 이후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미국에서 경제적 풍요를 넘어 진정한 좋은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다.⁵⁾ 삶의 질 논의가 유럽에서는 복지와 자원 배분의 문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유럽의 삶의 질 연구는 사회적 차원에서 자원의 분배와 국민의 객관적 생활수준에 초점을 둔 반면, 미국의 삶의 질 연구는 개인적 차원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 다만, 삶의 질에 대한 접근 방식이 주관적이던 객관적이던 관계없이 측정단위가 대부분 ‘개인’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사회적 수준의 관계성이나 국가수준의 거시적 측면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대한 개념은 삶의 질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즉 사회적 맥락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의 질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사회, 경제, 문화적 부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복지를 누

5) OECD(1973)의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 및 UN(1989)의 ‘Handbook on Social Indicators’를 들 수 있다.

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사회의 질은 네 가지 기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데, 첫째, 사회적 인정 또는 존중, 둘째, 제도적 차원의 법질서·인권·정의, 셋째,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의 개방성 정도, 넷째, 개인의 참여 역량이다.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 간, 그리고 개인과 사회, 공동체와 조직 간에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의 질 개념은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를 지표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에 따라 사회지표체계에 사회통합 영역이 포함되게 되었다.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발전지표는 1987년 U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보고서에서 처음 거론되었다.⁶⁾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미래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그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다차원적 개념을 포함하게 되었으며,⁷⁾ 경제, 사회, 환경, 개인, 조직 등 서로 다른 시스템들의 균형과 통합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범주가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정의 역시 '자연 자원의 서비스와 질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의 순이익을 가져오는 것', '자연 자원의 투입과 산출물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역량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경제발전, 생태보존, 삶의 질 중에서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방향성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삶의 질의 총합으로서 사회발전에 치중하였다면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지표 연구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주요지표 또는 국가발전지표는 1990년대 이후 그 동안 논의되었

6) UN의 브룬트란트위원회에서 발간한 종합보고서, Our Common Future.

7) Drexhage and Murphy(2010)에서 언급되었는데, 대체불가능성(irreplaceability),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수용력(carrying capacity) 등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 사회경제 체제와 생태체제의 탄력성(resilience), 미래상(futurity)의 개념들이 공통적이었다고 한다. 한석현호외(2013)에서 재인용하였다.

던 삶의 질, 웰빙,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을 도입한 국가수준의 지표 개발 노력을 통해 등장하였다. 작성되는 지표는 각 나라마다 지향하는 주요 개념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개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경제적 측면의 ‘발전(development)’ 개념이 국민의 삶의 질, 웰빙, 경제성장,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발전(progress)’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한 논의 이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발전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론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소위 ‘스티글리츠 리포트(Stiglitz Report)’라 칭하는 Stiglitz-Sen-Fitoussi(2009)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GDP를 넘어서 진정한 국가의 발전을 나타낼 수 있도록 경제적 성취, 국민의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표 체계를 제시하고 이러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통계 생산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주제 및 측정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적 성취(economic performance)의 측정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변화를 요구하였는데, 시장중심의 생산 개념에서 사람들의 웰빙 중심의 경제적 성취 개념으로의 변화, 그리고 투입(input)요인에서 결과(output)요인으로의 변화이다. 특히 결과요인의 중요성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결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강조하였다. 스티글리츠 리포트는 국가지표 연구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 및 국제기구의 국가지표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상을 요약하면, 1960년대에 등장한 삶의 질 지표는 유럽과 미국에서 다르게 발전되어 왔는데, 유럽은 복지와 자원의 배분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 지표에 관한 연구로 발전한 반면 미국은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여 주관적 지표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 측정단위는 유럽과 미국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단위였으므로 사회 또는 거시적 측면이 간과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사회의 질 지표는 삶의 질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지표체계에는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영역이 포함되었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다차원적이고 환경(생태보전) 측면을 중요시하며, 또한 경제 및 사회 발전

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거시적 차원의 국가발전 지표 연구를 촉발시켰다. 2009년 출간된 ‘스티글리츠 리포트(Stiglitz Report, 2009)’는 국가주요지표 또는 국가발전지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GDP를 넘어서 진정한 국가의 발전을 나타낼 수 있도록 경제적 성취, 국민의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 그간 논의된 개념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표 체계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물론 여러 국가들의 국가주요지표도 이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가주요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의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각 지표의 등장시기, 등장배경 및 주요 특징

	삶의 질 지표	사회의 질 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발전지표
등장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등장하여 각국으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7년 U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보고서에서 등장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의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대 이후 등장
등장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우주정책(America Space Program)을 계기로 경제적 풍요를 넘어 진정한 좋은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질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 사회적 맥락(관계)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들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한 의미의 국가발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 스티글리츠 Report(2009)는 이에 관한 체계적 대안을 제시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은 복지와 자원의 배분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중심으로 발달한 반면, 미국은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측정을 중심으로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 영역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지표화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사회, 환경, 개인, 조직 등 다차원적 개념을 포함 환경(생태보전) 측면 및 국가차원의 거시적 지표 중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논의된 삶의 질, 웰빙,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수준의 발전(progress)에 관한 지표

	삶의 질 지표	사회의 질 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발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단위는 공통적으로 개인단위 ▪ 사회 또는 거시적 측면 간과됨 			

나. 해외의 국가발전지표

다음의 <표 2>에서는 지표 유형별로 각국의 지표체계들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은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 여러 유형의 지표들을 작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국가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있는 나라로는 호주(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뉴질랜드(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 아일랜드(Measuring Ireland's Progress) 등이 있다.⁸⁾

삶의 질 지표는 그 측정 목적상 주관적 측면에 대한 지표가 많고 개인 혹은 가구 단위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의 국가발전지표와는 비교 가능성이 낮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은 국가발전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부문에 대한 지표 수가 적고 환경 부문의 지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본스톡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직접 비교가 어렵다.

한편, 앞의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삶의 질 지표, 사회의 질 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국가발전지표는 각각의 등장배경 및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면에서 다른 유형의 지표들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가발전지표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작성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지표들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Stiglitz 리포트(2009)도 국가발전의 종합지표가 경제적 성취, 국민의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지표에는 다른 유형의 지표체계에서 측정하고 있는 지표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러 지표체계들을 유형별로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여기서는 주된 특징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분류하였다.

8) 미국의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은 현재 미완성인 상태이어서 제외하였다.

[표 2] 종류별 각국의 지표

지표 종류	국가별 지표
삶의 질 지표	영국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일본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
	뉴질랜드 Quality of Life Project
	네덜란드 Life Situation Index
	호주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
	캐나다 Canadian Index of Wellbeing
	OECD How's Life Index
	EU Quality of life Indicator
지속가능발전지표	스위스 MONET Indicator System
	독일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미국 Sustainable America
	영국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캐나다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국가발전지표	호주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아일랜드 Measuring Ireland's Progress
	미국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 ^{주1)}
	뉴질랜드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

* 자료 : 석현호 외(2013) 및 각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작성.

주1) 미국의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작성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관련 포럼도 진행된 바 있으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2018년 현재까지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

2. 주요국 국가발전지표 사례 및 비교

가. 우리나라의 '성장과 안정' 영역 지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주요지표 중 성장과 안정 영역의 지표들을 살펴보고 이후 호주, 뉴질랜드 및 아일랜드의 지표 중 이와 유사한 영역의 지표체계를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주요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3개 부문, 총 1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과 안정' 영역은 12개의 주요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하위영역은 성장, 생산성, 성장가능성, 글로벌화, 건전성, 소득

불평등의 6개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주요지표는 여러 발전지표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성장과 안정 영역의 지표들은 모두 거시경제적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의 명칭(성장, 성장가능성, 글로벌화, 건전성, 소득불평등)들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선정되어 있다.

[표 3] 현행 우리나라의 국가주요지표 중 성장과 안정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성장	• 경제성장률	• 국내총생산	• 경제성장률
생산성	• 노동생산성 (시간당)	• 노동생산성지수 (1인당) •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기업영업이익률	• 노동생산성 (시간당)
성장가능성	• 총고정투자율	• 총고정투자증가율	• 총고정투자율
	• 창업률	• 벤처기업수	• 창업률
글로벌화	• 연구개발투자비율 (GDP 대비)	• 특허출원수 (인구 100만 명당)	• 연구개발투자비율 (GDP 대비) • 특허출원수
	• 수출입비율 (GDP 대비)	• 상대국별 수출비율 • 상대국별 수입비율	• 수출입비율 (GDP 대비)
글로벌화	•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 거주자해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 공적개발원조비율 (GDP 대비)		• 공적개발원조비율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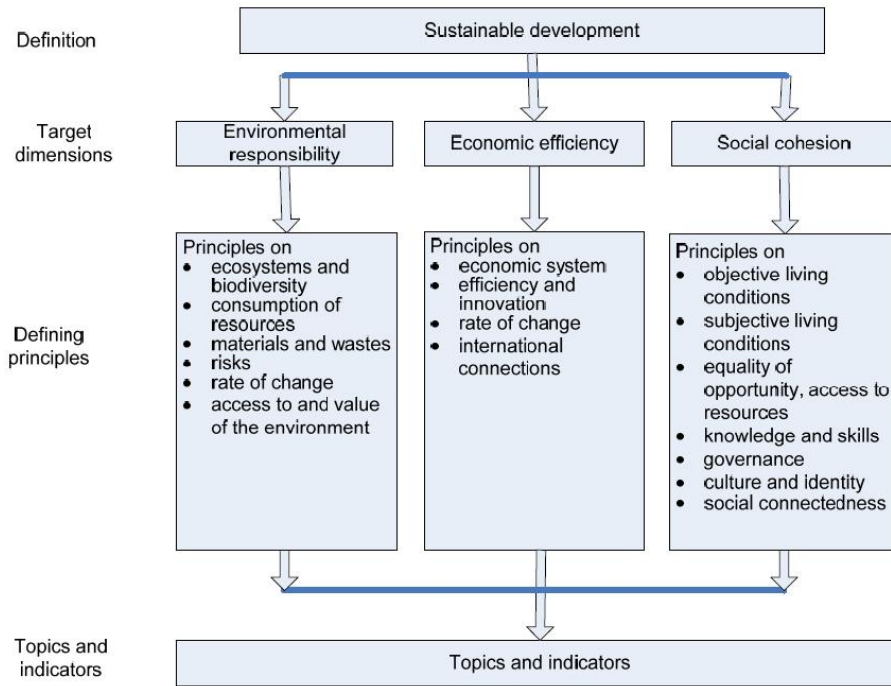
9)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주요지표를 최초로 작성할 때 각국의 지표들을 검토한 바, 호주의 국가발전지표(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가 가장 잘 짜여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석현호외 2013, 6p).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 국민부담률 • 정부지출비율 (GDP 대비) • 정부지출구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 일반정부부채비율 (GDP 대비) • 공공부문부채비율 (GDP 대비)	• 정부부채비율 (GDP 대비)
	• 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 대외채무비율 (GDP 대비) • 외환보유액비율 (GDP 대비)	• 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 대외채무비율 (GDP 대비)
소득불평등	• 지니계수	• 소득5분위배율 • 상대빈곤율	• 지니계수

나. 뉴질랜드의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

뉴질랜드의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는 지속가능발전 접근법에 의한 뉴질랜드의 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앞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된다. 이 프레임워크는 3가지 목표차원, 즉 환경적 책임성(Environmental responsibility),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의 3가지 목표 차원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각 목표차원별 정의원칙(defining principles)들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수립되었다.

[그림 6] 뉴질랜드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의 Framework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2008). Statistics New Zealand's framework for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뉴질랜드의 Measuring Progress는 이러한 정의원칙들을 측정할 수 있는 주제 및 지표들로서 15개 영역, 84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경제적 탄력성(Economic resilience)’과 ‘생활환경(Living conditions)’이 우리의 ‘성장과 안정’과 관련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표 4] 뉴질랜드의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 영역

	영역
1	인구(Population)
2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3	대기와 대기(Air and atmosphere)
4	물(Water)
5	토지 이용(Land use)

	영역
6	에너지(Energy)
7	수송(Transport)
8	낭비(Waste)
9	혁신(Innovation)
10	일, 지식 및 기술(Work, knowledge, and skills)
11	경제적 탄력성(Economic resilience)
12	생활환경(Living conditions)
13	건강(Health)
14	사회적 연결과 지배 구조(Social connection and governance)
15	문화와 정체성(Culture and identity)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2008)

경제적 탄력성(Economic resilience)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성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미래 세대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면서 건물, 장비, 운송 및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가 의존하는 자산의 자본 기반(the capital base of assets)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제적 탄력성 영역에는 이와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민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환경은 과거의 활동에 의해 축적되거나 고갈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러한 자본 기반(the capital base)을 침식해서는 안 될 것을 요한다. 생활 환경(Living conditions) 영역의 지표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선정되었다. 다음의 <표 5>에 경제적 탄력성과 생활 환경 영역에 속한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표 5] 뉴질랜드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의 세부지표

영역	지표
경제적 탄력성 (Economic resilience)	1 인당 총 자산의 실제 순 재고 (Real net stock of total assets per person)
	1 인당 실질 순 인프라 (Real net of infrastructure per person)
	1 인당 실질 고정자본투자

영역	지표
	(Real investment in fixed capital per person)
	수출수입에 대한 부채서비스의 비율 (Ratio of debt services to export earnings)
	수출의 다양성(Diversity of exports)
	정부 부채(Government debt)
생활 환경 (Living conditions)	1 인당 실질 국민 총 가처분 소득 (Real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person)
	1 인당 실질 가계 소비 지출 (Re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per person)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
	저소득층인구수(Population with low incomes)
	주택 구입능력(Housing affordability)
	생활의 물질적 기준에 대한 가구의 만족도 (Household satisfaction with material standard of living)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2008)

다. 호주의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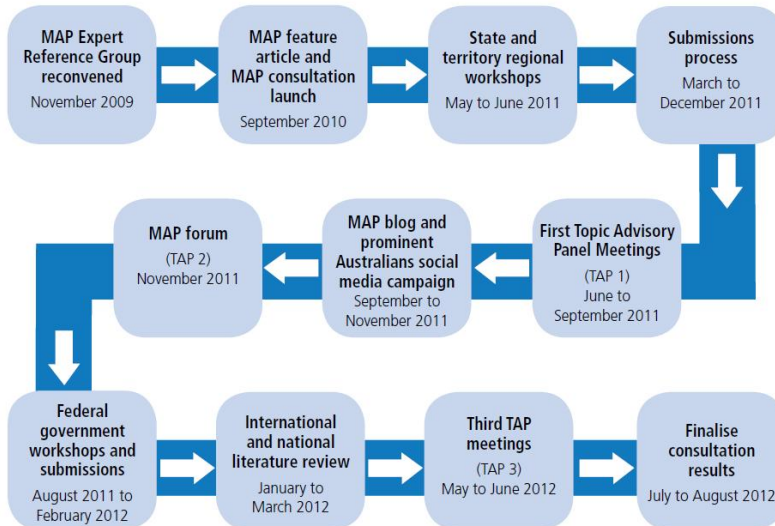
호주의 국가발전지표(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MAP)는 호주 국민의 삶의 발전(progress) 및 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관심에서 2002년 처음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MAP은 약 3년(2009년~2012년)의 기간 동안 호주의 발전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정·개편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는 4개 부문의 26개 영역, 120개의 하위영역(요소)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그림 5>에는 이러한 MAP의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요약되어 있다. 먼저 2009년에 전문가 그룹을 소집하여 2011년까지 여러 번의 자문회의 및 지역 워크숍을 실행하였고,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호주 국민으로부터 블로그와 SNS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시 연방정부 워크숍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다듬어지고 정리되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워크숍을 통해 자문하였고, 시민과의 상호작용은 블로그, 라디오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각 영역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경제 부문에는 번영(Prosperity), 복원력 있는 경제(A resilient economy), 생활수준 향상(Enhancing living standards), 공정한 결과(Fair outcomes) 등의 영역이 설정되었다. 각 영역은 다시 하위영역들로 나

뉘어지고, 각 영역과 하위영역별로 주요지표가 선정되어 있다.

한편 사회 부문은 건강, 가정, 배움과 지식, 관계, 안전, 공동체 연결과 다양성 등의 영역을 담고 있다. 환경 부문은 건강한 자연환경, 환경에 대한 이해, 환경보전, 건강한 환경, 지속가능한 환경, 함께 일하기 등의 영역들로 구성되며, 거버넌스 부문은 신뢰, 효과적인 거버넌스, 참여, 공론, 권리와 책임의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7] 호주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의 의견수렴과정



자료: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2013)

호주의 MAP는 영역의 구분 및 지표 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주요지표와 가장 유사한 지표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은,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그에 관한 지표 또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표체계 내에 그 개념을 그대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번영(prosperity)' 영역의 하위영역인 '혁신(innovation)'에 대해서는 '지표 없음(data gap)'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 없음(data gap)'에 대해서는 관련 개념이 아직 측정할 만큼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거나, 개념은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측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거나, 관련한 충분한 자료가 없거나, 측정

이 1회만 이루어져 개선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MAP은 국가사회가 나아가는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화의 양상을 대시보드(dash board) 형태로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지표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큰 변화가 없을 때는 노란 색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변화로 해석될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그림 8] 호주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의 대시보드



[표 6] 호주 Measures of Australia' s Progress의 경제 부문 영역 및 하위영역 주요지표

영역	영역 주요지표	하위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번영 (Prosperity)	순수 저축과 일인당 실질 순재산의 기타 변화 (Net saving plus other changes in real net wealth per capita)	효율적인 인력(Efficient workforce)	노동력 과소고용율(Labour force underutilisation rate)
		자원(Resources)	다중 요인 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
		접속하다(Access)	실질 단위당 노동 비용(Real unit labour costs)
		혁신(Innovation)	- 지표 없음(data gap)
		완료(Completion)	- 지표 없음(data gap)
		규제(Regulation)	- 지표 없음(data gap)
탄력적 경제 (A resilient economy)	다중 요인 생산성 (Multifactor productivity)	유연성(Flexibility)	평균 실업 기간(Average duration of unemployment)
		보험(Insurance)	- 지표 없음(data gap)
		안정(Stability)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금융 건전성(Prudent finance)	총 자본 기반 비율(Total capital base ratio)
		정보(Information)	- 지표 없음(data gap)
생활수준 향상 (Enhancing living standards)	1 인당 실질 순국민가처분 소득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구매력(Buying power)	1 인당 실질 실질 순 국민 가처분 소득(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정부(Government)	일반 정부 저축률(General government saving ratio)
		간결한(Economic)	1 인당 비금융 자산(Non-financial assets per capita)
		환경(Environmental)	- 지표 없음(data gap)
		인간(Human)	경제활동참가율(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혁신(Innovation)	혁신 기업에 의한 제품확장률(Product expansion by innovative businesses rate)
공정한 결과 (Fair outcomes)	중간소득 가구 대비 저소득가구의 소득비율(Ratio of income received by low income households relative to	생활 수준(Living standards)	1 인당 실질 실질 순 국민 가처분 소득(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공평(Equity)	중간소득가구 대비 저소득가구의 소득 비율
		불리(Disadvantage)	(Ratio of income received by low income households relative to middle income households)
		기부(Contribution)	주민세율(Resident taxation rate)

영역	영역 주요지표	하위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middle income households)		

라. 아일랜드의 Measures of Ireland's Progress

아일랜드의 Measures of Ireland's Progress(MIP)는 사회, 경제, 환경, 교육 및 건강의 5개 부문에 대한 아일랜드의 전반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48개 영역의 108개 지표를 포함한다. 지표의 유형은 대부분 아일랜드의 국내지표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지표(EU)로 제시되고 있다.¹⁰⁾

[표 7] Measures of Ireland's Progress의 경제부문 지표

지표	지표유형
국내 총생산 및 국민 총소득	아일랜드
현재 시장 가격의 GDP 및 GNI	EU
GDP 성장률	EU
구매력 기준 1 인당 GDP	EU
일반 정부 총 부채 (GDP 대비)	EU
재정수지 (GDP 대비)	EU
일반 정부 총 지출 (증가율)	아일랜드
총 고정 자본 형성 (GDP 대비)	EU
경상수지 (GDP 대비)	EU
상품 및 서비스 수출 (GDP 대비)	EU
재화와 서비스 수입 (GDP 대비)	EU
조화 소비자물가지수	EU
간접세를 포함한 개인 가구의 최종 소비 비교 가격 수준	EU
성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 비율)	EU
근로시간당 구매력 기준 GDP 지수	EU
성별 실업률	EU
성별 장기 실업률 (1년이상)	EU
실업자 가정에 거주하는 18-59세 인구 비중	EU
주택공급 ^{주1)}	아일랜드
주택용자	아일랜드

주1) 영문 지표명은 'ESB connections'이며, 전기회사인 ESB Networks가 신규로 전기를 연결한 주택의 수를 측정함.

* 자료: 아일랜드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cso.ie/en/releasesandpublications/ep/p-mip/mip2016/app/>

10) 아일랜드의 MIP은 2003년에 10개 영역, 49개 하위영역, 109개 지표로 최초로 작성되었다가 2012년 개편되었다.

마. 국가별 비교

이상에서 검토된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의 국가발전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과 안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만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우리의 국가주요지표와 비교할 때, 뉴질랜드의 국가발전지표에는 생산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뉴질랜드의 국가발전지표는 성장 또는 성장가능성 보다는 지속가능발전 접근법을 이용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1인당 및 실질화 지표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의 국가발전지표를 보면 글로벌화 및 건전성 개념이 측정되고 있지 않다. 호주의 국가발전지표에서는 측정대상 개념들이 다소 독특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2012년에 전문가 그룹과 전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재구축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¹¹⁾ 재구축 이전 버전인 2006년의 국가발전지표에서는 측정대상 개념 및 지표들이 전통적인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영역 및 하위영역의 명칭과 주요지표를 보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쉽게 파악되지만 2012년 버전에서는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별 지표를 비교한 <표 8>에서 다른 나라들은 ‘하위영역’의 주요지표들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그 보다 상위 체계(hierarchy)인 ‘영역’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¹²⁾

아일랜드의 국가발전지표는 측정지표들만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국가발전지표는 지표 선정 기준 등에 대한 통계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표 체계의 짜임새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의 국가발전지표는 2003년 최초로 작성되었고 이후 일부 개편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측정 목표나 개념들, 그리고 상호 연관성 등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미흡하며, 다만 사회·경제·환경·교육·건강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11) 이를 호주에서는 ‘MAP 2.0’이라고 부르고 있다.

12) 호주 국가발전지표 2006년 버전 및 2012년 버전의 전체 목록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있을 뿐이다. 따라서 <표 8>에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경제부문에 속한 모든 측정지표들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표 8] 국가별 지표 비교 : 성장과 안정 영역

한국(국가주요지표)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하위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주1)}	하위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주1)}	영역	영역 주요지표 ^{주1)}	지표 ^{주1)}
성장	경제성장률	생활 수준	1인당 실질 국민총가처분 소득 1인당 실질 가계소비지출	생활수준 향상	1인당 실질 순국민가처분 소득	2.3 GDP 성장률 2.1 국내 총생산 및 국민 총소득 2.2 현재 시장 가격의 GDP 및 GNI 2.4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생산성	노동생산성 (시간당)	-	-	탄력적 경제	다중 요인 생산성	-
미래의 성장 가능성	총고정투자율 연구개발투자비율 (GDP 대비) 창업률	경제적 회복력	1인당 총자산의 실제순재고 1인당 실질 순인프라 1인당 실질 고정자본투자	변영	순수 저축과 일인당 실질 순재산의 기타 변화	2.8 총 고정 자본 형성 (GDP 대비)
글로벌화	수출입비율 (GNI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 (GDP 대비)	경제적 회복력	수출수입에 대한 부채서비스의 비율 수출의 다양성 - -	-	-	2.10 상품 및 서비스 수출 (GDP 대비) 2.11 재화와 서비스 수입 (GDP 대비) - -
건전성	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경제적 회복력	정부 부채	-	-	2.9 경상수지 (GDP 대비) 2.6 재정수지 (GDP 대비) 2.5 일반 정부 총 부채 (GDP 대비) 2.7 일반 정부 총 지출 (증가율)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생활수준	소득 불평등 저소득층인구수	공정한 결과	중간소득 가구 대비 저소득가구의 소득비율	2.18 실업자 가정에 거주하는 18-59세 인구 비중
기타 ^{주2)}	-	생활수준	주택 구입능력			2.19 주택공급

48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한국(국가주요지표)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하위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주1)}	하위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주1)}	영역	영역 주요지표 ^{주1)}	지표 ^{주1)}
			생활의 물질적 기준에 대한 가구의 만족도			2.20 주택용자 2.12 조화 소비자물가지수 2.13 간접세를 포함한 가계의 최종소비에 대한 비교가격 수준 2.14 성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 비율) 2.15 근로시간당 구매력 기준 GDP 지수 2.16 성별 실업률 2.17 성별 장기 실업률 (1년이상)

주1) 한국, 뉴질랜드는 하위지표를 기준으로 비교하며, 호주는 영역지표, 아일랜드는 개별지표를 기준으로 비교함.

주2) '기타'에는 우리나라 성장과 안정 영역과 관련 있는 주요국의 국가발전지표 하위영역 지표 중 match 되지 않는 나머지 지표들을 정리하여 제시함

제2절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성장과 안정에 관한 통계 프레임워크를 작성함에 있어서 먼저 다음과 같은 가지 기준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현재의 거시경제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실제로 이루어진 거시경제적 결과에 대한 적절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통계지표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미래에도 성장과 발전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단기적 성장이 미래의 장기적 성장을 희생한 댓가로 얻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국가발전과 개인의 후생에 대한 함의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성장만이 아니라 미래의 장기적 성장가능성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통계지표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 경제에는 항상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하므로, 현재와 미래의 성장은 미리 예상된 속도로 일정하게 일어날 수는 없다. 성장에 있어서의 변동성과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위험기피적인 개인들의 후생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나 재정위기와 같은 심각한 사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의 변동성이나 위기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외에 포용적 성장에서 강조되듯이 성과의 균등한 분배도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하다. 부문간 격차가 클 경우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부문에 자원배분이 집중됨으로써 경제구조가 충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문간 격차가 크다는 것은 부문간 이동이 발생할 경우에 개인이 직면하게 될 변동성 및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성장과 안정 영역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

- 성장: 현재의 성장 및 미래의 성장 가능성
- 안정: 거시경제적 건전성과 균형발전

Stiglitz-Sen-Fitoussi(2009)의 세 가지 축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위의 성장 가능성과 대체로 유사하며 균형발전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균형발전을 통하여 미래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의 개념에 기초하여 평균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들을 성장 영역에 포함시키고, 변동성 및 위험과 관련된 항목들을 안정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개념들과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와 관련된 지표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본 프레임워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성장 영역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장’ 영역은 현재의 성장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다. 단, 여기서는 현재 혹은 단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총수요측 요인들보다는 미래 혹은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총공급측 요인들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성장은 주로 현재의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로서 고려하기로 한다.

(1) 경제적 성과

‘성장’은 거시경제적 ‘성과(outcome)’를 반영하며, 경제의 현재 상황을 측정한다. 즉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있는지, 노동자 일인당 생산 및 국민 일인당 소득은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있는지 등을 나타낸다. 노동자 일인당 생산은 총생산을 노동자 수로 나눈 것이므로 곧 노동생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영역에는 일단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성장률과 생산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성장률의 주요 지표로는 흔히 경제성장률이라고 불리는 실질 GDP 성장률을 들 수 있으며, 보조지표로는 소득 및 생산의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를 고려할 수 있다. GDP를 포함하는 국민계정 체계는 매우 포괄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모든 국가들이 공통의 체계(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므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tiglitz-Sen-Fitoussi(2009)에 의해서 지적된 바와 같이 GDP가 진정한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발전의 지표로 기능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구내 생산이나 무료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진정한 후생의 크기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가구내 생산이나 무료 디지털 콘텐츠와 같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생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최근 들어 일부 국가들에서 시험적으로 추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추정치를 GDP 계정에 그대로 추가하는 것은 기존의 GDP 개념 및 체계와 잘 부합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위성계정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구내 생산에 대한 위성계정은 최근 들어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구내 생산의 증가율을 성장률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구내 생산과 디지털 경제의 규모의 추정에 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한편 생산성에 대해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주요지표로, 1인당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기업 영업이익률 등을 보조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1인당 노동생산성은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에 달하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길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서 35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긴 노동시간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점차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2018년초 국회는 주당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18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에는 50인 이상, 2021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본 법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유의한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1인당 총생산이 줄 것이고 그 경우 1인당 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용과 노동” 영역의 근로시간 지표와 더불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생산성 측정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지표는 노동생산성이 아니라 생산에 사용된 모든 생산요소들을 감안하여 측정된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총요소생산성 측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요소들과 생산물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생산함수를 가정해야 한다. 문제는 생산함수에 포함되는 생산요소 확정 문제, 생산요소 측정 이슈, 생산함수 설정, 생산함수의 모수에 대한 가정 등 측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생산요소 측정에 있어서는 자본스톡에 대한 측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며 정확한 측정을 위한 세부 물가지수의 생성이 관건이 된다. 생산함수를 규정하는 모수 또한 계량 방법론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표를 표준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총요소생산성보다는 측정이 편리한 노동생산성이 생산성의 지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표 9] 국가발전지표 성장 영역: 현재의 성장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성장	성장률	경제성장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위성계정(가구내 생산)
	생산성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기업 영업이익률	

(2) 미래의 성장 가능성

성장 영역에는 거시경제의 최종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 외에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 투입(factor input)’과 ‘환경(environment)’ 요인

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거시경제적 최종 성과는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통해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 경제의 생산능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생산요소로는 물적 자본, 노동 및 인적자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적 자본의 양이 경제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지 파악함과 아울러 어떤 자본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는지 자본의 구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의 경우도 취업자나 근로시간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측정과 아울러 인적자본 등 질적인 측면의 개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생산성 향상이 핵심적인 요인임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혁신과 기업동학의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생산성은 결국 생산의 주체가 되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기업 생산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파악되어야 한다. 우선 기업들의 평균적인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1) 기업 개별 차원의 혁신노력과 이에 따른 혁신성과를 들 수 있으며 (2) 거시적으로는 기업의 동태적 변화, 즉 기업동학을 통한 자원재배분이 있다.

한편 물적·인적 자본의 축적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모두 경제주체들의 선택이므로, 경제적 행위에 따른 결과물을 규정하는 제도적 환경이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규제나 경쟁 환경에 따라 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달라지며,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진입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퇴출되면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되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요약하면, 생산성은 직접적으로 혁신성과와 기업동학에 의해서 결정되고 간접적으로 경쟁적 환경과 규제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생산성의 결정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은 <그림 2>에 정리되어 있다.

대외개방 역시 생산요소의 축적이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시장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제도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생산요소의 이동은 직접적으로 국내 자본 및 노동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고, 체화된 기술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성장 영역에는 물적자본, 인적자본, 혁신, 개

방 등의 하위영역을 포함시킨다. 하위영역별 지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할 때, 연도마다 변동이 심한 유량(flow) 지표보다는 저장(stock)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최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러한 건설투자의 위축이 우리 경제의 성장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 2~3년간 빠르게 증가했던 건설투자의 결과로 건설자산이 늘어난 것은 오히려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하위영역별로 적절한 저장지표가 존재하지 않거나 저장지표의 측정 오류가 심한 경우에는 유량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심으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투입과 성과 사이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투입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성장가능성이 확대되는 반면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성장가능성이 확대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하위영역의 총량뿐 아니라 구성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주요지표는 총량을 위주로 선정하되, 보조지표에는 구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표 10] 국가발전지표 성장 영역: 미래의 성장 가능성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성장	물적자본	총고정투자율 (GDP 대비)	고정자산비율(GDP 대비)
			유형별 고정자산비율(GDP 대비)
	인적자본	교육비 비율 (GDP 대비)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학습 참여율
	혁신	연구개발투자 비율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투자비율
			정부 연구개발투자비율
			특허출원수 (인구 100만명 당)
	기업동학	창업률	벤처기업수
			기업 퇴출률
	경쟁 및	시장집중도 지수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규제환경		
	개방	수출입 비율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GDP 대비)
			외국인근로자 비율(전체 취업자 대비)
			취업 및 이민 목적 내국인 출국자 비율(전체 취업자 대비)

가. 물적자본

물적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총고정투자율 또는 총고정투자증가율과 같이 고정투자와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투자보다는 자본스톡이 더 밀접한 지표일 수 있다. 과거에는 자본스톡 통계가 미비하여 사용하기 어려웠으나, 2014년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자본스톡 확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총고정자본형성 시계열을 이용하여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시계열을 추계한 것이다.¹³⁾

[표 11]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2
생산자산 전체	4.4	98.6	484.1	1,821.3	4,467.3	5,088.1
고정자산	3.5	82.2	419.4	1,694.8	4,181.7	4,756.8
건설자산	2.6	54.2	291.9	1,264.3	3,385.8	3,857.7
주거용 건물	0.8	18.1	88.7	387.6	1,013.6	1,127.8
비주거용 건물	0.8	14.4	88.0	381.9	1,018.2	1,178.2
토목건설	1.0	21.8	115.2	494.8	1,354.1	1,546.7
설비자산	0.9	26.7	113.2	353.4	585.5	651.4
운송장비	0.3	8.3	34.2	82.7	157.5	177.6

13) 자본스톡 추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병오(2015)에 제시되어 있다.

	기계류	0.4	17.3	74.1	260.1	417.2	462.4
	육성생물자원	0.1	1.0	4.9	10.6	10.8	11.4
	지식재산생산물	0.1	1.2	14.3	77.0	210.3	252.7
	연구개발	0.0	0.9	11.5	53.7	155.0	192.1
	기타 지식재 산생산물	0.0	0.3	2.8	23.3	55.3	60.6
	재고자산	0.8	16.4	64.7	126.5	285.7	331.2

자료: 최병오(2015).

성장이론에 따르면 경제가 정상상태(steady state)에 가까워지면서 물적 자본이 GDP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GDP 대비 고정자산스톡 비율도 일정한 값에 수렴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GDP 대비 고정자산스톡 비율이 향후 정체된다고 해서 물적 자본의 축적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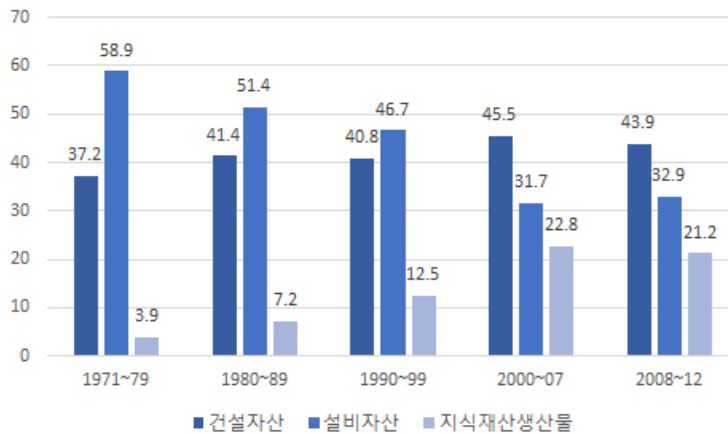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연도별 변동이 큰 유량변수인 투자보다는 저량변수인 자본스톡이 더 적합한 지표일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살펴볼 바와 같이 인적자본의 경우 주요지표로 사용할 만큼 신뢰할 만한 저량변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혁신이나 개방의 하위영역에서도 연구개발투자와 수출입이라는 유량변수를 주요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가능성 영역의 다른 하위 영역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물적자본의 주요지표로 총고정투자율을 사용하고, GDP대비 고정자산 비율을 물적자본의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투자의 속성 상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투자의 변동은 성장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추세적으로 하락하는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자본스톡의 총량뿐 아니라 자본스톡의 유형별 구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유형의 자본들이 존재할 때 한계생산이 높은 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어 결과적으로 유형별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같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0년대에는 설비자산을 위주로 자본이 축적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식재산생산물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축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융복합이나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등에 따라 무형자본의 생산성이 점차 높아진다면, 무형자본이 건설자산이나 설비자산에 비해 빠르게 축적되어 전체 물적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물적자본의 보조지표로 자본유형별 비중을 선정하여 추이를 관측할 필요가 있다.

[그림 9] 자산별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기여율



자료: 최병오(2015).

나. 인적자본

인적자본은 노동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지닌 능력(ability), 숙련(skills), 지식(knowledge) 등을 포괄한다. 인적 자본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는 논의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나, 실제 실증분석에서는 명확한 결과가 제시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인적자본이 직접 측정되지 않고 평균 교육연수나 문맹률 등 대리변수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적자본 추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에 유럽 국가들이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전담 연구기구(task force)를 구성하여 인적자본의 추

계방법과 국민계정 체계(SNA)와 부합하는 인적자본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침(guideline)이 2016년 10월 UN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를 통해 UN 회원국들에게 배포되었다.

현행 국민계정 체계(2008 SNA)에서는 학교 교육은 최종소비로 간주하고 기업에서의 교육 및 훈련은 중간소비로 간주하는 등 인적자본을 고정자산이 아닌 소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적자본이 타인에게 전가될 수 없고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국민계정 체계에서도 기업 브랜드와 같이 특정 경제주체에게 체화된 영업권을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해서 인적자본을 소비로 간주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이 2016년 UN의 지침서의 입장이다.

2016년 UN의 지침서는 비용접근법과 평생소득접근법을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용접근법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통해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방법이며, 평생소득 접근법은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통해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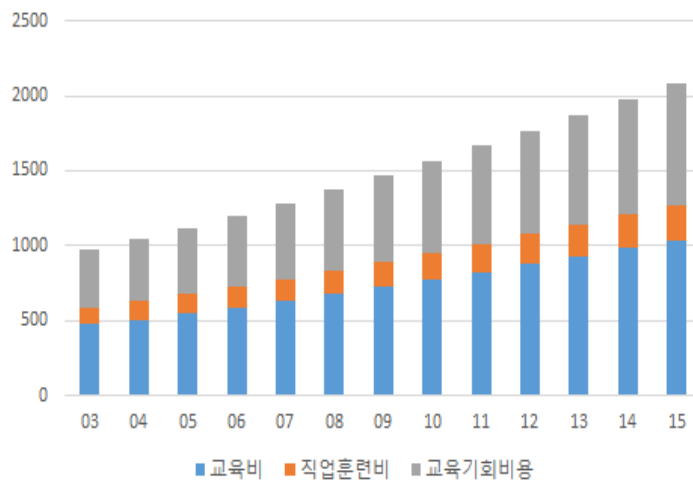
비용접근법은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영구재고법의 방식을 활용하여 인적자본으로 치환한다. 수업료, 시설비, 실습비, 도서 및 학용품비, 기회비용으로서의 임금손실 등의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되지만, 개인별 자질의 차이나 교육의 질적 차이는 고려되지 못한다. 또한 인적자본의 특성에 따라 감가상각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평생소득접근법은 미래소득흐름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인적자본을 추정하며, 여기서 미래소득흐름은 인적자본으로부터 얻게 되는 금전적 혜택, 즉 노동소득을 의미한다. 이 방법의 전제는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에 의해 결정되며, 교육이 노동의 한계생산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완벽한 시장에서는 어느 방법으로 추정해도 유사한 추정결과가 얻어져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평생소득접근법으로 추정한 인적자본의 규모가 비용접근법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는 확산 효과 및 규모 효과 등 외부성이 존재하고, 시장지배력이나 노동조합 등의 요인들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정내 교육이나 자율학습을 통한 교육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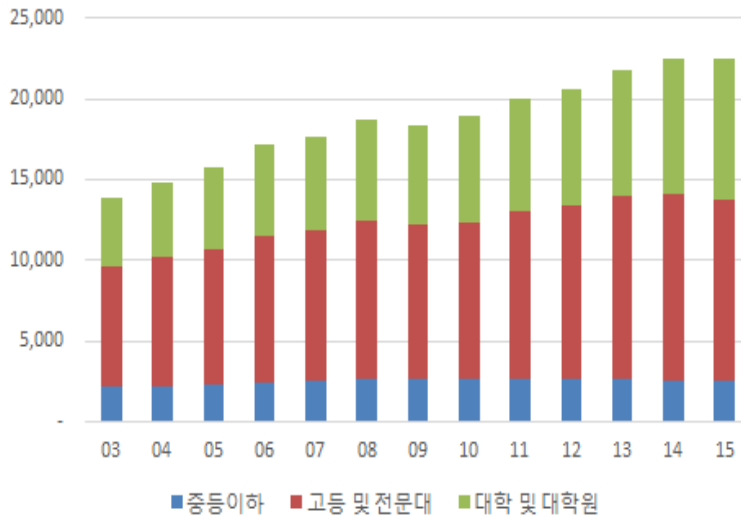
자가 제대로 측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김영준 외(2018)에서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시산한 결과에서도 평생소득접근법의 추정치가 비용접근법의 추정치보다 10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그림 10] 비용접근법에 의한 우리나라 인적자본 추정
(경상금액, 조원)



자료: 김영준 외(2018).

[그림 11] 평생소득 접근법에 의한 우리나라 인적자본 추정
(경상금액, 조원)



자료: 김영준 외(2018).

이와 같이 인적자본은 물적자본과 달리 신뢰할만한 추정치가 아직까지 가용하지 않으므로, 주요지표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지표로 GDP대비 교육비 비율을 사용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축적을 파악하고, 보조지표로 고등교육 이수율을 이용하여 질적인 측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인당 교육비로 측정하는 것이 삶의 질 측면이나 국제비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는 GDP대비 교육비로 양적인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인구 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학습연령대의 교육뿐 아니라, 지속적인 재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평생 교육 참여율을 보조지표로 고려할 만하다.

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모두를 포함하며, 공교육비는 전국 교육기관 및 교육청의 보고통계를 기반으로 측정하고, 사교육비는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의 경우 25~64세 인구 중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로 측정한다. 평

생교육 참여율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통해 25~79세 인구를 대상으로 파악한다.

다. 혁신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표로는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이 외에도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 부가가치 대비 기업부문의 연구개발투자 비율, GDP 대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예산 등이 사용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본스톡 추계 중 지식재산생산물이 별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투자비용을 영구재고법의 방식을 이용하여 저장화한 것이다. GDP대비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율은 연구개발투자가 그동안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물적자본의 보조지표로 포함된다.

한편 이상의 지표들은 연구개발에의 투입을 측정하며, 연구개발에서의 성과를 측정하지 못한다. 관련연구들은 시장경쟁도, (기초 또는 응용 및 개발)단계별 연구개발투자의 구성, 인적자본의 구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구개발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인구100만명당 특허출원수가 활용가능 하지만, 특허의 숫자만 반영되고 중요도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의 특허출원수와 미국에의 특허출원수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의 개수보다는 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감안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적 우수성은 정성적인 영역이어서 측정상의 문제가 크다. 한편 질적 우수성에 대한 지표로서 특허의 인용지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혁신 중에서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혁신이 있을 뿐 아니라 핵심기술의 경우 정보공개의 위험을 피하고자 특허출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혁신의 질을 감안한 혁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측정상의 어려움과 오류가 존재하여 객관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혁신활동의 규모를 파악하는 주요지표로는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특허출원수보다 나은 것으로 판

단된다.

기업과 정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조 지표로서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특허출원 중 비중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여 최근에는 4%를 상회하며, 2~3% 수준인 주요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연구개발투자로 인해 주요 3국(미국, 유럽, 일본)의 특허 등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표 12] 주요국 R&D 및 특허 비중

(단위: %)

GDP대비 R&D 비중			triadic(미국, 유럽, 일본) 특허 비중		
국가명	1991년	2013년	국가명	1990년	2014년
미국	2.61	2.73	미국	34.81	27.03
중국	0.73	2.08	중국	0.04	3.30
일본	2.71	3.47	일본	27.80	29.55
독일	2.40	2.85	독일	12.53	10.11
영국	1.87	1.63	영국	4.56	3.28
프랑스	2.27	2.23	프랑스	6.05	4.60
이탈리아	1.15	1.26	이탈리아	2.21	1.32
러시아	1.43	1.12	러시아	0.13	0.22
스페인	0.80	1.24	스페인	0.24	0.45
호주	1.261)	2.132)	호주	0.61	0.56
한국	1.74	4.15	한국	0.28	5.84

주 1) 1992년, 2) 2011년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atabase

라. 기업동학 (firm dynamics)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 내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비중이 더 커지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의 비중이 작아지는 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기업들의 평균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선택을 받아 경제에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퇴장하는 생태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생산성 기준으로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기업비중의 변화를 기업동학이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자원재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업동학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계량적인 추정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표 측면에서 기업동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정량적인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창업률, 벤처기업의 수, 기업의 진입 및 퇴출률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

마. 경쟁 및 규제환경

기업혁신과 기업동학에 영향을 주어 생산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시장의 경쟁적인 환경과 규제환경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될수록 기업은 생존을 위해 혁신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동시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장경쟁도를 정확히 포착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나 일반적으로 기업이 속한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시장집중도는 HHI(Herfindahl-Hirshman Index), 상위 10대 또는 5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CR, Concentration Ratio)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측정상의 문제가 있다. 시장집중도는 품목 단위에서 의미 있는데 경제 전체를 얘기하는 일반집중도가 전체 경제의 경쟁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적절한 지표로서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개방도가 매우 높은 우리경제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측정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가 내수와 수출이 구분되지 않는 출하액 기준이라 편의의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필요와 요청에 따라 생성된다.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규제는 기업활동과 영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생산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경쟁을 제한하여 기업동학과 기업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각 국가들은 규제수준을 낮추려는 규제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규제 관련한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Ease of Doing Business, Ease of Starting Business Index(World Bank), 둘째, 규제의 수 및 규제의 질을 국제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규제환경지수, 정부규제의 부담, 세관규제의 부담(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Fraser Institute), 규제의 질적수준(WGI, World Bank), 기업의 세부담, 법인세율(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Fraser Institute)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규제에 따라 중요성과 임팩트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규제의 수 증감만으로 규제환경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성적인 서베이에 일부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진입규제 (허가, 등록, 신고 등), 영업상 규제 등에 대한 통계를 생성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바. 개방

대외개방은 크게 재화의 교역과 생산요소의 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점차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화의 교역이 국가간 경제적 교류의 주요 통로이다.

재화의 교역은 주로 경제규모 대비 수출입의 비중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기존에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의 비중을 이용하였는데,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GDP)에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무역손익과 대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것으로서 한 경제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성장과 관련해서는 국내생산 규모에 비해 다른 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GDP 대비 수출입의 비중

이 더 적절한 지표로 생각된다. 수출입의 규모뿐 아니라 대상국별 구성도 보조지표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생산요소는 크게 자본과 노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본의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은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을 이용하고, 외국으로의 자본 유출은 국내 거주자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노동의 이동은 그동안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향후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4차 산업혁명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력의 국가 간 유출입이 점차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 취업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전반적인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계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구 「외국인고용조사」)에서 제공된다. 한편 국내 인력의 해외 유출은 「국제인구이동통계」에서 취업 및 이민을 목적으로 한 내국인 출국자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생산과 관련성이 높은 직접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보조지표를 선정했으나, 외국인 소유의 자본이 증가하며 기업지배구조 등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외국인 보유 채권 및 주식 등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부분도 보조지표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안정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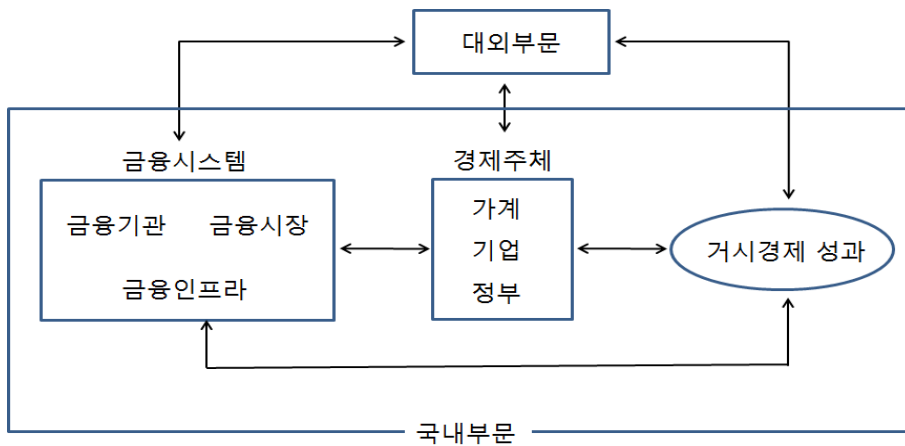
2장(성장과 안정: 개념 및 사회적 이슈)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안정의 개념은 매우 다면적이다. 본고에서는 금융안정, 재정안정, 균형발전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안정을 고려한다. 그런데 금융안정, 재정안정,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은 각각 그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에 있어서는 각 개념을 다시 세분하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안정은 대내금융안정과 대외금융안정으로 구분하고, 재정안정은 재정수지 건전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등으로, 그리고 균형발전은 지역균형발전과 기업균형발전으로 구분하여 별

도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가. 금융안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거시적 성과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는 금융건전성이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 즉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시각에 해당한다. 한편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자체와 이에 참가하는 경제주체, 이들의 경제활동 결과인 거시경제 성과(성장 및 생산성), 그리고 대외부문의 영향 등이 상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 건전성처럼 금융시스템 자체의 건전성 뿐 아니라 가계·기업 등 주요 경제주체의 건전성, 거시경제 여건,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회복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융건전성 관련 지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처럼 금융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건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12] 금융안정과 거시경제 성과의 관계



위 그림에서 보듯이 금융시스템은 크게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

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는 자금수급과 위험 분산 등을 위해 이상의 금융시스템에 참가하며, 해당 경제주체는 소비·저축, 투자, 정부지출 등의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며, 그 결과 거시적 성과를 보이게 된다. 여기서 금융시스템의 자금공급 또는 위험배분 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주체의 활동에 어려움이 따르며 그 결과 거시경제 성과도 부진을 기록할 수 있다. 반대로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도 경제주체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 밖에 국제금융시장 또는 국제무역 등의 대외부문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국내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한편 인접한 영역에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영역의 충격흡수 여력이 충분할 경우에는 금융 및 경제활동 전반의 높은 회복력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여력이 충분하고, 자산시장에 가격 거품이 없고, 경제주체의 차입비율이 낮고,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이 충분한 등 금융건전성이 양호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할 때 경제의 회복력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할 때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정책·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반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은 경제의 복원력과 안정에 기여하므로 국가발전 및 삶의 질과도 연관성이 높다. 이러한 금융안정 지표 작성은 금융시스템 상의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안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과 여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 거시경제 성과와의 연계,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영향, 그리고 각 부문 간 상호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주요국가의 정부 및 통화당국과 IMF, BIS(BCBS), FSB,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금융안정 관련 논의가 활발하였다. 안정적인 경제운영에 있어 금융안정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안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 등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제도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부채/자본) 비율,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만기불일치 위험, 가계·기업의 차입, 주택 등 자산시장의 과열 위험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영국 중앙은행에서는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세 및 손실흡수능력, 가계·기업의 차입, 자산시장 위험, 국제금융시장 위험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에서는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건전성, 가계·기업·정부부채 취약성, 자산시장(주식, 채권, 주택시장) 위험, 국제금융시장 위험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먼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 등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부실위험,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본 적정성(부채/자본) 등의 손실흡수 능력, 자산·부채 간 유동성 불일치 위험 등을 식별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금융시장 위험과 관련해서는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의 가격변동 위험, 신용 스프레드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금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규제·감독체계의 품질(IMF, 세계은행 등의 평가지표)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거시건전성(상호연계·경기순응성)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미시적 건전성만으로는 거시적 건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거시건전성 관련 지표로는 시스템적 위험도와 바젤신용 갭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 등 자산시장의 과열 위험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다. 가계, 기업 등의 주요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개별 가계·기업별 자산·부채 정보와 현금흐름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손실흡수능력, 유동성 위험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건전성이 우려되는 한계·취약 가구 및 기업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가계부문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가계 차입비율(부채/소득, 부채/자산, 부채/금융자산 등), 한계·취약 부채가구 비율, 가계대출 연체율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기업부문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기업 차입비율, 이자보상배율, 한계기업 비율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대외부문 충격으로부터의 회복력과 관련해서는 대외채무 규모와 대외지급여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GDP 대비 장·단기 대외채무와 외환보유액 비율, 순해외자산, 자본유출입, 외환시장 변동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금융안정이 복합적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금융안정을 판단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기초통계의 범위도 넓고, 위험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전문적인 통계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초통계 지표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거나 전문적 통계분석에 의해 복합지표를 추출할 경우에는 일반국민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금융안정 지표 작성 시에는 국가주요지표체계 내에서 경제 영역 내 타 항목과의 중복 및 차별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타 영역과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컨대, 정부재정 관련 일부 지표는 금융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작성·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앞에서 언급한 금융안정 관련 지표들을 <표 1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3] 금융안정 관련 지표

항목	주요지표	보조지표	비고
금융시스템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 건전성	(BIS 기준) 은행업 자기자본비율	업권별 부채/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 금융감독 품질 지수 시스템적 위험도 지수 바젤 신용 갭	업권별로는 은행 vs. 비은행 구분 가능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별 건전성	가계부채/소득 기업부채/자기자 본 정부부채/GDP	가계부채상환액/소득 취약가구수/부채가구수 기업 이자보상배율 한계기업수/전체기업수	제도부문별 건전성
대외지급능력	대외채무/GDP 외환보유액/GDP	대외채무/외환보유액 단기대외채무/외환보유액 해외 순자산/GDP 경상수지/GDP	대외건전성
자산시장 건전성	자산(부동산, 주식·채권·외환) 가격 상승률	주식·외환 변동성 채권 스프레드	자산시장 과열 위험, 자금조달 위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 영역에 포함된 지표가 너무 많거나,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표가 몰려있거나, 혹은 영역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을 경우,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국가발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등과 달리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보니 대외적인 위험에 취약한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통계 프레임워크에서는 금융안정을 크게 ‘대내금융안정’과 ‘대외금융안정’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를 <표 14>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14] 국가발전지표 안정 영역: 금융안정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안정	대내 금융안정	은행업 자기자본 비율 (BIS기준)	가계부채/가계가처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업 자기자본 비율 (BIS기준) •가계부채/GDP •기업부채/GDP
			취약부채가구 비중	
			기업부채/자기자본	
			한계기업 비중	
	대외 금융안정	대외채무/GDP	단기대외채무/외환보유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채무/GDP •경상수지/GDP
			외환보유액/GDP	
경상수지/GDP				

대내금융안정

과거 위기사례를 보면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인 일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문제가 되거나 금융시스템에 참가하는 일부 경제주체의 건전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또는 주요 경제주체별로 금융건전성이 특히 우려되는 그룹을 식별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작성하고 해당 지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정책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의 부실위험,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본 적정성 등의 손실흡수여력, 자산-부채 간 유동성 불일치 위험 지표 등을 이용하여 건전성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을 식별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가계, 기업 등의 주요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개별 가계·기업별 자산-부채 정보와 현금흐름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손실흡수여력, 유동성 위험 등의 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건전성이 우려되는 한계·취약 가구·기업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금융안정을 판별하기 위한 지표의 활용은 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거나 특히 힘써야 할 취약 영역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외금융안정

1997-98년 외환위기 사례는 국내기업의 과도한 차입,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실패와 건전성 악화,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여력, 아시아 국가 간 위기 전파와 채권국의 자금회수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아시아 외환위기는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충격과 대내부문의 취약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요인들만이 아니라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여력이나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에 관한 지표들이 추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대외건전성과 관련하여 대외채무/GDP 비율, 단기대외채무/외환보유액, 순해외자산 등의 지표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존의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는 안정 및 건전성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수지 비율’, ‘국가채무 비율’, ‘경상수지 비율’ 등을 주요 지표로 포함하고,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과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소득과 소비’ 영역의 하위영역인 ‘가구순자산’에 ‘자산 및 부채와 가구주 성 및 소득분위별 가구순자산’(주요지표), ‘가계저축률’(보조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가계건전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기존의 국가주요지표체계에서는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 정부부문 건전성과 대외금융충격으로부터의 복원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 가계건전성과 관련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안정의 요건에 대한 앞의 논의에 따를 때, 정부부문과 대외부문에 한정된 건전성 지표와 가구 순자산 지표만으로는 금융안정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보다 체계적 접근을 위해서는 정부 및 대외부문 관련 안정성 외에도 금융시스템 및 경제주체별 건전성까지 아울러 금융건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핵심적인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표 14>와 같이 금융안정 관련 지표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재정안정

재정건전성

효과적이고 꾸준한 재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만약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자체가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 혹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GDP 등이 있다.

재정수지는 회계기간 동안의 재정의 수입 및 지출 상태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의 현금주의기준의 재정수지로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를 편제 및 공표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이다. 이를 간단하게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통합재정수지} = \text{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 - \text{세출 및 순융자}$$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이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수혜자보다 기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조적으로 통합재정수지가 항상 흑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책당국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지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조정하여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자 관리재정수지를 편제 및 공표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관리재정수지} = \text{통합재정수지} - \text{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일반적으로 GDP대비 비중으로 공표된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편제된 재정수지 지표로서 매해 재정수지의 규모 및 시계열 변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이용한 국제적인 비교는 어렵다. 국제적인 비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재정수지 지표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수지이다.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정부가 지배하는 비영리공공기관으로서 앞서 기술한 중앙정부보다 더 넓다. 발생주의에 기초한 재정수지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순운영수지와 순융자/차입이다. 순운영수지는 총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며, 순융자/차입은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순취득을 차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정활동의 수지(적자/흑자)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2016년 현재 42.9조원의 흑자(순융자)를 기록하였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정수지를 GDP 대비 비중으로 공표한다.

[표 15] 일반정부 3개년 정부운영표

(단위 : 조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 총수입(A)	504.9	534.6	568.0
◦ 조세	270.5	291.2	320.7
◦ 사회보험료	102.6	109.4	117.7
◦ 출연	0.0	0.0	0.0
◦ 기타수익	131.8	134.0	129.6
□ 총지출[(1)+(2)]	484.1	515.1	525.2
◦ (1) 비용(B)	442.8	470.2	482.9
◦ 피용자 보수	90.4	94.9	99.6
◦ 재화와용역의 사용	92.2	99.1	106.4
◦ 고정자본소비	24.7	26.6	27.5
◦ 이자	22.6	22.2	21.0
◦ 보조	70.0	76.6	74.3
◦ 출연	0.6	0.7	0.1
◦ 사회급여	92.6	100.1	108.9
◦ 기타비용	49.7	50.1	44.9

(2) 비금융자산순취득(C)	41.3	44.9	42.3
□순운영수지(A-B)	62.1	64.4	85.1
□순융자/차입(A-B-C)	20.8	19.5	42.9

t 기의 국가채무는 $t-1$ 기의 국가채무에 t 기에 발생한 재정적자규모를 합한 값과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채무는 단순히 말하면 누증된 재정적자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채무 통계는 회계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먼저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D1)는 국채(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차입금(해외, 국내), 국고채무 부담행위와 지방정부 순채무의 합이다. 2016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은 626.9조원으로 GDP 대비 약 38.2%이다. 한편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편제한 일반정부 부채(D2)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통계로서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정부가 지배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이다. 우리나라는 D2를 2011 회계연도부터 편제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공동 작성하고 있으며, 발표 및 국제기구에 대한 통계 제출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공부분 부채(D3)는 일반정부보다 더욱 넓은 공공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추가함으로써 얻어진다. D3는 D2와 마찬가지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따른다. 순부채(Net debt)는 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한 통계이다.

경기안정화 정책

재정이 안정적인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재정 정책을 통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고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총수요관리를 통한 재정 정책은 경기변동이나 경제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둔다. 따라서 안정 영역에는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안정화 정책의 지표가 포함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재정은 경기변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 즉 경기가 부진하면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 정책의 운용 방향을 반영하는 재정관련 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정부 예산 총지출의 증가율과 경상성장률 증가율(전망치)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상성장률이 5%인데 예산편성시 총지출 증가율을 7%로 설정한다면,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도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 또는 관리대상수지와 같은 재정수지에서 이자지급금액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primary fiscal balance)도 경기안정화를 반영하는 재정 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세입측면의 재정 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경상 GDP*100)이 있다. 세율을 높이거나 세금감면 등을 줄이는 세입정책은 일반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긴축적인 재정 운용의 한 수단이 되어왔다.

소득재분배 정책

재정은 경기안정화 외에 소득재분배 또는 사회안전망 기능도 수행한다. 이를 넓게 보면 경제적 불균등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안정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와 같이 개인간 불균등이 심화되는 경우 정부는 지출정책 또는 세입정책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국민계정 상의 “사회수혜금(social benefit in cash)” 및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 등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출이다. 사회수혜금(social benefit in cash)은 사회보장수혜금, 사회보험수혜금, 그리고 사회부조수혜금을 포함한다. 사회보장수혜금은 주로 국민연금과 비연금수혜금으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수혜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퇴직금,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의 보험수혜금으로 구성된다. 사회부조수혜금은 기초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금 기여자와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정

부지출을 반영한다.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은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가계에게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전액 및 건강보험 지급액, 무상교육 등 정부 최종소비지출 중 개별소비지출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민계정의 사회수혜금(social benefit in cash)과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은 정부의 재분배정책 규모에 대한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보호지출 항목의 규모(정부지출내 비중 또는 GDP대비 비율 등)도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또는 재분배 정책의 노력을 반영하는 유용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특히, 해당 정보는 OECD 데이터 베이스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세입정책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제도이다. 높은 소득에 대하여 더 높은 한계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세입정책 효과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의 누진 정도(progressivity)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시점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측정지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표 16] 국가발전지표 안정 영역: 재정안정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안정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일반정부 순융자/차입 비율 (GDP 대비)
	재정의 지속가능성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D3) 비율 (GDP 대비)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GDP 대비)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사회안전망	사회수혜금 비중 (GDP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율 (GDP 대비)
			일반정부 사회보호지출 비중 (GDP 대비)

다.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균형발전의 주요한 한 측면은 지역간 균형발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소멸될 위험에 처하고 지역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OECD(2015)의 ‘How’s Life 2015’에서는 웰빙의 측정에 있어서 지역적 관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은 지역 간 차이가 크며, 국가 평균지표는 지역격차를 나타내지 못함’을 지적한다. OECD의 이 연구는 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넘어 지역의 포괄적 웰빙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생활수준 측면에서 지역격차를 고찰할 때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측정법은 지역의 GDP(OECD 2015, 278p)”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의 지표로서 먼저 지역내 총생산(GRDP)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단, 목적에 따라서는 지역내 총생산을 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RDP가 더 적절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전체의 생산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GRDP가 적절하지만 지역민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지역별 개인소득이 더 타당할 수 있다.¹⁴⁾ 다음의 <표 17>은 전국·서울·전남 지역의 지역내 요소소득, 지역내 총부가가치, 1인당 지역총소득 및 1인당 개인소득을 나타내는데, 전남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지역내 요소소득 및 지역내 총부가가치는 2014~2015년 기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1인당 개인소득의 증

14) 미국의 경우도 주(state)별로 ‘개인소득계정’ 및 ‘개인소비지출’을 공표하고 있다.
<https://apps.bea.gov/regional/downloadzip.cfm>

가폭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별 분석에 있어서는 생산과 소득 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생산과 소득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17]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GRDP 측정 사례

항목	경제활동별	지역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역내 요소소득 (십억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전국	6401	9437	15698	21604	24172
		서울	862	980	1138	1112	1229
		전남	225	468	1125	1821	2057
		전국	23.0%	47.4%	66.3%	37.6%	11.9%
		서울	27.9%	13.7%	16.1%	-2.3%	10.5%
		전남	25.6%	108.2%	140.5%	61.9%	13.0%
지역내 총부가가치 (2010년 기준년 연쇄가격) (십억원)		전국	19878	19650	20157	21443	21968
		서울	1639	1569	1426	1342	1325
		전남	1290	1255	1512	1735	1823
		전국	1.3%	-1.1%	2.6%	6.4%	2.4%
		서울	-2.0%	-4.3%	-9.1%	-5.9%	-1.3%
		전남	6.3%	-2.7%	20.5%	14.7%	5.1%
1인당 개인소득 (천원)	전국	15,256	15,799	16,394	17,222	17,653	
	서울	18,018	18,565	19,104	19,962	20,506	
	전남	13,018	13,484	13,829	14,703	14,971	
	전국	3.7%	3.6%	3.8%	5.1%	2.5%	
	서울	4.7%	3.0%	2.9%	4.5%	2.7%	
	전남	2.7%	3.6%	2.6%	6.3%	1.8%	

* 자료 : 통계청 KOSIS. 퍼센트(%)는 증가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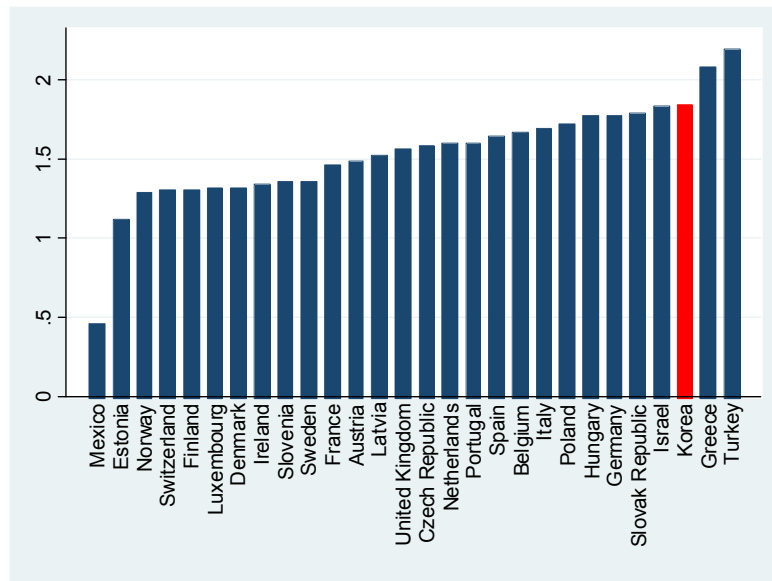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영역의 주요지표로는 GRDP 증가율을 사용하고, 보조지표로는 1인당 GRDP를 사용하기로 한다. GRDP가 GDP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웰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미시통계와 거시통계간의 불일치 등 측정개념 및 측정방법 상의 여러 한계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OECD(2015)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GRDP는 각 지역의 경제적 생산 수준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측정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 지역의 주민들이 누리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1인당 개인소

득을 추가적인 보조지표로서 포함시킨다.

기업균형발전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OECD의 2014년 보고서 *How's life in your region?*에 의하면 전반적인 지역간 소득격차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림 13]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의 국가간 비교: 제조업,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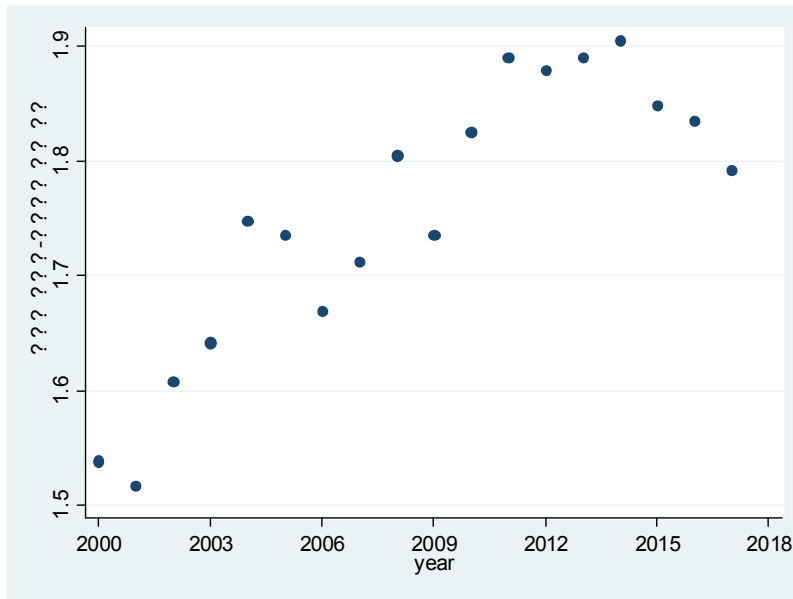
자료: OECD, SDBS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ISIC Rev. 3 and ISIC Rev. 4).

주: 대기업은 종사자 수 250인 이상, 중소기업은 249인 이하를 나타냄. 2006년까지는 ISIC Rev. 3, 2011년-2013년 자료는 ISIC Rev. 4를 이용함. 임금격차는 대기업 1인당 임금/중소기업 1인당 임금을 나타내며, 1인당 임금은 SDBS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의 Wages and salaries of employees를 Total employment로 나눈 값임.

또한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에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0년 이후 기간 전

체적으로는 임금 격차가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¹⁵⁾

[그림 14]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의 추이: 국내 자료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주: 대기업은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중소기업은 5인 이상 299인 이하를 나타냄.

임금격차는 대기업 1인당 임금총액/중소기업 1인당 임금총액을 나타냄.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며 이는 다시 지역의 인적자본 유출로 인하여 지역간 격차를 확대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1,000대 기업 본사의 73.6%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규모간 격차는 지역간 격차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업의 높은 생산성 자체가 문제

15) 제조업이 아닌 전산업의 경우에는 자료에 따라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의 움직임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산업의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가 2008년경부터 2015년까지 확대되다가 그 이후에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이 있는 특정 분야에 자원이 선택적으로 집중된 결과 대기업과 여타 기업들 간에 생산성 격차가 발생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간 양극화는 근로자들의 임금 양극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해당 특정 분야에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 전체의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OECD의 2018년 보고서 Strengthening SMEs and entrepreneurship for productivity and inclusive growth도 중소기업의 발전은 한 경제의 생산 잠재력을 높이고 분배를 개선하며, 구조적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축소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인식 하에 OECD는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SDBS)에서 기업규모별 임금, 매출액, 고용 등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기업균형발전의 주요지표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를 고려하고, 보조지표로는 대기업 매출액 비율(전체 매출액 대비)을 고려하기로 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대기업의 매출액 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고용-노동 통계 프레임워크 진단 연구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개인들 간의 임금격차라기보다는 대기업-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고려하고자 한다.

[표 18] 국가발전지표 균형발전 영역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안정	지역균형발전	지역별 GRDP 증가율	지역별 1인당 GRDP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기업균형발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대기업 매출액 비율

16) “Small and medium-sized firms (SMEs) are central to the collective goal of increasing productive potential, reducing inequality and ensuring that the benefits from increased globalis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 are shared, as documented in OECD work on the productivity-inclusiveness nexus (OECD, 2016a). Furthermore, SMEs can help countries adapt to other major transformations in the global environment, seizing new opportunities and contributing to mitigate risks.”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	------	------	------

단, 대기업-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정리되어야 한다. 현재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엄밀히 말하면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체 기준과 기업 기준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대기업 소속이면서 사업체 기준으로는 소규모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기업 기준에 입각하여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의 이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종사자 수, 자산 규모, 매출액 등 각 기준 별로 기업 규모를 분류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중소기업법과 중견기업법에 따라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누게 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중견·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 및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기타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의가 자주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및 균형발전에 관한 시계열 통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OECD 자료에서는 여전히 종사자 수에 따라 기업 규모를 나누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정의 외에도 매출액, 자산 규모, 종사자 수 등 각 기준별로 기업들을 세분하여 통계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장

성장·안정 영역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제1절 성장·안정 영역 통계 개선방안¹⁷⁾

1. GRDP 개선 방안

가. 개요

지역소득통계(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란 국민소득통계(전국)에 대응하는 지역별 소득통계이다(ESA2010, 13.01). 지역소득통계는 지역의 경제구조, 발전 및 경제성과에 대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¹⁸⁾ ESA(European System of Accounts) 2010에 따르면, 지역소득통계의 작성방법은 크게 상향식 방법(bottom-up methods), 하향식 방법(top-down methods), 그리고 혼합식(a mixture of bottom-up and top-down methods)의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향식 방법이란 시·군·구와 같이 보다 하위의 지리적 단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합산하여 시·도

17) 본 장에서는 독자들이 국민계정체계 및 국민소득통계, 그리고 지역소득통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독자들의 경우 본 장에서 기술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테면, 국민계정체계와 국민소득통계의 관계,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3가지 계정(생산계정, 소득계정, 지출계정) 및 각 계정의 작성방법,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기초가격·생산자가격·구매자가격), 생산세와 생산물세,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와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s), 지역소득통계와 국민소득통계와의 관계, 지역소득통계의 포괄범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낮은 독자의 경우, 이를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헌을 살펴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고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록에 상세한 설명을 정리해 두었다. 본 장에서 기술하는 국민소득통계에 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낮은 독자들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18) 우리나라의 지역소득에 관한 통계 현황은 편의상 부록에 수록하였다. 부록의 ‘2. 관련 통계 현황’ 부분에 GRDP, 지역산업연관표, 시·군·구 GRDP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므로, 통계현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별 지역소득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하향식 방법은 국민소득통계에서 산출된 수치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하향식 방법 또는 혼합식으로 작성하고 있다. ESA 2010에서도 순수한 상향식 방법의 형태는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별 지역소득통계 작성시에도 상향식 방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¹⁹⁾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과 지역내총생산(GRDP) 및 시·군·구 GRDP는 각각 작성주체, 작성범위 및 대상, 작성주기 및 작성방법 등이 서로 다르다. GDP는 한국은행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생산·지출·분배 계정을 작성한다. 한국은행의 GDP는 분기 및 연간을 주기로 작성되며, 연간 통계의 경우 잠정치는 대상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확정치는 대상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지역내총생산(GRDP)은 통계청에서 시도를 대상으로 하여 연간을 주기로 작성하며, 잠정치는 대상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확정치는 대상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GDP 확정치를 공표하기 3개월 전에 통계청의 GRDP 잠정치가 공표된다.

GDP와 GRDP는 추계에 사용되는 기초자료가 다르므로 모든 지역의 GRDP를 합한 값(전국의 GRDP 값)이 GDP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와 GRDP 추계는 국제기준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는 통계자료로서, 가급적 두 통계 간의 편차가 작은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⁰⁾ 우리나라의 경우 GDP와 GRDP(전국) 간의 차이는 1990년 초반에는 3% 정도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0.2% 정도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그러나 총생산의 경우에는 오차가 작다 하더라도 세부 산업별로는 여전히 3%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와 GRDP 작성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두 통계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계 기관들 간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정보 교환이 필요할 것이다.

19) 오히려 우리나라의 시·군·구별 지역소득 및 미국의 대도시권별(Metropolitan Area) GDP는 하향식 방법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20) 2008SNA에서는 GDP와 GRDP는 상호 보완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호 간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 19] GDP와 GRDP의 비교

구분		국내총생산(GDP)		지역내총생산(GRDP)		시군구 GRDP
작성기관		한국은행		통계청		광역시자치단체 • 현재,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작성, 공표 중
작성범위 및 대상		전국 단위 생산, 지출 및 분배계정		16개 시도 단위 생산, 지출 및 분배계정 + 세종시는 분리 추계 작업 예정		시군구 단위 생산계정 • 분배계정은 시범추계 실시 예정
작성주기		분기 및 연간		연간 (연 2회 공표)		연간 (연 1회 공표)
공표 일정	분기	속보 잠정	대상분기 종료 후 +28일 " +70일	-		-
	연간	잠정 확정	대상연도 종료 후 +3개월 " +15개월	대상연도 종료 후 " +12개월 " +18개월	- 대상연도 종료 +21개월 (또는 24개월)	
작성방법		(분기) 전국 단위 월간-분기 기초자료 및 자체 추정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연간) 분기 추계 결과를 합산하여 잠정 추계한 후 연간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수정		지역 단위의 연간 기초자료 (조사통계, 행정자료 및 가공통계)를 이용하여 추계		통계청의 시도 GRDP 확정 추계 결과를 관련 배분지표를 이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분할

* 자료: 통계청 내부자료

나. 지역소득통계와 관련된 이슈

지역소득통계 작성에 적용되는 개념 및 정의들은 모두 국민소득통계 작성에 적용되는 것들과 동일하므로,²¹⁾ 이론상으로는 지역소득통계와 국민소득통계는 서로 같아야 한다. 그러나 몇 가지 개념적 측면과 현실적

21) 지역소득통계와 국민소득통계 간의 개념적 일치성은 국제기준 및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같다. UN(2009)의 ‘SNA 2008’, European Union(2013)의 ‘ESA 2010’ 및 통계청(2017)의 「지역소득통계」, BEA(2006)의 ‘Gross Domestic Product by State Estimation Methodology’에서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인 제약들로 인하여 지역소득통계에는 국민소득통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지역소득통계 작성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거주성(residence) 판단의 문제, 둘째, 특정 지역에 할당할 수 없는(Extra-Regio) 경제활동의 존재, 셋째, 자료의 제약 등이다.

1) ‘거주성 원칙(residence principle)’에 관한 문제들

거주성의 원칙은 경제주체가 지리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기업부문의 경우, ESA 2010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먼저,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이 하나의 지역에 국한된 ‘단일지역 단위(Uni-regional units)’인 경우에는 해당 주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활동을 기록하며, 지역소득통계 작성에 어려움이 없다. 가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 사회보장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기구들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전국적 단위(National units)’는 공기업이나 전국에 걸쳐 영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독점 또는 준독점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나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진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지역에 존재하는 ‘다지역 단위(Multi-regional units)’도 있다. 예를 들면, A지역에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B지역에는 본사와 같은 경영활동지원부서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성과를 여러 지역에 할당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지역 단위’의 거래 중 일부는 특정 지역에 할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재산소득과 금융거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공기업)들에 의해 지급되는 공적부채에 대한 이자는 특정지역에 할당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에 할당할 수 없는(Extra-regio) 경제활동의 성과를 어느 한 지역에 배분할 경우, 그 지역의 경제적 성과가 과도하게 측정될 수 있다. 이는 다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총생산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SNA 2008에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가상지역 (quasi-region)’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지역은 특정 지역에 할당할 수 없는 경제활동들을 모아 추가적인 지역으로 다룬다. 이러한 ‘가상지역’에는 여러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체들을 가진 기업의 본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지역 배분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생산활동의 경우, 배분된 지역의 산업활동 성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지역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지역배분의 근거가 부족한 생산활동의 규모를 추정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상지역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소득에 대한 왜곡을 줄이고 지역소득통계 작성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러한 개정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한시적으로 기존 방식과 가상지역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들

GDP와 마찬가지로 GRDP도 원칙적으로는 생산접근법, 소득접근법, 지출접근법 각각에 따라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GRDP의 경우 현실적으로 세 가지 접근법을 모두 활용하기에는 자료 부족 문제가 너무 크므로, 대부분 생산접근법에 의해서 GRDP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출계정과 분배계정을 추가로 작성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ESA 2010에 따르면, GRDP 측정에 있어서 지출접근법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지출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판매 및 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물론 지역간 수출입(외국과의 수출입 포함)에 대한 자료까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처리의 실무적 어려움은 수송 통계에 대한 정교한 체계가 없는 경우 매우 클 것이다(United Nations(2010)).²²⁾

22) The final expenditure approach requires data on final consumption and gross capital formation of regional residents (both households and government), and their exports and imports. Data on exports to other regions and abroad and imports from them is very

한편 소득접근법 역시 상당한 자료의 제약이 수반된다. 예를 들면 시장생산자의 총영업잉여에 대한 정보는 기업에 대한 영업계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지만, 이를 지역별로 나누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접근법은 지출접근법에 비해서는 용이한 편이며 상당 부분 생산접근법과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생산접근법에 더하여 GRDP 추정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GRDP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소득접근방식을 이용한 지역소득통계 작성을 시험적으로 고려 중에 있다.

GRDP 추정과 관련된 또다른 제약은 적절한 지역별 산업연관표의 부재이다. 한국은행에서 2003년 지역 산업연관표(2007)를 시작으로, 2005년 지역 산업연관표(2009), 2010년 및 2013년 지역 산업연관표(2015)를 작성하여 발표한 적 있으나, 이는 모두 투입산출표이며 공급사용표는 아직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지역별 공급사용표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가구내 생산의 가치 측정

Stiglitz-Sen-Fitoussi의 2009년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측은 Alternative indicators from national accounts인데, 이 측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가구의 비시장 활동(non-market activities)에 대한 측정이다. 가구내 생산의 가치를 구하는 것은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총생산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추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기존의 가구 소득 지표에 가구내 생산의 가치에 대한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노인 가구와 여타 가구 등)의 후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복지정책, 과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현재 국민계정 체계에는 자가 거주자의 귀속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가구내 서비스 생산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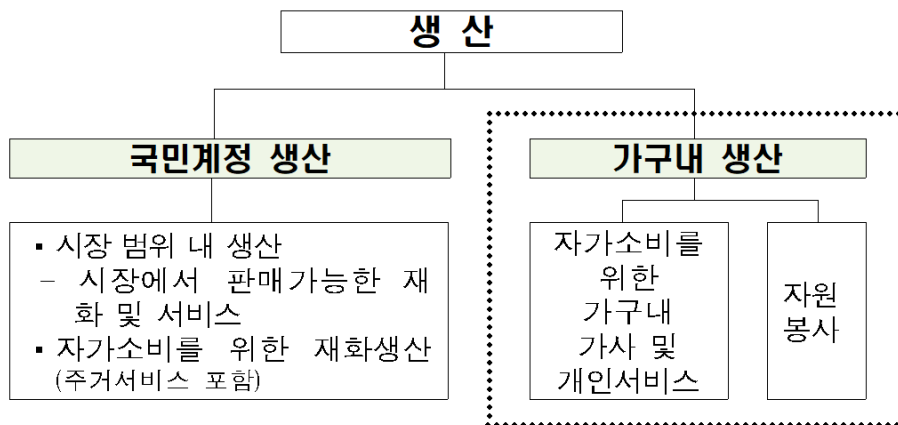
expensive to the point of impossibility to collect. This approach is, as a consequence, impractical.

근로시간 단축 추세와 더불어 가계 내에서의 시간 사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가구내 생산활동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성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다.

가. 가구내 생산의 정의

가계의 총시간은 시장 노동, 무보수(가구내) 노동, 여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무보수 노동과 여타 생산요소들을 결합하여 가구내 생산이 이루어진다. 특히 여기서 가구내 생산은 가계에서 무보수 노동으로 생산된 서비스(service)를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가구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goods)의 가치는 이미 국민계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구의 서비스 생산 중에서는 주거 서비스만이 예외적으로 국민계정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가구내 노동과 여가의 차이는 “제 3자”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만약 제 3자가 해당 일을 할 때 돈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여가가 아닌 가구내 서비스 생산활동, 즉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5] 국민계정과 가구내 생산



가계의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는 무보수 노동 외에 자동차, 가구, 가재 도구와 같은 소비자 내구재로부터 발생하는 서비스, 그리고 중간재로 사

용되는 소비재 등의 투입(input)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구내 생산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산출물 접근법(output approach)보다 투입물 접근법(input approach)을 사용하는데, 현실적으로 가구내 생산의 산출물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투입물 접근법의 경우 가내 서비스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의 합과 같다고 전제하고, 노동에 대한 보수, 고정자본의 소비, 생산에 들어간 중간소비재 등의 가치를 모두 더하게 된다. 따라서 가구내 생산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구내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내구재의 소비가 부가가치의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중간투입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지출 부분에 대한 가치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가운데 앞의 두 항목은 가구내 생산의 부가가치의 계산에 필요하며, 마지막 항목은 앞의 두 항목과 더불어 가구내 생산의 총가치의 계산에 필요하다.

이처럼 가구내 부가가치 생산에는 노동과 자본(내구재)이 모두 투입되므로, 가구내 생산으로 귀속된 소득은 혼합소득(mixed income)에 해당한다. 즉 가구내 생산으로 귀속된 소득은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과 생산에서 사용된 자본소비에 대한 수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Statistics New Zealand, 2001).

나. 가구내 생산의 가치

투입물 접근법에 따라 가구내 무보수 노동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다시 대체비용 접근법과 기회비용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접근법은 가구가 생산한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장 노동력의 평균임금을 가계 노동시간의 가치로 사용하는 것이며,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접근법은 비시장 가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포기한 시장 임금을 가구내 노동의 기회비용으로 간주하여 경제 전체의 평균 세후 시간당 임금을 가계 노동시간의 가치로 사용하는 것이다. 기회비용 접근법은 노동과 여가 간의 선택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은퇴자나 실업자와 같이 시장 임금을 기회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반면 대체비용 접근법은 노동과 여가 간의 선택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경우에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가내 노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효용이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면 정원 손질)에는 노동의 가치를 대체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또한 대체비용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대체 노동력의 임금을 사용할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대체 노동력의 임금을 사용할지의 선택이 필요하다.

자본투입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구재 스톡의 가치를 구하고 내구재 스톡의 일정 비율만큼 가내 생산에 활용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이 때 내구재 스톡의 가치는 영구재고법을 이용해서 구하고, 여기에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곱함으로써 자본투입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다. 가구내 생산을 위한 위성계정

가구내 생산의 가치를 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므로 기존의 국민계정에 가구내 생산의 가치를 직접 추가하기보다는 별도의 위성계정을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위성계정은 국민계정체계의 중심체계와 완전히 통합되기 어려운 특정 분야를 다루거나 국민계정의 특정 항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하는 부속계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계정에 포함되는 시장 활동과 달리 가구내 서비스 생산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의 다른 부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이다. 또한 가구내 생산을 국민계정의 생산 범위에 포함시키면 대부분의 개인들이 취업자로 분류되어 고용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구내 생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성계정을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작성에 대해서는 UNECE Task Force on Valuing Unpaid Household Service Work가 만들어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위성계정은 국민계정과 별도로 작성되는 계정이라는 하지만, 기존의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자료와 일관된 database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계정체계와 위성계정체계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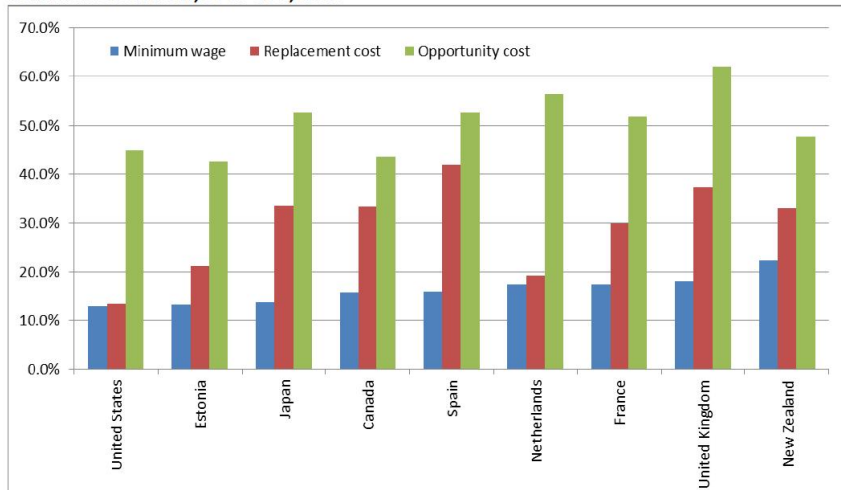
노동시간의 암묵적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기회비용 접근법과 대체비용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접근법의 선택에 따라 가계 생산의 평가

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접근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현행 생활시간 조사(time use survey)는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계의 시간 사용 패턴에 대한 장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민계정과 같이 분기별 혹은 연도별 변화를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노동시간의 가치를 기회비용과 대체비용 중 무엇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가계생산의 경상가치는 상당히 달라지지만, 각 접근법 내에서 가계생산의 실질가치를 구해보면 국가간 비교나 기간간 비교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위성계정은 나름대로의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아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내 생산의 가치는 (대체비용 접근법에 의할 경우) GDP 대비 약 30% 정도의 규모로 추정된다.

[그림 16] 외국의 가구내 생산의 가치

Figure 2: Value of labour costs imputed for the time spent on production of household non-market services, % of GDP, 2010



주: Landefeld and McCulla(2000)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가계생산 위성계정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는데, 생활시간 조사 주기를 반영하여 199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격으로 추

정이 되었다. UN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체비용 접근법을 활용하였으며, 추정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명목 GDP 대비 약 2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현재 성별, 연령별, 가구원수별, 취업여부별 등의 기준에 따라 발표되어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기준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취업여부별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개인’들을 대상으로 추정되어 있으나, 가구내 생산 및 소비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이므로 취업여부별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도 취업가구와 비취업가구로 구분하여 추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구주가 실업자가 되는 경우 비취업자로서 이전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원래 비취업자이던 가구주의 배우자는 가구주가 가사를 분담함에 따라 이전보다 가사노동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인’을 단위로 하여 작성되는 가계생산은 이러한 가구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비취업개인과 취업개인의 차이만이 아니라 비취업가구와 취업가구의 차이도 중요할 수 있다. 이 때 취업가구와 비취업가구의 구분은 가구주의 취업상태나 취업중인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매 5년마다 추정이 되지만, 경기변동에 따른 가구의 후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짧은 주기의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기침체기에는 평균적으로 가구 내 비취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무급 가사노동의 양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나, 단위 노동의 가치에 해당하는 시장임금이 둔화됨에 따라 가사노동의 가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고빈도(high frequency) 자료를 통해서만 분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생활시간 조사의 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디지털/공유 경제의 측정

최근 들어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또다른 부문으로 디지털/공유 경제를 들 수 있다. 디지털 경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

직 일반적인 합의는 없으나, 미국 BEA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프라, 전자상거래, 디지털 미디어 등을 디지털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는 개인간(P2P) 거래와 같은 공유경제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에는 무료 콘텐츠들도 포함된다. 한편 영국 통계청에 의하면 공유경제란 ‘디지털 중개 플랫폼에서만 가능한 개인간 거래를 통해서 자산의 주된 사용 외의 이용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사용 빈도가 낮은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와 공유 경제의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서로 중복되는 면이 있다.

디지털/공유 경제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디지털/공유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무료 디지털 콘텐츠는 가격이 없다는 점에서 가구내 생산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즉 무료 디지털 콘텐츠가 제공하는 후생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가격(shadow price)을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등은 가격이 없이 무료로 제공되므로 그로 인한 후생의 증가를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GDP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공유경제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공유경제 활동이 P2P 거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 등 행정자료를 통해서도 제대로 포착되지 못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유경제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외국회사인 경우 데이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은행 직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은행 거래를 지금은 개인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다양한 발권과 예약 서비스도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민계정 체계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서비스 생산이 당연히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의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는 최근 미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위에서 언급된 어려움들로 인하여 여기서도 공유경제 및 무료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의 다양한 현상을 기존의 국민계정 체계에 포함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구내 생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도 별도의 위성계정 개발을 통하여 기록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현재 OECD의 디지털경제 측정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Measuring GDP in a Digitalised

Economy)에서 디지털 위성계정의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디지털/공유 경제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디지털/공유 경제의 많은 부분이 중개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플랫폼 제공자의 수입을 통해 디지털/공유 경제의 생산 가치가 상당 부분 이미 GDP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디지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취한 광고 수입을 통하여 GDP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이나 무료 서비스 제공자의 수입만으로 포착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공유경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P2P 거래와 개인의 서비스 생산은 일종의 무급 가사노동을 통한 가구내 생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보완을 통하여 이러한 공유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인적자본

인적자본은 물적자본과 달리 추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등 강건성에 문제가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이나 고등교육 이수율 등 대리변수를 지표로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적자본의 측정에 있어서 비용접근법과 평생소득접근법 간의 추계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방식의 차이에도 기인하지만, 추계를 위한 기초통계가 부족하여 추계 과정에서 많은 가정이 설정되는 데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계 결과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아울러 기초통계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용접근법의 경우 교육비와 직업훈련비의 포괄 범위를 점검하여, 누락되는 교육 및 훈련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비보다 기업의 직업훈련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훈련비는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기업 직업훈련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 기업패널조사」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범위나 조사항목이 제한적이다.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와 「기업 직업훈련 실태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2,850개, 4,500개의 기업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인적자본 기업패널조사」는 NICE 신용평가의 기업데이터 대상 기업중 근로자 100인 이상인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500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사항목도 대부분 직접적인 직업훈련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장훈련이나 자기계발은 시행 여부 정도만 조사하고 있다.

한편 평생소득 접근법에서는 다음의 식과 같이 취학과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의 평생소득의 경우,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평생소득과 현 시점에서의 교육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의 기대 소득의 합으로 계산한다.

$$\begin{aligned}
 mi_{y,s,a,e} &= emr_{y,s,a,e} * ain_{y,s,a,e} \\
 &+ \sum_{\bar{e}} senr_{y,s,a,e/\bar{e}} \left\{ \left[\sum_{t=1}^{T_{e/\bar{e}}} sr_{y,s,a+t} * mi_{y,s,a+t,\bar{e}} \left(\frac{1+g}{1+r} \right)^t \right] / T_{e/\bar{e}} \right\} \\
 &+ \left\{ 1 - \sum_{\bar{e}} senr_{y,s,a,e/\bar{e}} \right\} sr_{y,s,a+1} * mi_{y,s,a+1,e} \left(\frac{1+g}{1+r} \right)
 \end{aligned}$$

여기서 $mi_{y,s,a,e}$, $emr_{y,s,a,e}$, $ain_{y,s,a,e}$ 는 각각 특정 연도(y)에 특정 연령(a), 성(s), 교육수준(e)을 지닌 사람의 시장 평생소득, 고용률, 평균 연간소득을 나타낸다. 한편 $senr_{y,s,a,e/\bar{e}}$ 는 특정 연도(y)에 특정 연령(a), 성(s), 교육수준(e)을 지닌 사람이 상위 교육(\bar{e})에의 등록율을, $T_{e/\bar{e}}$ 는 교육수준(e)을 지닌 사람이 상위교육(\bar{e})을 이수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연한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sr_{y,s,a+1}$ 는 1년 생존 확률(probability of surviving)을, g 는 소득증가율을, r 은 할인율을 각각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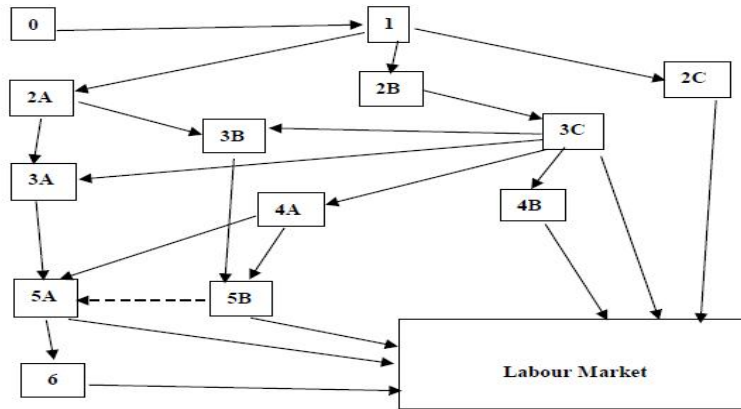
따라서 평생소득접근법으로 인적자본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교육단계별로 다음 교육단계로 이행할 확률과 교육단계별 소요 기간이 중요하다.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는 다음의 <그림 15>와 같이 전체 교육경로를 상정하고 각 단계별 소요기간 및 진학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평생소득접근법에 의한 인적자본 추계의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가능하면 5세 단위가 아니라 1세 단위로 층화하고, 성·연령·학력별 피용자의 임금 및 자영업자의 노동소득 자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교육기본통계조사」와 같이 각급 학교의 연령별 재학생 수만 집계할 뿐 아니라, 재수 및 반수를 포함하여 각급 학교간 진학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급 학교별 법정 교육연한이 아닌, 휴학 등을 반영한 실제 교육연한에 대한 통계도 작성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노동자의 해외 이주 및 외국인의 이민에 따른 인적자본의 변화가 커질 수 있으므로, 노동력의 유출입에 대해 학력 및 경력과 관련된 통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최종 학력은 조사하고 있다. 반면 해외 이주 내국인에 대한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고 있는데 출국 목적만 조사되고 학력은 조사되지 않고 있다.

[그림 17] ISCED97 진학경로

0	초등교육 이전단계
1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2	하급 중등교육(lower secondary education)
2A	일반 상급 중등교육(3A, 3B)으로의 진학을 위한 중등교육
2B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상급 중등교육(3C)과 연계된 중등교육
2C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중등교육
3	상급 중등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
3A	고등교육(5A)으로의 진학을 위한 상급 중등교육
3B	직업 고등교육(5B)으로의 진학을 위한 상급 중등교육
3C	노동시장 진입, 또는 Level 4로 진학을 위한 상급 중등교육
4	중등교육후 비고등교육(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4A	고등교육 진학 준비를 위한 교육
4B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5	일차 고등교육(first stage of tertiary education)
5A	일반 대학교육 및 의치대
5B	직업에 특화된 전문 대학교육
6	이차 고등교육(second stage of tertiary education)



자료: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1997, UNESCO, 2006.

제2절 성장·안정 영역 통계 실행계획

1. 부문별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가. 성장 영역

1) 단기

성장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중 단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기업동학

기업동학 하위영역에서 보조지표로 기업진입률 및 퇴출률을 지표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동학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방대하지만 기업동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차원에서 진입률과 퇴출률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통계청 기업행정생멸통계가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어 즉각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경쟁 및 규제환경, 시장집중도

경쟁 및 규제환경 하위영역에는 주요지표로 시장집중도 지수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제조업에 대한 통계는 생성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시장집중도는 연단위 생성이 되지 않고 있어 경제 전체에 대한 시장집중도 내지 경쟁적 환경에 대한 정보는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세부산업별 시장집중도가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경제 전체를 집계한 지표를 생성하여 시장집중도를 평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현재 기업들의 출하액만으로 계산되는 시장집중도는 수출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내수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에 대

한 시장집중도를 가중평균하여 지수를 도출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전체 경제에 대한 경쟁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비중을 통제하지 않아 정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로 보인다. 또 하나의 접근법은 산업구분 없이 상위 기업들의 부가가치 점유율을 측정하는 일반집중도를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출하액 기준으로 산출되는 현재 방식의 시장집중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광업제조업조사 내 수출변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적자본

인적자본의 경우 신뢰할 만한 추계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단기적으로 기초통계, 특히 교육훈련비와 교육단계별 진학 관련 통계는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훈련비의 경우, 현재 조사대상 범위가 가장 큰 「기업 직업훈련 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집체훈련의 인원, 시간, 비용과 원격훈련 및 현장훈련 실시 여부 그리고 자기계발 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원격훈련과 현장훈련 등에 대해서도 인원과 시간을 조사하고, 자기계발 지원금액도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적인 훈련비용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교육대상자의 평균 임금도 조사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도 비형식교육의 한 형태로 직업능력 향상교육이 조사되고 있으며, 참여율뿐 아니라 참여시간 및 자기부담학습비도 조사되고 있어 인적자본 추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이나 국가로부터의 지원금 여부는 조사되지 않고 있는데, 「기업 직업훈련 실태조사」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간 일관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항목에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단계별 진학 관련 통계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학 및 취업 상황은 조사하고 있으

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사를 실행하거나, 「교육 기본통계조사」에서 각 교육기관의 재학생 현황뿐 아니라 교육기관 입학생의 직전 단계 교육상황을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졸업생 관련 통계항목에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해외로 유출되는 노동력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 및 이민 목적의 출국자에 대해서는 학력 및 국내 취업경력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가계생산 위성계정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현재 성별, 연령별, 가구원수별, 취업여부별 등의 기준에 따라 발표되어 있는데, 새로운 기준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취업여부별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하거나, 가구소득 분위별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생활시간 조사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가구의 유형별(가구주가 비취업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로 각 가구에 속한 개인들의 가사노동의 가치의 합을 구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가구 유형별로 포괄적인 소득(통상적인 소득과 가구내 생산의 가치를 합친 값)의 크기를 추정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기

총요소생산성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생산성 하위영역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측정의 정확도 제고 문제가 있다. 총요소생산성 측정에는 생산요소의 기여분을 제외한 순수한 생산성 증가분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선 자본스톡의 세부 유형별 구성에 따른 물가지수 및 세부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

할 뿐만 아니라, 무형자본 측정에 필요한 세부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요소의 산출탄력성에 대한 추정 또는 합리적 가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측정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이는 생산요소의 산출탄력성에 대한 추정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생산함수를 도출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경쟁적 요소시장을 가정한 성장회계방정식을 이용하는 접근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규제지수

경쟁 및 규제환경 하위영역에 필요한 규제지수에 대한 통계가 현재로서는 생산되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규제 및 간섭의 정도에 대한 국제비교 통계 (World Bank, Fraser Institute 등)는 제공되고 있으나 대부분 설문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낮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규제지수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며 입법 및 행정기관에서 규제총량에 대한 통계를 생성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진입규제 (허가, 등록, 신고 등), 영업상 규제 등에 대한 통계를 생성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편 기업 및 개인이 느끼는 규제의 강도에 대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지표들을 포함하는 설문조사 형태의 새로운 통계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인적자본

인적자본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비용접근법에 의한 인적자본 추계와 평생소득법에 의한 인적자본 추계 간 차이를 점검하여,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두 접근법의 특성상 평생소득법에 의한 추계가 비용접근법에 의한 추계보다 클 수밖에 없으나, 현재는 외국의 사례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인적자본 추계 과정에 필요한 미래소득의 증가율과 할인율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는 임금과 이자율을 사용하고 있지만, 임금은 인적자본 이외에도 물적

자본의 축적에 의해 변화할 수 있고 이자율도 시간에 따른 할인율뿐 아니라 위험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나 시점 간 인적자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을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양적 지수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의 가격지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국가간 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어떤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수측정 방법은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생활시간 조사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생활시간 조사 주기를 반영하여 매 5년마다 추정이 되지만, 경기변동에 따른 가구의 후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짧은 주기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가계생산의 가치는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침체기에는 평균적으로 가구 내 비취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무급 가사노동의 양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시장 임금이 하락하여 가계생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고빈도(high frequency) 자료를 통해서만 분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생활시간 조사의 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0] 부문별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영역	부문	주요 사항	개선방안	실행계획	
				구분	비고
성장	성장물	○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보완 -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 추정 - 위성계정 추정 주기 단축	○ 가구 유형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계산 - 취업자(가구주 기준) 가구, 맞벌이 가구 등 - 생활시간 조사 주기 단축	단기 장기	
	생산성	○ 총요소생산성 측정의 문제 - 생산요소의 기여를 제외한 순수 생산성 증가분 측정 - 자본스톡의 세부 유형별 구성에 따른 물가지수 및 세부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 - 무형자본 측정에 필요한 세부 데이터 구축 - 생산요소의 산출탄력성에 대한 추정이 필요함	○ 총요소생산성 측정의 체계화 - 생산요소의 산출탄력성에 대한 추정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생산함수 도출 - 경쟁적 요소시장을 가정한 성장회계방정식을 이용하는 접근법도 고려	장기	
	물적자본				
	인적자본	○ 교육훈련비 포괄범위 - 직업훈련비 조사에서 직접적인 직업훈련만 금액을 조사 - 현장훈련이나 자기계발의 경우 시행 여부만 조사	○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을 확대 - 원격훈련과 현장훈련에 대해 인원과 시간을 조사 - 자기계발지원금액도 조사항목에 포함 - 가능하면 교육대상자의 평균임금도 조사항목에 포함	단기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의 직업능력 향상교육에서의 참여시간 및 자기부담 학습비 자료와도 비교하여 일관성 점검

영역	부문	주요 사항	개선방안	실행계획	
				구분	비고
		○ 교육단계간 이행 확률 및 소요기간 파악 미흡 - 각 교육단계별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다음 교육단계로의 이행 확률은 파악되지 않음. - 또한 법정 교육연한이 아닌 실제 교육연한은 조사되지 않고 있음.	○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 조사항목을 확대 - 입학생의 직전 단계 교육 상황을 조사 - 졸업생 관련 통계에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포함	단기	
		○ 해외 취업 및 이민의 학력 등에 대한 조사 미흡 - 해외 이주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목적만 조사하고 학력은 파악되지 않음.	○ 취업 및 이민 목적의 출국자에 대해서는 학력 및 국내 취업경력 등을 추가로 조사	단기	
		○ 인적 자본 추계의 강건성 낮음	○ 추계 방법 개선 노력 지속 - 비용접근법과 평생소득법 간 추계 결과 차이 점검 - 미래소득 증가율, 할인율의 적정 지표 모색 - 국가 및 시점간 비교를 위해 적절한 가격지수, 구매력평가환율, 지수측정방법 모색	장기	
	혁신				
	기업동학	○ 기업진입률 및 퇴출률 지표에 추가 - 기업동학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진입률과 퇴출률이 의미가 있음	○ 통계청 기업행정생멸통계 활용 - 통계청에는 기업행정생멸통계가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음	단기	
	경쟁 및 규제환경	○ 신규 규제지수의 필요성 - 현재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수준	○ 규제지수의 개발필요성 - 입법 및 행정기관에서 규제총량에 대한 통계를 생	장기	World Bank, Fraser Institute 등에서 설문조

영역	부문	주요 사항	개선방안	실행계획	
				구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 - 정부규제 및 간섭에 대한 국제비교 통계 (World Bank의 WGI)는 제공되고 있으나 대부분 설문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함. - 기업 및 개인이 느끼는 규제의 강도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지표들을 포함하는 설문조사 형태의 새로운 통계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를 통해서 제공하는 국제비교 통계는 존재하나 보다 정확한 통계의 생성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집중도 지수 개발 및 활용 - 제조업에 대한 통계는 생성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시장집중도는 연단위 생성이 되지 않고 있음. - 세부산업별 시장집중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 전체를 집계한 지표를 생성하여 시장집중도를 평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수출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단지 출하액 기준으로 생성된 시장집중도는 개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집중도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에 대한 시장집중도를 가중평균하여 지수를 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산업구분 없이 상위 기업들의 부가가치 점유율을 측정하는 일반집중도를 제시하는 방안도 가능함. - 다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출하액 기준으로 산출되는 현재 방식의 시장집중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업제조업조사 내 수출변수 활용이 필요함. 	단기,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용한 광업제조업조사 통계를 가공한 일반집중도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지표 도출.
	개방				

나. 안정 영역

1) 단기

금융안정 지표체계 정비

금융안정의 경우 지표체계 내에 너무 많은 수의 지표가 포함되면 타 영역 지표와의 균형을 잃을 수 있으며, 자칫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나열함으로써 오히려 국가발전 정도를 한눈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부 금융안정 지표의 경우에는 통계적 분석을 토대로 추출한 복합지표이다 보니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지표작성의 목적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가발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앞서 논의한 통계프레임워크를 국가주요지표에 직접 적용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영역 간 조정 및 간소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정부재정 관련 지표는 별도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제외하는 한편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내부부와 대외부부를 구분하였다. 이상의 논의 및 특징을 고려하여 앞의 해당 통계프레임워크를 국가주요지표 체계에 적용하여 작성한 [표 14]를 금융안정 지표체계로 제안하고자 한다.

[표 14]에서 보듯이 대내금융안정과 관련한 주요지표는 BIS 기준 은행업 자기자본비율을, 보조지표는 가계부채/가계가처분소득 비율, 취약부채가구 비중, 기업부채/자기자본 비율, 한계기업 비중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가계부채/가계가처분소득 비율은 OECD에서 매년 소속 회원국에 대해 그 수치를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표는 OECD 회원국 내의 국가 간 비교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도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더 많은 수의 국가에 대해 발표하고 있으므로 상기 가계부채비율의 대용 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상기 보조지표 중 ‘취약부채가구 비중’ 지표로는 매년 공표하고 있는 가구조사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활용하여 전체 가구 중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가 넘고, 총

부채/자산평가액 비율(DTA)이 100%를 모두 넘는 가구의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향후에 각 기관별로 분산된 조사·행정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가구별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상기의 취약부채가구와 관련한 지표는 보다 정교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계기업 비중’ 지표로는 전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외감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의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대외금융안정과 관련한 주요지표는 대외채무/GDP 비율을, 보조 지표는 단기대외채무/외환보유액 비율, 외환보유액/GDP 비율, 경상수지/GDP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자의적인 면이 있으므로 기간에 따라 구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며 필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의 예를 들면, 2014년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산업별 매출액, 자본금 및 종사자수 등을 이용하여 대/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고(구기준), 2015년 이후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반영하여 산업별 직전 3개 사업년도의 평균매출액,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신기준), 2016년에는 중소·중견 독립성 기준까지 반영하여 대기업(상출/기타)/중견기업/중소기업(중/소)으로 세분화하였는데(2016년개편기준), 이처럼 대기업·중소기업의 구분이 자주 바뀔 경우에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같은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는 별도로 과거와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규모 지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의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와 무관하게 매출액, 자본금, 종사자 수 등에 따른 규모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 규모 지표(예를 들면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이하, 혹은 매출액 기준 상위 1%/하위 99% 등)를 개발함으로써 기업규모별 지표들의 시계열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장기

경기조정 재정수지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을 수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기조정 재정수지 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MF에서는 『Fiscal Monitor』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선진국(Advanced Economies), 개도국(Emerging Markets, and Middle-Income Economies) 그리고 저소득 국가들(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의 일반정부 수준의 경기조정 재정수지를 편제 및 공표하고 있다. 현재 IMF에서 편제하고 공표하는 경기조정 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 (CAB))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yclically adjusted balance (CAB): Difference between the overall balance and the automatic stabilizers; equivalently, an estimate of the fiscal balance that would apply under current policies if output were equal to potential.”

일반적인 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 부분을 제거한 재정수지가 경기조정 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fiscal balance)이다.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잠재 GDP와 현재의 정책을 가정할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수지로서 경기중립적인 재정수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재정수지와 경기조정 재정수지의 차이가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대응재정 정책 운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추정을 해야 하고, 추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요 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아래 그림을 보면, 한국은 2011년 이후 경기조정적인 재정수지가 통상적인 재정수지보다 만성적으로 큰 흑자폭을 보였는데, 이를 통하여 2012년 이후 재정이 경기침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21] 한국의 재정수지(순융자) 및 경기조정 재정수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Overall Balance (percent of GDP)	1.7	1.6	0.6	0.4	0.6	1.7	1.2	1.4
Cyclically Adjusted (percent of GDP)	1.6	1.7	0.9	0.6	0.8	2.0	1.5	1.6

자료: 『Fiscal Monitor』 (April, 2018) Table A1 및 A3의 한국 부분 발췌

세대간 자원배분 통계의 편제 및 공표

국민이전계정(NTA, National Transfer Account)은 근로소득과 소비, 공적 이전 그리고 가구내 및 가구간 사적이전의 연령별 식별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 통하여 한 시점에서 연령별로 소비와 근로 소득의 차이인 적자(deficit)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연령별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유출입도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세대간 자원이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자원이 연령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국민이전계정을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이전계정의 산출을 위한 기술적인 이슈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 산출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역량 축적과 더불어 국민이전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공적연금 총당부채의 보완

현재 발생주의 국가결산에서 공표하는 연금 총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추정금액으로 ‘확정채무’가 아니며, 미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이는 현재발생부채(Accrued-to-date liability)로 평가 시점까지 발생한 수급권만을 반영한 부채로서 미래 계속 가입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의 부채이다. 저출산 및 고령

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공적연금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재정건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래 세대의 연금기여분의 현재가치까지 감안하는 개방형 포괄 부채를 산출하고 공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국가결산에서 공표하는 공적연금은 국가가 고용주체인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뿐이다. 다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금충당부채도 공표하는 것이 장래의 재정위험을 대비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22] 2017년 연금충당부채

(단위: 조 원)

	2016	2017	증가분
○ 연금충당부채	752.6	845.8	93.2
- 공무원연금충당부채	600.5	675.3	74.8
- 군인연금충당부채	152.1	170.5	18.4

자료: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지역소득계정의 개선

현재 지역소득계정은 생산접근법에 의해서만 작성되고 있는데, 소득접근법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GRDP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GRDP의 추정은 전국에 대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소득계정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별 공급사용표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다지역 생산활동 기업의 생산과 같이 특정 지역에 할당하기 어려운(Extra-regio)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가상지역(quasi region)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표 23] 부문별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영역	부문	주요 사항	개선방안	실행계획	
				구분	비고
안정	금융안정	○ 건전성 관련 지표체계를 보다 균형 있게 재설계할 필요 - 기존 지표체계에서는 건전성 지표체계가 정부의 재정활동과 대외 건전성에 치우쳐 있었음. - 대내 금융안정이 취약할 경우에는 국내경제의 회복탄력성 및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 - 예컨대, 최근 들어 가계부채 급증세 등 대내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정부재정과 관련된 건전성 지표는 재정안정 부문으로 재배치 ○ 여기서는 금융안정과 관련된 균형 잡힌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대내 금융안정과 대외 금융안정으로 구분	단기	대내 금융안정과 대외 금융안정으로 구분하여 지표체계를 균형 있게 재구성
		○ 대내 금융안정과 관련된 지표체계를 작성할 필요 -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과 가계·기업 등 제도부문별 건전성을 파악할 필요	○ 대내 금융안정과 관련된 지표 추가 - 시스템적인 중요성인 큰 은행업과 가계·기업 등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작성 ex: 은행업권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가계부채/소득, 취약부채가구 비중, 기업부채/자본 비율, 한계기업 비중 등의 관련 지표 추가	단기	해당 비율지표는 은행, 가구,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가능
	재정 건전성	○ 경기조정 재정수지 작성 -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을 수량적으로 판단하고 재정수지 건전성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	○ 경기조정 재정수지 추정 방법 연구 -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별도의 추정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추정 방법 개발	장기	

114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영역	부문	주요 사항	개선방안	실행계획	
				구분	비고
		○ 국민이전계정 - 세대간 자원이전에 관한 정보	○ 다기간에 걸친 국민이전계정의 추정 - 국민이전계정의 축적을 통하여 세대간회계 계산	장기	
		○ 공적연금 충당부채의 보완 -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정 악화에 대비	○ 미래 세대의 연금기여분의 현재가치까지 감안하는 개방형 포괄 부채를 산출	장기	
	지역 균형발전	○ 특정 지역에 할당할 수 없는(extra-regio) 경제활동 - 다지역 생산활동기업에 대한 산업활동에 따른 지역배분 방법 강화 필요 - 지역의 산업활동 성과를 왜곡시킬 가능성 있음.	○ GRDP 작성시 가상지역 도입여부 검토 - SNA 2008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상지역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장기	우리의 통계작성 현실을 고려하여 가상지역 도입가능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 있음.
		○ GRDP 개선 - GRDP 추정방법의 개선	○ 소득접근법에 의한 지역소득통계 작성 - 소득접근법의 지속적 고려 ○ 지역 공급사용표의 개발 -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지역별 공급사용표 개발	장기	
	기업 균형발전	○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기준 - 대기업/중소기업의 공식적인 정의가 자주 변화하므로 시계열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범위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와는 무	○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별도의 기업규모 기준 마련 - 향후 대기업/중소기업 정의의 변동과 무관하게 과거 통계와의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단기	관련 통계 개편 논의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필요 통계 변경승인 신청시 시

영역	부문	주요 사항	개선방안	실행계획	
				구분	비고
		관	- 대기업/중소기업 분류보다 300인 이상/이하, 혹은 매출액 기준 상위 1%/하위 99% 등과 같이 별도의 기준 마련		계열비교가 작성유지여부 및 시계열 비교가능성 여부 검토해야 할 것
기타	통계작성상 고려사항	○ 작성기관 간 상호협력 및 교류 - GDP와 GRDP의 작성주체간 정합성 유지를 위한 상호협력 증진할 필요 있음.	○ GDP 및 GRDP 작성주기에 따른 정기적 협력 - 양 기관의 현실에 따라 정기적인 상호협력 방안 마련 권고		양 기관의 현실에 따라 상호협력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주요지표 작성시 국민의 의견수렴과정 - 국가주요지표는 한 국가가 발전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점을 반영하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성을 정할 필요	○ 국민의 의견수렴방안 마련 필요 - 현행 국가주요지표는 통계청, 정부기관, 전문가·학자들만이 참여하고 있음. - NGO 및 일반국민 등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장기	대국민 의견수렴 방안 마련
		○ 주요지표별 고정코드(Numbering) - 개별 지표에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할 필요	○ 개별지표별로 코드를 부여 및 코드 병기 -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 → '12.1 경제성장률'	단기	개별코드 부여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 필요

제5장

국가주요지표 개선방안

제1절 국가주요지표 현황²³⁾

1. 국가주요지표 ‘성장과 안정’ 영역

가. 국가주요지표의 개요

‘국가주요지표’는 2013년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2014년 최초로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 체계 개편 연구를 통하여 2017년부터 개편된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부문은 ‘성장과 안정’, ‘소득과 소비’, ‘고용과 노동’, 그리고 ‘교육’ 등 네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성장과 안정’ 영역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성장과 안정’ 영역

1) 영역의 구성

기존 2014년도 체계에서는 경제 부문의 영역으로 ‘국민계정’과 ‘산업과 금융’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영역의 명칭과 구성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2016년 개편에서는 ‘국민계정’ 영역과 ‘산업과 금융’ 영역을 통합하여 새로이 ‘성장과 안정’ 영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웰빙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더 근접한 명칭과 구성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기존 2014년도 체계의 ‘국민계정’ 영역과 ‘산업과 금융’ 영역에서 거시경제

23) 국가주요지표 및 삶의 질 지표의 현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www.index.go.kr) 및 이재열(2016)의 연구에 해당부분을 발췌·요약·정리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이재열(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적 측면의 성장과 안정을 반영하는 주요지표들을 선별해 내고 여기에 새로운 주요지표들을 추가한 후 적절히 재배치하여 ‘성장과 안정’ 영역을 재구성하였으며, 기존 지표들 중 신설 영역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들은 제외되었다. 2016년 개편의 결과, 현재 ‘성장과 안정’ 영역은 ‘성장’, ‘생산성’, ‘성장가능성’, ‘글로벌화’ 등 성장 측면의 4개 하위영역과 ‘건전성’, ‘소득불평등’ 등 안정 측면의 2개 하위영역을 포함한 총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하위영역별 주요·보조지표

첫 번째 하위영역인 ‘성장’ 하위영역은 기존의 ‘국내총생산’ 하위영역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 하위영역의 주요지표로는 기존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삭제되고 ‘경제성장률’이 포함되었으며, ‘국내총생산’은 ‘경제성장률’의 보조지표로 변경되었다. 한편, 웰빙은 실질 개념과 더 관련성이 높으므로 주요지표 중 명목지표는 모두 제외하고 실질지표만을 포함시켰다.

두 번째 하위영역인 ‘생산성’은 기존의 ‘산업과 금융’ 영역의 하위영역으로서, ‘성장’ 영역에 이어서 현재 국민들의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영역의 주요지표는 노동투입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생산물이 창출되는가를 나타내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다. 보조지표는 기존의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총요소생산성증가율’, ‘기업영업이익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하위영역인 ‘성장가능성’ 영역은 2016년 개정에서 신설되었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미래 성장과 발전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적 요소들이 배치되었다. 이 영역은 기존 ‘국민계정’ 영역의 ‘투자’ 하위영역과 ‘산업과 금융’ 영역의 ‘기술혁신’ 하위영역을 통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지표로는 기존의 ‘총고정투자율’과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을 유지함과 아울러 경제의 동태적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창업률’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에는 기존 주요지표였던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수’가 보조지표로 포함되었고, ‘창업률’의 보조지표로는 ‘벤처기업수’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하위영역으로는 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로벌화’가 독립적인 하위영역으로 새로이 포함되었다. 기존 ‘국민계정’ 영역의 ‘GDP 대비 수출입비율’과 ‘산업과 금융’ 영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이 주요지표로 구성되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진국 지원 수준을 나타내는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도 주요지표로 추가되었다.

다섯 번째로는 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건전성’이라는 하위영역이 추가되었다. 이 영역의 주요지표로는 정부 및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기존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있으며, 대외거래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도 포함되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보조지표는 ‘국민부담률’,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 ‘정부지출구성’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하위영역은 소득계층 간 차이를 나타내는 ‘소득불평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하위영역은 원래 ‘소득과 소비’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6년 개편에서 ‘성장과 안정’ 영역으로 이동되었다. ‘소득불평등’은 ‘건전성’과 더불어 경제의 안정성 측면을 나타내는 하위영역에 해당한다. 기존과 동일하게 주요지표는 ‘지니계수’, 보조지표는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빈곤율’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14년 지표체계에서 국 민웰빙이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개선 내지 향상의 방향성이 모호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들은 2016년 체계에서 삭제되었다.

[표 24] '성장'과 '안정' 영역 지표체계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성장	• 경제성장률	• 실질 국내총생산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생산성	• 노동생산성 (시간당)	•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 OECD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성장가능성	• 총고정투자율	• 총고정투자증가율	• OECD 주요국의 총고정투자율
	• 창업률	• 벤처기업수	• OECD 주요국의 창업률
	•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수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 OECD 주요국의 특허출원수
글로벌화	• GNI 대비 수출입비율	• 상대국별 수출비율 • 상대국별 수입비율	• 주요국의 GNI 대비 수출입비율
	•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	• GDP 대비 거주자해외직접투자비율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
	•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		•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
건전성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 국민부담률 •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 • 정부지출구성	• 주요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 국가채무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 •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비율	•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 경상수지와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	• GDP 대비 대외채무비율 • GDP 대비 외환보유액비율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 • 주요국의 GDP 대비 대외채무비율
소득불평등	• 지니계수	• 소득5분위배율 • 상대빈곤율	•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

* 출처: 국가주요지표 홈페이지(www.index.go.kr)에서 인용.

제2절 평가 및 개선안

1. 국가주요지표 평가

현행 국가주요지표의 ‘성장과 안정’ 영역의 체계는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 프레임워크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성장과 안정 영역의 통계 프레임워크 방안에 비추어볼 때 현행 체계는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국민계정의 보완

Stiglitz-Sen-Fitoussi 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성과의 측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GDP로 대표되는 국민소득계정은 경제 전반적인 생산활동을 파악하는 데 가장 유용한 통계종의 하나이지만, 잘 알려진 바와 국민소득계정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국민소득계정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므로, 가구나 생산(육아, 청소, 요리 등 서비스 활동)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서비스의 가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의 감축과 더불어 여가 및 가구나 생산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새로운 지표체계에는 가구나 생산의 가치에 관한 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나 생산의 가치에 대한 통계는 주로 위성계정의 형태로 작성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가계생산 위성계정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현재 199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격으로만 추정이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관측치의 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통하여 기존의 국민계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요한 생산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소득계정은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활동만을 반영하므로 경

제적 성과의 분배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Stiglitz-Sen-Fitoussi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기본적으로 개인 후생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성과의 측정은 분배의 문제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단 우리나라 국가주요지표체계의 경우 개인 차원에서의 소득분배는 ‘소득·소비·자산’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성과의 분배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역소득계정을 보완·발전시켜 ‘성장과 안정’ 영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통계가 국가경제 전체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지역소득통계는 지역별 경제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성장’ 영역의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보조통계로서 지역소득통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아래에서 다시 설명되듯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안정’ 개념의 중요한 한 축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지역소득통계를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보조자료로서가 아니라 ‘안정’과 관련된 주요자료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

나. 생산성의 강조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의 제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영역에서는 노동자 1인당 생산성 혹은 노동 1시간당 생산성의 제고와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현행 지표체계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행 체계에는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만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적자본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생산성의 제고를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총수요가 아닌 총공급능력 측면에서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국가주요지표 체계에서는 총수요 요인에 따른 인한 경기변동적 성장보다 총공급 요인으로 인한 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지표체계에 총고정투자율과 고정투자증가율이 모두 포함

되어 있는 것은 지표체계의 목적성을 다소 흐리는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정투자 증가율의 경우 장기적 성장보다 경기적 요인을 반영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성의 장기적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환경적 요인들도 중요한데, 현행 지표체계에는 직접적으로 제도환경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물론 제도환경을 수량화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 관련 지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실제로 제공되는 지표체계에 포함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제도환경에 관한 하위영역을 일단 개념적으로 설정해두고 향후 관련 지표개발을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안정 개념의 재정립

현행 국가주요지표체계의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 ‘안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전성’과 ‘소득불평등’ 하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건전성’ 하위영역은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건전성에 관한 지표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제 전반적인 건전성과 경제위기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건전성에 관한 지표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득불평등’ 하위영역은 소득분배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념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성장과 안정’의 여타 영역들이 모두 거시 통계자료들을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미시자료에 기초한 지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또한 개인간 소득분배에 관한 지표들을 ‘소득·소비·자산’ 영역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정’ 영역에는 개인간 소득분배 대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지역소득통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비단 지역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므로 대기업-중소기업간 균형발전에 관한 지표들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주요지표 개선안

기존의 ‘성장과 안정’ 영역 내에 국민경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안으로는 ‘성장과 안정’ 영역을 ‘성장’ 영역과 ‘안정’ 영역 등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지표체계에서는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가 ‘소득과 소비’ 영역과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개선안에 대한 별도의 연구에서 ‘성장과 안정’ 영역의 ‘소득불평등’ 하위영역을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성장과 안정’ 영역의 ‘소득불평등’ 하위영역은 제외하기로 한다. 단,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소득분배는 건전성과 더불어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주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인들(가구들)간의 소득분배는 ‘소득·소비·자산’ 영역에서 다루되, 본 연구의 ‘안정’ 영역에서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분배적 측면을 다루기 위하여 균형발전을 하위영역으로 포함시키기로 한다.

가. ‘성장’ 영역

‘성장’ 영역은 ‘성장’, ‘생산성’, ‘물적자본’, ‘인적자본’, ‘기업동학’, ‘혁신’, ‘개방’ 등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현행 국가주요지표 체계와 비교하면, ‘성장과 안정’ 영역 중 ‘성장’과 ‘생산성’ 하위영역을 그대로 가져왔고 여기에 현행 ‘성장가능성’ 하위영역을 ‘물적자본’, ‘인적자본’, ‘기업동학’, ‘혁신’ 등의 하위영역으로 세분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글로벌화’ 하위영역의 명칭을 ‘개방’으로 바꾸었다.

지표 수준의 세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장’ 영역의 주요지표는 현행과 같으며, 보조지표로는 가구내생산 위성계정을 추가하였다. ‘생산성’ 영역이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는 현행과 동일하다.

신설된 ‘투자’ 하위영역에는 현행 ‘총고정투자율’을 주요지표로 삼았

으며 ‘GDP 대비 고정자산비율’을 신규 보조지표로 추가하였고 현행 ‘총 고정투자증가율’ 보조지표는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 국민대차대조표상 자본소득의 추계를 통하여 국가경제 차원의 고정자산에 대한 통계치가 사용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자본축적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GDP 대비 고정자산비율이 국가의 발전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본 개편안에서는 물적자본과 관련된 ‘투자’ 하위영역에 더하여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인적자원’ 하위영역을 신설하였다. ‘인적자원’의 주요지표로는 신규로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조지표로는 신규로 ‘평생학습 참여율’을 추가하였다. 인적자본의 양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주요지표로 적합하지만 교육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적자본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고등교육 이수율을 주요지표로 사용하였다.

신설 ‘기업동학’ 하위영역에는 현행 ‘창업률’을 주요지표로, 현행 ‘벤처기업수’를 보조지표로 삼고 여기에 ‘기업소멸률’을 보조지표로 추가하였다. 기업동학의 기초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진입으로 창업이 활발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소멸률을 추가하였다.

신설 ‘혁신’ 하위영역의 주요지표로는 현행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보조지표로는 현행 ‘인구 대비 특허출원수’를 사용하였다.

신설 ‘개방’ 하위영역의 주요지표로는 현행 ‘GDP대비 수출입비율’을, 보조지표로는 현행 ‘외국인직접투자비율’과 ‘거주자해외직접투자비율’ 외에 ‘외국인근로자비율’, ‘취업 및 이민 목적 내국인 출국자 비율’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표 25] 성장’ 영역 지표체계 개선안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성장	• 경제성장률	• 1인당 국내총생산 • 가국내생산(위성계정)	• OECD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생산성	• 노동생산성증가율 (시간당)	• 노동생산성증가율 (1인당)	• OECD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기업영업이익률 	
물적자본	• 총고정투자율	• 고정자산 비율 (GDP 대비)**	• 총고정투자율
인적자본	• 고등교육이수율**	• 평생학습참여율**	• 고등교육이수율
기업동학	• 창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수 • 기업소멸률** 	• OECD 주요국의 창업률
혁신	• 연구개발투자비율 (GDP 대비)	• 특허출원수 (인구 100만명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 OECD 주요국의 특허출원수
개방	• 수출입비율 (GDP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 거주자 해외직접 투자 비율 (GDP 대비) • 공적개발원조비율 (GDP 대비)* • 취업 및 이민 목적 내국인 출국자 비율 (전체 취업자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수출입비율 (GDP 대비) • OECD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나. ‘안정’ 영역

‘안정’ 영역은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 분화시켜 신설한 영역으로서, 하위영역으로는 ‘재정수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회안전망’, ‘대외안정’, ‘금융안정’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체계와 다른 점은 현행 ‘성장과 안정’ 영역의 ‘건전성’ 하위영역을 ‘안정’ 영역으로 승격시키고 해당 주요지표들을 각각 별도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성장과 안정’ 영역 지표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안전망’과 ‘금융안정’ 하위영역들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지표 수준의 세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재정건전성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반영하는 하위영역으로서 각각 ‘재정수지’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신설하였다. ‘재정수지’에서는 현행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주요지표로 삼고, ‘관리재정수지비율’ 및 ‘일반정부 순융자/차입 비율’을 보조지표로 설정하였다. 통합재정수지가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기금이 아직은 성숙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통합재정수지에 기여하는 부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보조지표로 삼았다. 또한 중앙정부뿐 아니라 일반정부 수준에서의 재정수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새롭게 ‘일반정부 순융자/차입 비율’을 보조지표로 삼았다. ‘일반정부 순융자/차입 비율’은 정부의 포괄범위뿐 아니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기초한 통계라는 점에서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와 다르다. 통계의 속보성에서는 현금주의 통계인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보다는 느리지만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유용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영역에서는 현행 주요지표인 ‘국가채무비율’을 동일하게 주요 지표로 정하였으며, 현행 보조지표인 ‘일반정부부채비율’과 ‘공공부문부채비율’에 신규 보조지표로서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비율’을 추가하였다. ‘일반정부부채비율’과 ‘공공부문부채비율’은 ‘국가채무비율’과 달리 발생주의 회계에 기초한 통계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획재정부에 의하여 편제 및 발표되고 있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기초한 통계인 ‘국가채무비율’은 주로 중앙정부부채에 지방정부의 순부채를 반영한 통계로 그 초점이 주로 중앙정부에 맞추어져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는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된다.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비율’을 추가적인 보조지표로 삼은 것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영향이 사회보장성기금인 공무원 및 군인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일반정부부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조지표로 설정한 것이다. 상술한 두 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충당부채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충당부채는 공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물론 자료의 공식적 이용가능성과는 별도로 이 두 연금이 재정에 포함이 되느냐

는 것도 별도의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신설한 ‘사회안전망’ 영역에서는 ‘사회수혜금비중’을 주요 지표로 삼고, ‘일반정부사회보호지출비중’과 ‘사회적현물이전비중’을 보조지표로 삼았다. ‘사회수혜금비중’을 주요 지표로 설정한 이유는 사회수혜금 (social benefit in cash) 구성 자체가 주요 사회안전망 수단인 사회보장수혜금, 사회보험수혜금 그리고 사회부조수혜금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수혜금비중은 국민계정 통계라는 이용상의 편의성도 있다. ‘사회적현물이전비중’도 국민계정 통계이나 주로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수혜금(social benefit in cash) 정책보다는 덜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판단하여 보조지표로 설정하였다. ‘일반정부사회보호지출비중’은 일반정부 수준의 사회보호지출을 반영한 것으로서 OECD 국가간 비교 등 국제비교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조지표로 삼았다.

신설 ‘대외안정’ 하위영역에는 현행 보조지표였던 ‘GDP 대비 대외채무비율’을 주요지표로 삼고, 현행 주요지표였던 ‘경상수지비율’과 현행 보조지표였던 ‘외환보유액비율’, 그리고 신규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대외채무 비율’을 보조지표로 삼았다. 대외안정 측면에서는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외화유동성 측면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므로 주요지표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 ‘경상수지 비율’,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대외채무 비율’ 등은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신설 ‘금융안정’ 하위영역에는 신규로 ‘은행업 자기자본비율 (BIS 기준)’을 주요지표로, 신규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취약부채가구 비율 (부채가구 대비)’, ‘기업부채 비율(자기자본 대비)’, ‘한계기업 비율 (외감기업 대비)’을 해당 하위영역의 보조지표로 삼았다. ‘은행업 자기자본비율 (BIS 기준)’은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은행부문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므로 주요지표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보조지표로 추가된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취약부채가구 비율 (부채가구 대비)’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계의 재무적 건전성과 부실위험이 큰 가구 비중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보조지표로 추가된 ‘기업부채 비율(자기자본 대비)’과 ‘한계기업 비율 (외감기업 대비)’은 우리경제의 중요한 경제주체인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부실위험에 처한 기업의 비중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신설된 ‘지역균형발전’과 ‘기업균형발전’ 하위영역에는 각각 지역별 GRDP 증가율과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주요지표로 삼았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보조지표로는 ‘지역별 1인당 GRDP’와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을 선정하였으며, ‘기업균형발전’의 보조지표로는 ‘대기업 매출액 비율’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신규 지표에 대한 작성방법은 앞의 제4장의 통계 실행계획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특정 영역 또는 분야에 포함될 지표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주요지표체계 내 타 영역 또는 분야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중요도 면에서 지표 간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각 하위영역의 경우 전체 지표 체계와의 균형과 경제·사회적 선호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작성방법의 변경 및 신설·삭제 등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표 26] 안정’ 영역 지표체계 개선안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재정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 • 일반정부 순융자/차입 비율 (GDP 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일반정부 순융자/차입 비율 (GDP 대비 %)
재정의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정부 부채비율 (GDP 대비) • 공공부문부채비율 (GDP 대비) • 공무원·군인연금 총당부채 비율 (GDP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GDP 대비) • 주요국의 공공부문부채비율 (GDP 대비)
사회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수혜금 비중 (GDP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정부 기준 사회보호지출 (GDP 대비 %) • 사회적 현물이전 (GDP 대비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일반정부기준 사회보호지출 비중 (GDP 대비)
대외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채무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수지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채무비율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GDP 대비)*	(GDP 대비)* • 외환보유액비율 (GDP 대비) • 단기대외채무/외환보유액**	(GDP 대비) • 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금융안정	• 은행업 자기자본 비율(BIS 기준)**	• 가계부채/가계가처분소득** • 취약부채가구 비중 (부채가구 대비)** • 기업부채/자기자본** • 한계기업 비중 (외감기업 대비)**	• 은행업 자기자본비율 (BIS 기준)** • 가계부채/가계가처분소득** • 기업부채/GDP**
지역균형발전	지역별 GRDP	• 지역별 1인당 GRDP •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 가처분소득의 지역비중(Disposable income per capita in TL2 regions as a share of national average, 2016) * data from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 지역별 1인당 가구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 data from OECD Regional Well-Being
기업균형발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 대기업 매출액 비율	• OECD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매출액비중(turnover by enterprise size) • OECD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임금(Compensation per employee by enterprise size, manufacturing) * data from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 기존 지표에서 단순 위치변경 등의 수정

130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 신규 편입 지표

[표 27] 현행 지표체계와 개선안의 비교

		현행지표체계		비고	개선안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성장과 안정	성장	주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주	성장	성장
		보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GDP)	보		
				신규	가구내생산 (위성계정)	보		
	생산성	주	노동생산성 (시간당)		노동생산성증가율 (시간당)	주	생산성	
		보	노동생산성지수 (1인당)		노동생산성증가율 (1인당)	보		
		보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총요소생산성증가율	보		
		보	기업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보		
	성장가능성	주	총고정투자율		총고정투자율	주	물적자본	
		보	총고정투자증가율	삭제				
				신규	고정자산 비율 (GDP 대비)	보		
				신규	고등교육 이수율	주	인적자본	
				신규	평생학습 참여율	보		
		주	창업률		창업률	주	기업동학	

132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영역	하위영역	현행지표체계		비고	개선안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글로벌화		보	벤처기업수		벤처기업수	보		
				신규	기업소멸률	보		
		주	연구개발투자비율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GDP 대비)	주	혁신	
		보	특허출원수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수 (인구 100만 명당)	보		
		주	수출입비율 (GNI 대비)		수출입비율 (GNI 대비)	주	개방	
		보	상대국별 수출비율	삭제	상대국별 수출비율			
		보	상대국별 수입비율	삭제	상대국별 수입비율			
		주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주->보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보		
		보	거주자해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거주자해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보		
					외국인근로자비율(취업자 대비)	보		
					취업 및 이민목적 내국인출국자비율(취업자 대비)	보		
		주	공적개발원조비율 (GDP 대비)	삭제				
	건전성	주	통합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주	재정수지	안정
		보	국민부담률	삭제				

영역	하위영역	현행지표체계		비고	개선안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보	정부지출비율 (GDP 대비)	삭제			
		보	정부지출구성	삭제			
				신규	관리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보	
				신규	일반정부 순융자/차입 비율 (GDP 대비)	보	
		주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주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	일반정부부채비율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 (GDP 대비)	보	
		보	공공부문부채비율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비율 (GDP 대비)	보	
				신규	사회수혜금 비중 (GDP 대비)	주	사회안전망
				신규	사회적 현물이전 비율 (GDP 대비)		
				신규	일반정부 사회보호지출 비중 (GDP 대비)		
		보	대외채무비율 (GDP 대비)	보->주	대외채무비율 (GDP 대비)	주	대외안정
		주	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주->보	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보	
		보	외환보유액비율 (GDP 대비)		외환보유액비율 (GDP 대비)	보	
				신규	단기대외채무 비율 (외환보유액 대비)	보	

134 성장과 안정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현행지표체계				비고	개선안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신규	은행업 자기자본 비율 (BIS 기준)	주	금융안정	
				신규	가계부채 비율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보		
				신규	취약부채가구 비율 (부채보유가구 대비)	보		
				신규	기업부채 비율 (자기자본 대비)	보		
				신규	한계기업 비율 (외감기업 대비)	보		
				신규	지역별 GRDP	주	지역균형발전	
				신규	지역별 1인당 GRDP	보		
				신규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보		
				신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주	기업균형발전	
				신규	대기업 매출액 비율	보		

참고문헌

- 김완희(2014), “공적연금 충당부채 회계의 이해”, 『재정포럼』 2014년 8호,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2017), 기초자치단체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영준·신석하·이혜영. 2018. “인적자본 추정 방안에 대한 연구.” 국민계정리뷰. 한국은행.
- 기획재정부, 「2014~2018년 국가채무 관리계획」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자료.
- 석현호외(2013),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 이충열외(2007), 국민계정·국제수지·외환분야 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재편 가공)
- 최병오. 2015. “우리나라의 자본스톡 확정추계 결과.” 국민계정리뷰. 17, 한국은행, 26-40.
- 통계청(2017), 지역소득통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201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알기쉬운 재정통계』
- Acemoglu(2017), Robots and Jobs: Evidence from Us Labor Markets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6),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2), Aspirations for our nation: a conversation with Australians about progress
- Autor, D.(2015),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3-30.
- BEA(2006), *Gross Domestic Product by State Estimation Methodology*
- Brian R. Keeble(1988), *The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
- Central Statistics Office(2003), *Measuring Ireland's Progress Volume 2, 2003 - Background Report*
- Courbis R.(1982), "Measuring effects of French regional policy by Means of a Regional-National Policy,"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No. 12.
- Drexhage and Murphy(2010),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Brundtland to Rio 2012.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consideration by the High Level Panel on Global Sustainability at its first meeting*
- European Union(2013), *European system of accounts - ESA 2010.*
- Fred Norris(2014), *UK REGIONAL ACCOUNTS METHODOLOGY GUIDE.*
- IMF(2018), 『Fiscal Monitor』
- JP Fitoussi, A Sen and J Stiglitz(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 Kim, Hyun Kyung(2018), 『Development of NTA &NTTA in the Republic of Korea』 , Seminar Slide
- Landefeld and McCulla(2000), *Accounting for nonmarket household production with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
- Noll, Heinz-Herbert(2002),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Background, Achievements and Current Trends." *Advances in Sociological Knowledge over Half a Centur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 OECD(1973),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
- OECD(2014), *How's life in your region?*
- OECD(2015), *How's Life 2015*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atabase*
- Statistics New Zealand(2008), *Statistics New Zealand's framework for*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Statistics New Zealand(2002), Monitoring Progress Towards a Sustainable

New Zealand UN(1989), Handbook on Social Indicators

UN(2009), System of National Account 2008.

UNECE(2016), Guide on Measuring Human Capital

부록

제1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 국민계정체계와 국민소득통계²⁴⁾

여기서는 국민소득통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기술한다. 국민소득통계는 소위 5대 국민경제통계 중 하나로서 ‘성장과 안정’ 영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소득통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계정 및 국민계정체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대부분 한국은행(2015)의 국민계정체계에 관한 해설서에서 발췌 및 인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국민계정과 국민계정체계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 국민소득통계(국내총생산, GDP)와 지역소득통계(지역내총생산, GRDP)를 비교하여 기술한다.²⁵⁾

가. 개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은 한 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을 포착하여 이를 정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기록하는 일종의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 할 수 있다. 기업이 일정기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파악을 위해 정해진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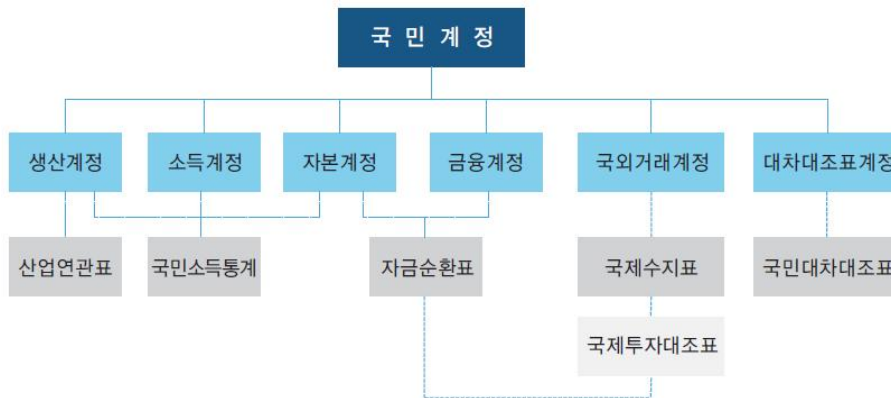
24) 국민계정체계에 대한 본고의 설명은 한국은행(2015)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에 기술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국민소득통계의 역사에 관해서는, Diane Coyle(2014)/譯김홍식(2018)의 ‘GDP 사용설명서’에서 발췌 인용하였다.

25) 본 연구에서는 전국계정과 지역계정에 대해 각각 국민소득통계와 지역소득통계로 용어를 통일하여 기술한다.

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 결과와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 전체 자산과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국민계정체계)에 따라 국민계정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이 ‘기업회계기준’이라면, 한 국가에 대응하는 작성기준이 ‘국민계정체계’라 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5; 3p).

기업의 재무‘제(諸)’표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황에 관한 ‘여러 개’의 표인 것처럼, 국민계정도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 국외거래계정, 대차대조표계정의 6개의 계정으로 구성된다.²⁶⁾ 이러한 6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5대 국민경제통계는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이다.

[부록그림 1]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출처 : 한국은행(29015), 4p.

국민소득통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 전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17세기의 영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는 전쟁을 치르고 전비(戰費)를 조달하기 위한 과세 자원을 평가하려는 목적에서였

26) 우리나라는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계정, 공공부문계정, 부표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15)의 IV장을 참조.

다(Diane Coyle, 2014/김홍식, 2018; 20p).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초창기 국민계정들의 공통점은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나라의 자산 스톡을 더 늘리는데 쓸 것이 얼마나 남는가’ 하는 것이었으며, 표준화된 기준도 없고 합의된 개념도 없어 현대의 국민소득통계의 개념 및 작성원리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현대적 의미의 국민소득통계(GDP)와 관련한 정의들의 기원은 미국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이다.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는 불황에 빠진 미국의 경제 상태에 대해 보다 분명히 파악하고자, 전국경제조사국(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 국민소득 추계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미국의 국민소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에 국민소득통계가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으며, 어떠한 방법이 올바른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논쟁은 나라 경제의 산출량만이 아니라 후생이나 국민들의 행복까지 측정하고자 했던 쿠즈네츠가 패배하고,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 보탬을 주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군비 생산을 수행할 경제의 잠재력을 측정하고자 했던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방법론이 채택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현대적 의미의 국민소득통계는 그 정의와 개념을 정립하던 초기부터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오늘날 국민소득통계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받는 한계는 국민소득통계가 개발되던 초기부터 내재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간 국민소득의 측정에서 간과되어 왔던 정부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단순히 ‘전비 조달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서의 정부’로, 정부부문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1946년부터,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유럽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지하였다. 이 당시는 모든 물자의 공급이 부족했던지라 자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얼마 후, UN이 국민계

정의 국제적 측정 표준을 정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정해진 표준이 오늘날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이다.

최초의 국민계정체계는 1953 SNA이며, 이후 1968 SNA에서는 국민경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한국은행, 2015; 6p).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산업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 정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민계정체계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공동으로 1993년에 다시 1968 SNA를 개정한 새로운 1993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의한 국민계정의 편제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그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글로벌 경제활동 심화 등으로 경제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보다 정확한 경제실상의 측정을 위한 이론적 틀이 꾸준히 마련되고, 이에 따라 통계 이용자들로부터 추계방법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08년에 1993 SNA를 개정한 2008 SNA가 발표되었다(한국은행, 2015; 6p).

나. 투입산출표와 국민소득통계의 비교

국민소득통계는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production), 소득(income) 및 지출(expenditure)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5; 75p). 이를 다음의 <부록표>와 같이 산업연관표(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는 서로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두 통계간의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²⁷⁾ 다만, 생산·분배·지출 국민소득의 산출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혀둔다.

투입산출표의 내생부문을 세로 방향으로 읽으면, 예를 들어, 농림수산물 산출물 생산에 생산요소로 투입된 농림수산물, 광산물 등을 나타낸다. 중간투입은 농림수산물 산출물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의 총액을 나타

27) 김동석(2003) 29p.

낸다. 여기에 부가가치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기타생산세 및 순생산물세를 더하면 총투입이 된다. 이러한 총투입은 언제나 총산출과 같게 된다.

생산접근법은 각 산업별로 총산출(총투입)과 중간투입을 조사한 뒤, 양자의 차이를 통해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소득접근법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을 직접 조사하여 합산함으로써 파악하는 방식이다. 즉,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기타생산세 및 순생산물세를 각각 파악하여 합산함으로써 구한다. 지출접근법은 각 상품의 산출물이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었는지 아니면 최종소비재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방식이다. 즉 투입산출표를 가로방향으로 읽는 경우, 예를 들어 생산된 전체 농림수산물 산출물이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생산요소로 투입되었는지 아니면 국내 또는 해외 소비자의 최종소비에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한 뒤, 중간수요를 제외한 최종수요만을 구하고 여기에 수입을 제외하여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국민소득통계의 3가지 접근법을 산업연관표 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ext{생산접근법 (생산국민소득)} = \text{④} - \text{①} = \text{⑦}$$

$$* \text{소득접근법 (분배국민소득)} = a + b + c + d + e = \text{⑦}$$

$$* \text{지출접근법 (지출국민소득)} = \text{②} - \text{⑤} = \text{⑦}$$

[부록표 1] 산업연관표의 구조

		내생부문							최종수요				총수요	총산출	수입	총공급	
		농림수산물	광산품				서비스	중간수요(합계)	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수출	계					
내생 부문	농림수산물																
	광산품																
	.																
	.																
	.																
	.																
	서비스																
중간투입(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부가가치 부문	국내 총생산 (GDP)	국내총 요소소득	비용자보수						a								
		영업잉여							b								
		고정자본소모								c							
		순기타생산세								d							
		순생산물세								e							
		부가가치(합계)								⑦							
총투입																	

$중간수요계 + 최종수요계 = 총수요계 (① + ② = ③)$
 $총수요계 = 총공급계 = 총산출계 + 수입계 (③ = ⑥ = ④ + ⑤)$
 $중간수요계 + 최종수요계 - 수입계 = 총산출계 (① + ② - ⑤ = ④)$
 $총산출계 = 중간투입계 + 부가가치계 (④ = ① + ⑦)$
 $중간수요계 = 중간투입계 (① = ①)$
 $최종수요계 - 수입계 = 부가가치계 (② - ⑤ = ⑦)$

한편,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서 비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합하면 국내총요소소득이 되며, 여기에 고정자본소모와 순기타생산세를 합하면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총부가가치가 된다.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총부가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국내총생산(GDP)과 일치하지 않는 데, 여기에 순생산물세를 더하면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국내총생산이 된다.

다. 기초가격, 생산자가격, 구매자가격²⁸⁾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는 여러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SNA에서는 3가지 기준에 의한 가격평가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종래에는 산출액을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거시경제환경의 변화 및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SNA1993에서부터 조세분류 체계 및 가격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세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여, 세율차이에 따른 생산구조의 왜곡방지와 순수한 생산자 몫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기초가격은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금액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에 부과되는 순조세와 구매자에게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생산자가격은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구매자로부터 수취 가능한 금액에서 모든 부가가치세와 구매자에게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유사 공제가능 세금과 운송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구매자가격은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에서 공제가능한 부가가치세와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유사 공제가능 세금을 제외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운송료를 포함한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기초가격은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통해 수취하는 대가를 말하며, 생산자가격은 기초가격에 생산물세를 더한 것이고, 여기에 운송마진을 더하면 구매자가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리가 다소 복잡한데 다음의 <부록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빵업자가 ‘빵’이라는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밀가루’와, 밀가루업자가 밀가루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밀’, 그리고 농부가 밀을 생산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기초가격, 생산자가격, 구매자가격의 구성을 통해 각각의 가격평가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 세금에 대

28) 가격평가 지침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에 기술된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기술하였다. 한국은행(2004), 논고 - 1993 SNA에 따른 공급표와 사용표의 작성절차 소개

한 처리가 다소 복잡해 보이거나, 부가가치세를 생산물세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처리한다는 점과 각각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제가능력 여부를 구분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가능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농부는 밀을 생산하여 밀가루업자에게 55원에 판매한다. 이 55원 중 5원은 부가가치세이고 밀가루업자는 추후 이 5원만큼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보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50원이며 따라서 밀가루업자가 지불한 밀의 구매자가격은 50원이다. 여기에는 거래·운송마진 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밀에 대한 생산자자인 농부가 수취하는 생산자가격은 45원이다. 한편 농부는 3원의 생산물세와 5원의 생산물보조금을 받으므로 밀의 생산을 통해 농부가 수령하는 순수한 가치는 47원이 된다. 제빵업자는 밀가루업자에게 110원을 지불하고 밀가루를 구입한다. 여기에서 10원은 부가가치세이므로 이를 제외한 100원만이 밀가루의 구매자가격이 된다. 제빵업자도 빵을 판매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밀가루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0원을 부담하지 않는다. 구매자가격 100원에서 거래·운송마진 5원을 제외한 95원이 밀가루에 대한 생산자가격이 된다. 밀가루업자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나 생산물세 4원을 부담하므로 밀가루의 기초가격은 91원이 된다. 소비자가 최종소비자인 ‘빵’을 제빵업자로부터 220원에 구입하므로, ‘빵’이라는 재화의 구매자가격은 220원이다. 소비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최종소비자이므로 빵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0원을 포함한 220원이 구매자가격이 된다. 여기에는 거래·운송마진 7원과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20원은 생산자가 수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193원이 제빵업자가 수취하는 생산자가격이 된다. 빵 생산에 부과되는 생산물세를 제외하면 빵 생산을 통해 제빵업자가 순수히 수령하는 경제적 가치는 185원이며 이것이 빵의 기초가격이 된다.

다소 복잡해 보이기 는 하나, 핵심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제적 귀착은 최종소비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되,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법적 귀착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중간재의 생산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가격은 해당 재화의 구매자의 입장에서, 생산자가 가격 및 기초가격은 해당 재화의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보다 이해가 쉽다.

[부록그림 2] 기초가격, 생산자가격, 구매자가격 평가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밀가루업자 (밀)	제빵업자 (밀가루)	최종수요 (빵)	비고
구매자 지불금액	55	110	220	
(-)공제가능VAT	5	10	0	
(-)유사공제가능세금	0	0	0	
구매자가격	50	100	220	
(-)거래·운송마진	5	5	7	운송료, 도소매마진
(-)공제불능VAT	0	0	20	
생산자가격	45	95	193	
(-)생산물세(VAT제외)	3	4	8	수입세포함
(+)생산물보조금	5	0	0	
기초가격	47	91	185	

출처: 한국은행(2004), 논고 - 1993 SNA에 따른 공급표와 사용표의 작성절차 소개

이처럼 1993 SNA부터 간접세를 생산세로 변경하고 생산물세와 기타 생산세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세법상의 각종 조세들을 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부록표 >와 같다. 다만, 생산물세에서 부가가치세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처리한다.

생산물세는 주로 생산량에 비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구성되며, 부가가치세와 수입세 및 기타생산물세로 구성된다. 기타생산세는 생산활동에 부과되는 조세이기는 하지만, 주로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 세금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생산물세는 가변비적 성격, 기타생산세는 고정비적 성격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부록표 2] 생산세 및 생산물세의 구분

생산물세	부가가치세
	수입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특세의 해당부분, 관세)
기타생산물세	특소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농특세*, 교육세, 주행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기타생산세	인지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지역개발세, 세외수입

이주용(2003), 국민계정에서의 생산세 처리방향, 계간 국민계정 제1권, 제1호.

라. 국민소득통계의 작성방법

2008 SNA에서는 몇 가지 회계규칙(accounting rules)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록원칙은 사중기입부기(quadruple-entry bookkeeping)이며, 기록시점은 발생주의(accrual accounting)로 기록된다. 재화 및 서비스는 시장가격(market prices)에 의해 평가된다. 기초가격에 순생산물세를 더하면 생산자가격이며 여기에 유통마진까지 더 하면 구매자가격이다. 기초가격²⁹⁾은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할 때 생산자가 실제 가져가는 몫을 말한다. 기초가격에 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생산물세를 더하면 생산자가격이 되고, 여기에 유통마진을 더하면 구매자가격이 된다.

미국의 경우, GDP와 GRDP의 작성기관이 동일하며, GDP는 2번의 업테

29) 세금이나 보조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각 산업부문의 국민경제에 대한 비중, 기여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보다 유용하기 때문에 총산출은 기초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한국은행, 2015; 61p).

이트를 통해 확정치를 발표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특정지역에 할당할 수 없는 경제활동(예를 들면, 해외 과병군인·해외주재 대사관 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가상지역(quasi-region)’을 설정하여 할당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각 주별 GRDP의 합계는 미국 경제 전체에 대한 GDP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상지역을 GRDP 작성시 가상지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GRDP의 합계와 GDP 수치가 일치한다.

마.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와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s)

제도단위는 그 자체로,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발생시키고, 경제 활동과 다른 단체와의 거래에 종사 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이다(SNA 2008, 4.2). 제도단위에 대한 거주성 원칙에 따라, 거주성이 없는 경우는 국민소득통계 작성에 포함되지 않으며, 거주성이 있는 제도단위들에 대해서만 작성된다. 가구 또는 시설가구는 ‘가구’라는 제도부문으로 편제하고,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 여부에 따라, 시장생산자인 경우는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으로 구분하여 제도부문으로 편제한다. 시장생산자가 아닌 경우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기관(NPISH)’과 ‘정부부문’으로 편제한다. 이처럼, 경제적 실체인 여러 제도 단위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 제도부문이다.

[부록표 3] 국민계정체계의 제도단위와 제도부문

제도단위	거주성 無		ROW*	
	거주성 有	가구	가구	
		시설가구		
		시장 생산자 YES	금융기업	공공금융기업
				외국금융기업
				민간금융기업
		시장 생산자 NO	비금융기업	공공비금융기업
	외국비금융기업			
민간비금융기업				
		NPISH		
		정부부문		

주: 제도부문을 이중선으로 표기.

* ROW(Rest Of the World)는 거주성이 없으므로 측정에서 제외

2. 지역소득통계

가. 개요

지역내총생산(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이란 전국에 대한 국민소득 통계(전국)에 대응하는 지역별 계정이다(ESA2010, 13.01). 지역소득통계는 지역의 경제구조, 발전 및 경제성과에 대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역소득통계 작성에 적용되는 개념 및 정의들은 모두 국민소득통계 작성에 적용되는 것들과 동일하지만, 몇 가지 개념적 측면과 측정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작성에 있어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소득통계 작성에 있어서는 국민소득통계와의 일치 문제, 즉 GDP와 GRDP간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며, 지역의 경제성과를 적절하게 나타내는 통계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측정방법 상의 문제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국 및 지역의 경제적 성과 및 위험, 그리고 미래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하고 성장과 안정영역의 통계작성에 관한 논리적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통계작성의 개념들을 제시함에 있다. 따라서 과거 또는 현재의 지역소득통계 작성에 있어 방법상의 적절성을 살피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통계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관련 통계의 개선 및 신규지표 개발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도록, 지역소득통계에 대한 개념 및 국민소득통계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최근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득통계가 갖는 개념적 한계로 인하여 본절의 논의의 상당부분은 방법론상의 문제에 할애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특히 국민소득통계와 지역소득통계는 사용되는 개념과 정의가 동일하지만 통계작성의 실무상 국민소득통계가 먼저 작성되고 지역소득통계가 나중에 작성되기 때문에, 지역소득통계 작성시에는 양자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 지역소득통계의 개념 및 국민소득통계와의 관계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역소득통계란 국민소득통계에 대응하는 지역별 계정이다. 인구 및 경제활동의 규모 및 구성,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은 서비스산업에 특화되는 반면, 비도시지역에는 농업이나 광업, 제조업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ESA2010, 13.03). 게다가, 4차 산업혁명(빅데이터, 인공지능, 공유경제 등), 글로벌화, 지속가능발전(기후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최근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이슈들의 경우, 전국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기 보다는 특정 지역 또는 산업에서 보다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을 포괄하는 국민소득통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거나 또는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국민소득통계보다는 지역소득통계 작성과정에

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SA 2010에 따르면, 지역소득통계의 작성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향식 방법(bottom-up methods), 하향식 방법(top-down methods), 그리고 혼합식(a mixture of bottom-up and top-down methods)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향식 방법이란 시·군·구와 같이 보다 하위의 지리적 단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합산하여 시·도별 지역소득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하향식 방법은 국민소득통계에 산출된 수치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순수 상향식 방법은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은 하향식 방법 또는 혼합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ESA 2010에서도 순수한 상향식 방법의 형태는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별 지역소득통계 작성시에도 상향식 방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³⁰⁾

일반적으로 지역소득통계는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중요한 보완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ESA2010, 13.3).

30) 오히려 우리나라의 시·군·구별 지역소득 및 미국의 대도시권별(Metropolitan Area) GDP는 하향식 방법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부록표 4] 지역계정(생산·지출·분배)지표의 포괄범위

① 산출액	지 역 내 총 생 산 (GRDP)				중간 소비
② 지역내 총생산	비용자 보수	영업 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 소모	
③ 지역민 총생산	지역외로 부터의 순요소소득	비용자 보수	영업 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 소모
④ 지역민 요소소득	지역외로 부터의 순요소소득	비용자 보수	영업 잉여		
⑤ 지역내 총지출	민간최종 소비지출	정부최종 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순이출 (이출-이입)	

출처: 한국지역경제학회(2015), 시·군·구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및 활용방안.

다. 미국의 지역소득통계 작성 사례

1) 개요

미국의 지역소득통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가지 유형의 지역소득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주별 지역내총생산(GDP by state)’은 우리의 시도별 지역내총생산과 같고 ‘대도시권별 지역내총생산(GDP by Metropolitan Area)’은 우리의 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과 같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별 지역내총생산’은 직접 작성 후 국민소득통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정을 통해 확정하지만, ‘대도시권별 지역내총생산’은 하향식 추정법을 통해 작성한다.

지역소득통계 작성에 사용되는 주요 자료로는 경제총조사(economic census)가 이용된다. 미국의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조사되는데, 경제총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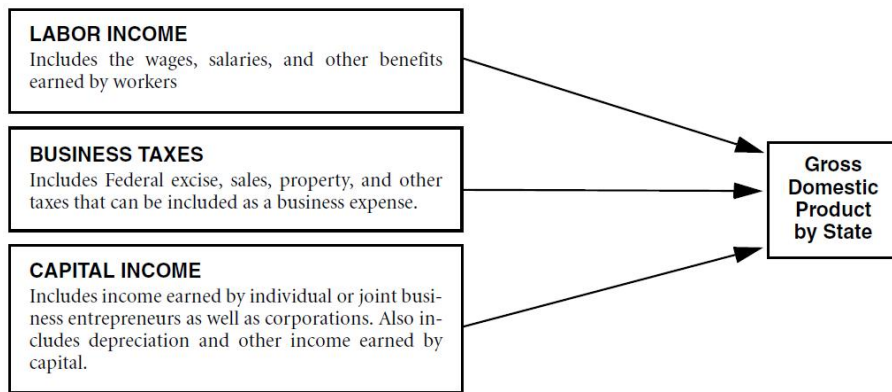
사가 조사되는 년도를 기준년(benchmark)이라 하고 기준년도의 지역소득 통계 작성방법을 살펴본다. 경제총조사가 작성되지 않는 년도는 주별 지역소득통계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시간적 움직임을 반영하는 시계열지표들을 이용하여 내삽(interpolation) 및 외삽(extrapolation) 추정을 통해 작성한다.

미국 지역소득통계의 작성상의 특징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하여 산출한 뒤 합산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별로 지역내 소득을 추정하여 합산하는 방식과 같다.

2) 작성절차

미국의 지역소득통계는 ‘노동소득’, ‘사업세’ 그리고 ‘자본소득’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³¹⁾ 다음의 <그림>은 미국 지역소득통계의 구성 항목들을 나타내고 있다.

[부록그림 3] 미국 지역소득통계의 구성



31) 용어가 일부 우리와 다르나, 가급적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BEA(2006)의 ‘Gross Domestic Product by State Estimation Methodology’을 참고.

미국 지역소득통계는 크게 8가지 단계를 거쳐서 작성되며, 각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단계: BEA의 주별 개인소득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소득 추정
- 2단계: BEA의 주별 개인소득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비기업 자본소득을 추정
- 3단계: 센서스국 및 다른 연방정부기관과 주정부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로부터 기업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감한 사업세를 추정
- 4단계: 농업부와 센서스국의 부가가치자료를 토대로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의 주별 총GDP를 추정³²⁾
- 5단계: 규제산업의 경우 기업별로 보고된 금융자료, 비규제산업의 경우 센서스국의 영수증 및 급여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기업의 자본소득을 추정함. 공기업의 경우, 자본소득은 센서스국으로부터 수입 및 지출자료를 토대로 함³³⁾
- 6단계: 나머지 항목인 주별GDP 또는 기업자본소득을 계산함. 4단계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의 경우, 주별GDP의 법인자본소득항목은 주별GDP와 노동소득, 비법인 자본소득 및 보조금을 차감한 법인세의 합 간의 차이로 계산됨. 5단계에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의 경우, 주별GDP는 노동소득, 보조금 차감 법인세 및 자본소득의 합으로 계산됨
- 7단계: BEA의 연간산업계정에서 생산된 산업별 GDP에 대한 전국추정치에 대하여 주별GDP와 그 항목들을 조정함
- 8단계: 끝으로, 경상가격 주별GDP 추정치에 전국의 연쇄가중가격을

32) 농업, 광업, 건설업 및 제조업이 이에 해당한다.

33) 임업, 어업 및 관련 활동, 장치산업, 도소매업, 교통 및 창고업, 우편서비스 제외, 정보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전문기술서비스업, 기업관리업, 행정 및 폐기물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 연예 및 오락서비스,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이 해당한다.

적용함으로써 주별 실질GDP를 계산함

위와 같은 미국 지역소득통계의 작성절차를 간략히 표로 도식화 하면 다음의 <부록표 5>와 같다. 재화의 경우, 노동소득과 (순)사업세, 그리고 주별 총 GDP와 비기업 자본소득을 구한 후 기업 자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서비스의 경우는 GDP 구성항목을 각각 산출한 뒤 합산하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주별 GDP를 산출한다는 점이 다르다.

[부록표 5] 미국 지역소득통계의 작성순서

구분	재화	서비스
노동소득	1 (SPI)	1 (SPI)
(순)사업세	3 (public data)	3 (public data)
자본소득	비기업 자본소득	2 (SPI)
	기업 자본소득	6 (차감)
계(주별 GDP)	4 (Bureau data, etc)	5 (Bureau data, etc)
		6 (합산)

* 주: 표 안에 번호는 각각 재화 및 서비스 산업별로 지역소득통계의 작성순서를 의미하며,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저자가 기입하였음. 괄호() 안은 작성에 사용되는 기초자료임.

3) 유의사항

미국 지역소득통계의 경우, 모든 지역소득통계의 값들을 합산하면 국민소득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주별 GDP는 연방정부 직원 및 해외 파병 군인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주별 GDP에는 해외에 있는 연방정부시설과 모든 군사무기에 대한 자본소비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3. 관련 통계의 현황

지역소득에 관한 통계로는 지역소득통계 외에 지역산업연관표가 존재한다.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는 서로 집계 목적의 차이가 있고, 각기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추계에 이용되는 대표상품 선정, 표본추

출에 사용되는 모집단, 추정에 사용되는 간접자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표되는 수치가 상이하다. 국민소득통계의 경우 수입과 관세를 부가가치에 포함시키는 반면 산업연관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역시 두 통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의 하나이다(김동석, 2003; 29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수준에서 거시적 측면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그리 많지 않으며, 시·도GRDP와 시·군·구별 GRDP, 그리고 지역산업연관표 정도이다.

가. GRDP

시·도 수준의 GRDP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소득통계의 개발에 착수하여 수많은 기초통계의 정비, 개선 및 개발과 지역소득의 추계시산 작업을 거친 끝에 1993년 5월 『지역내총생산1985~1991』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지역내총생산 자료로는 소비·투자구조와 물류의 흐름 파악이 불가능하여 지역의 경제구조 분석에 한계가 있고, 지역소득통계 이용자들이 생산소득자료 이외에도 소비, 투자 등 지출측면의 다각적인 지역소득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응하여 통계청에서는 1997년부터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작성을 추진하여, 2001년 7월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1995~1999』을 공표하였고, 2009년에는 소득분배 계정을 공표하였다. 위와 같은 계정의 확충작업과 함께 5년마다 통계의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여 통계의 현실반영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2014년 7월에는 2010년 기준 개편을 실시하였고, 2014년 개편부터 계정체계를 2008 SNA 기준으로 변경하였다(통계청, 2017; 457~458p).³⁴⁾

34) 이 내용은 통계청(2017), 「2015년 지역소득통계」의 기술을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계청(2017)을 참고하기 바란다.

[부록그림 4] 지역소득통계의 계정별 작성현황

업무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이후
담당인원	9명	9명	9명	9명	8명	7명	7명	5명	5명	4명
GRDP (생산계정)	GDP 확정자료 (6월 공표)	GDP 확정자료	GDP 확정자료	GDP 확정자료 기준년개편 시군구 GRDP 워크숍 계획 수립 및 실시	GDP 확정자료 시군구 GRDP 워크숍 실시 잠정주계 자료 (12월 공표)	GDP 확정자료 시군구 GRDP 워크숍 실시 지역경제동향 발간(연5회)	GDP 확정자료 시군구 GRDP 워크숍 실시 지역경제동향 발간(연4회)	GDP 확정자료 시군구 GRDP 워크숍 실시 지역경제동향 발간(연4회)	GDP 확정자료 시군구 GRDP 워크숍 실시 지역경제동향 발간(연4회)	GDP 확정자료 시군구 GRDP 워크숍 실시 지역경제동향 발간(연4회)
비 고		지출계정 개발 인원 : 2명	지출계정 인원 : 3명	지출계정 인원 : 4명	지출계정 인원 : 4명	지출계정 인원 : 4명	지출계정 인원 : 4명	지출계정 인원 : 3명 분배계정 인원 : 3명	지출계정 인원 : 3명 분배계정 인원 : 3명	지출계정 인원 : 3명 분배계정 인원 : 4명 지역경제동향 발간(연4회)
총인원	9명	11명	12명	13명	12명	11명	11명	11명	11명	11명

출처 : 이충열외(2007), “국민계정·국제수지·외환분야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나. 지역산업연관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는 그동안 기준년표(실측표) 13회, 비교년표(연장표) 19회 등 총 32회 작성되었으며, 부문분류는 지금까지 13회 개편되었다. 산업연관표 작성 초기에는 생산자가격 기준으로만 작성되었으나 1966년표부터 구매자가격표가, 2003년부터는 기초가격표가 추가적으로 작성되었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총 4차례(2003년, 2005년, 2010년, 2013년) 작성되었는데, 2003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하여 2007년 3월 발표하였다. 2010년에는 국민계정 편제를 위한 국제기준인 2008 SNA에 따라 작성기준이 변경되었다.³⁵⁾

다. 시·군·구 GRDP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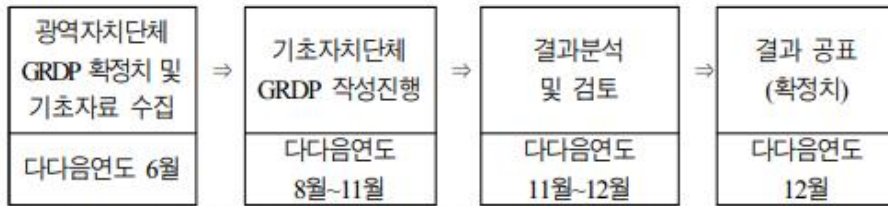
35) 이 내용은 통계청(2017), 「『산업연관표』 통계정보보고서」의 기술을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계청(2017)을 참고하기 바란다.

36) 시·군·구 GDRP에 관한 설명은 다음의 선행연구에 기술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회입법조사처(2017), 기초자치단체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군·구GRDP는 16개의 각 광역자치단체가 작성하며, 현재 생산계정을 통해 작성되고 있다. 작성주기는 연 1회이며 대상연도 종료 후 21개월 이내에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도 GRDP의 확정치 공표 후 각종 배분지표를 이용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시의성이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³⁷⁾

시·군·구 GRDP 작성절차는 다음의 <부록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시·도GRDP 확정치를 발표하면, 시·도GRDP 및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별 GRDP를 작성하여 결과를 공표한다. 시·군·구GRDP는 잠정치는 없으며 확정치만을 공표한다.

[부록그림 5] 시·군·구 GRDP 작성절차: 2017년 4월 현재



주: 세부일정과 작성결과 공표일정은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7), 기초자치단체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군·구GRDP 작성연혁은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다르며, 1998년 경기도가 가장 먼저 공표되었다.

37) 미국의 경우, 우리의 시·도GRDP와 시·군·구GRDP에 대응하는 주(state)단위 GRDP와 대도시(metropolitan areas)단위 GRDP가 작성되고 있는데, 우리와는 달리 두 통계 모두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작성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상연도 종료 후 21개월 이내에 공표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대상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공표되고 있다.

[부록그림 6] 시군구 GRDP 승인 및 공표 현황: 2017년 4월 현재

시 도	작성승인	승인번호	공표시작년도	계열기간
서울	2009년	201012	-	-
부산	2008년	202009	2010년	2005년 ~ 2014년
대구	2003년	203006	2009년	2004년 ~ 2014년
인천	2009년	204007	2011년	2005년 ~ 2014년
광주	2009년	205008	2010년	2005년 ~ 2013년
대전	1998년	206006	1999년	1997년 ~ 2014년
울산	2008년	207005	2010년	2005년 ~ 2014년
경기	1998년	210005	1998년	1993년 ~ 2014년
강원	1998년	211004	2000년	1993년 ~ 2014년
충북	2007년	212005	2008년	2000년 ~ 2014년
충남	2007년	213007	2008년	2000년 ~ 2014년
전북	2007년	214007	2010년	2005년 ~ 2014년
전남	2009년	215004	2010년	2005년 ~ 2014년
경북	1998년	216006	2002년	1995년 ~ 2014년
경남	1999년	217005	2002년	1998년 ~ 2014년
제주	2008년	218005	2011년	2005년 ~ 2014년

주: 1) 계열기간이란 기초자치단체 GRDP가 생산된 시계열 기간을 말함

2) 서울은 기초자치단체 GRDP를 미발표

자료 :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 수록된 지자체별 GRDP 설명자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7), 기초자치단체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절 주요 국가의 국가발전지표 목록

[부록표 6] 뉴질랜드 국가발전지표 목록

영역	No	지표
인구 (Population)	1.1	인구 크기와 성장 (Population size and growth)
	1.2	출산율 (Fertility rate)
	1.3	의존 정도 (Dependency ration)
	1.4	민족의 다양성 (Ethnic diversity)
	1.5	지역 인구 변화 (Regional population change)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2.1	멸종 위기 종의 수 (Number of threatened species)
	2.2	선택된 토착종의 분포 (Distribution of selected native species)
	2.3	토지 표지 면적 (Area of native land cover)
	2.4	목표 수준 이하의 어류 비율 (Proportion of assessed fish stocks below target levels)
	2.5	해충 동물과 잡초 종의 분포 (Distribution of selected pest animal and weed species)
대기의 질 (Air and atmosphere)	3.1	순 온실 가스 배출량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3.2	부문별 온실 가스 배출량 (Greenhouse gas emissions by sector)
	3.3	연간 표면 온도 (Annual surface temperature)
	3.4	경제의 온실 가스 집약도 (Greenhouse gas intensity of the economy)
	3.5	성층권 오존 수준 (Stratospheric ozone levels)
	3.6	대기 오염 (Air pollution)
수질 (Water)	4.1	식수와 인구 (Population with drinking water)
	4.2	강과 하천의 질소 (Nitrogen in rivers and streams)
	4.3	강과 하천의 생물학적 건강 (Biological heath of rivers and streams)
	4.4	호수 수질 (Lake water quality)
	4.5	지하수 품질 (Groundwater quality)
	4.6	해안 수영장, 강, 호수에서의 세균 오염 (Bacterial pollution at coastal swimming spots, rivers and lakes)

영역	No	지표
	4.7	총 수자원과 비교한 물 분배 (Water allocation compared with total water resource)
토지 사용 (Land use)	5.1	농사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 (Area of land used for farming)
	5.2	토양 건강 (Soil health)
	5.3	토양 중 질소 및 인 함량 (Nitrogen and phosphorus content in soil)
	5.4	오염된 토양 (Contaminated soil sites)
	5.5	다목적 토양의 소실 (Versatile soil extinction)
	5.6	산간지역의 침식 (Hill country erosion)
에너지 (Energy)	6.1	일인당 총 1 차 에너지 공급량 (Total primary energy supply per person)
	6.2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 (Energy intensity of the economy)
	6.3	가정용 에너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 (소득그룹별) (Percentage of electricity on energy used in the home, by income group)
	6.4	가정용 에너지 소비액 (소득그룹별) (Household expenditure on energy used in the home, by income group)
	6.5	에너지 의존성 (Energy dependency)
	6.6	에너지 관련 온실 가스 배출량 (Energy-related greenhouse gas emissions)
교통 (Transport)	7.1	차량 유형별, 도로별 차량 킬로미터 여행객 (Vehicle-kilometres travellers by road, by vehicle type)
	7.2	경제의 도로화물 수송 강도 (Road freight transport intensity of the economy)
	7.3	경제의 대중 교통 집중도 (Public transport intensity of the economy)
	7.4	주당 국제선 수 (Number of international flights per week)
	7.5	걸거나 자전거로 일하는 고용 인구의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in employment walking or cycling to work)
쓰레기	8.1	매립식 쓰레기 처리된 고체 폐기물

영역	No	지표
(Waste)		(Solid waste disposed to landfill)
	8.2	연석 재활용에 접근 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access to kerbside recycling)
	8.3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 (Proportion of packaging waste recycled)
	8.4	실질 가계 소비 지출 (Re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개발 (Innovation)	9.1	GDP 대비 연구 개발비 지출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as a proportion of GDP)
	9.2	목적별 연구 개발비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by purpose)
	9.3	연구 및 개발에 종사하는 인구 수 (Personnel involv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9.4	유형별 혁신 비율 (Rate of innovation by type)
노동, 지식, 기술 (Work, knowledge, and skills)	10.1	노동참가율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10.2	실업률 (Unemployment rate)
	10.3	인종별 임금 평등 (Pay equality by ethnicity)
	10.4	노동 생산성 (Labour productivity)
	10.5	성인 인구의 교육 성취도 (Educational attainment of the adult population)
	10.6	고등 교육 참여율 (Participation in tertiary education)
	10.7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Literacy skills)
	10.8	인종별 조기 유아 교육 접근도 (Acces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ethnicity)
경제적 탄력성 (Economic resilience)	11.1	1 인당 실질 총자산 (Real net stock of total assets per person)
	11.2	1 인당 실질 사회기반시설 (Real net of infrastructure per person)
	11.3	1 인당 고정자본에 대한 실질 투자 (Real investment in fixed capital per person)
	11.4	부채 서비스와 수출 수입의 비율 (Ratio of debt services to export earnings)
	11.5	수출의 다양성 (Diversity of exports)
	11.6	정부 부채 (Government debt)
생활수준	12.1	1 인당 총 실질 국내 가치분 소득

영역	No	지표
(Living conditions)		(Real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person)
	12.2	1 인당 실질 가계 소비 지출 (Re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per person)
	12.3	소득 불평등 (Income inequality)
	12.4	저소득층 인구 (Population with low incomes)
	12.5	주택 가격 (Housing affordability)
	12.6	생활의 물질적 기준에 대한 가정의 만족도 (Household satisfaction with material standard of living)
건강 (Health)	13.1	출생시 건강관련 지출 (Health expenditure at birth)
	13.2	건강 생활의 보급 (Prevalence of Health lifestyles)
	13.3	유년기 예방 접종률의 보급 (Childhood immunisation coverage)
	13.4	정신적 고통의 유행 (Prevalence of psychological distress)
	13.5	자살률 (Suicide rate)
	13.6	피할 수 없는 병원 입원 (Avoidable hospital admissions)
사회적 연결과 정부 Social connection and governance	13.7	취소 생존 확률 (Cancel - survival probabilities)
	14.1	집 밖에서의 공식적인 비급여 노동 (Formal unpaid work outsides the home)
	14.2	폭행으로 사망한 비율 (Rate of death from assault)
	14.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Impact of fear of crime on quality of life)
	14.4	전국 및 지방 선거에서 유권자 투표율 (Voter turnout at general and local elections)
14.5	의회와 지방 정부에서의 여성 대표 (Representation of women in Parliament and local government)	
문화와 정체성 (Culture and identity)	14.6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15.1	테레오 마오리의 연사 (Speakers of tereo Maori)
	15.2	마오리 언어 집중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수 (Children attending Maori language immersion schools)
	15.3	역사적인 장소의 수 (Number of historic places)
15.4	뉴질랜드 텔레비전의 지역 콘텐츠 (Local content on New Zealand television)	

[부록표 7] 호주의 2012년 국가발전지표 목록

주제/요소	지표
-------	----

	주제/요소	지표
사회 (Society)	건강(HEALTH)	
	건강 (헤드 라인) (Health (headline))	출생 시 기대 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신체 건강 (Physical health)	출생 시 무상 평균 수명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at birth)
	정신 건강 및 웰빙 (Mental health and wellbeing)	심리적 고통의 수준 (Levels of psychological distress)
	양질의 의료 서비스 (Quality health services)	데이터 갭 Data gap)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Healthy lifestyles)	과체중 또는 비만인 성인의 비율 (Proportion of adults who are overweight or obese)
		흡연율 (Smoking rates)
	건강한 환경 (Healthy environments)	수도 도시의 평균 공기질의 지수 (Average air quality index for capital cities)
	친밀한 관계(CLOSE RELATIONSHIPS)	
	친밀한 관계 (헤드 라인) (Close relationships (headline))	다른 곳에 신뢰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who have family members living elsewhere that they can confide in)
	긍정적인 관계 (Positive relationships)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항상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 같이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who feel they are able to have a say with family and friends on important issues all or most of the time)
	배려 관계 (Caring relationships)	가계 밖으로부터 위기 발생 시 지원 소스를 가진 사람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that have a source of support in a time of crisis from persons outside the household)

주제/요소	지표
번성하는 아이들 (Thriving children)	신체적 건강과 웰빙 부분에서 발달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비율 (Proportion of children who are developmentally vulnerable due to their physical health and wellbeing)
시간과 기회 (Time and opportunity)	시간을 서두르거나 가끔 혹은 항상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who feel rushed or pressed for time often or always)
관계 지원 (Relationship support)	데이터 갭(Data gap)
집(HOME)	
홈 (헤드라인) (Home (headline))	노숙자 비율(Homelessness rate)
적절한 주택 (Adequate housing)	인구 과밀 상태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 (Proportion of households living in overcrowded conditions)
저렴한 주택 (Affordable housing)	저소득층 주택 임대 가정의 가구 소득 대비 임대 비용 (Rental costs as a proportion of household income for low income rental households)
보유 (Tenure)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모기지 유무와 상관없이)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own their own home (with or without a mortgage))
귀속 (Belonging)	한 지역을 고국 또는 전통 국가로 인정하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의 비율 (Propor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who recognise an area as homelands or traditional country)
안전(SAFETY)	
안전성 (헤드라인) (Safety (headline))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비율 (Physical assault victimisation rate)
범죄(Crime)	악의적인 범죄로 인한 물리적 재산 피해를 (Malicious property damage victimisation rate)

	주제/요소	지표
	안전한 환경 (Safe environments)	데이터 갭(Data gap)
	안전 규정 및 시스템 (Safety regulations and systems)	데이터 갭(Data gap)
	피난 (Refuge)	데이터 갭(Data gap)
	안전에 대한 느낌 (Feelings of safety)	데이터 갭(Data gap)
학습 및 지식(LEARNING AND KNOWLEDGE)		
	학습 및 지식 (헤드라인) (Learning and knowledge (headline))	직업 또는 고등 교육 자격을 갖춘 25-64 세의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aged 25-64 years with a vocational or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조기 학습 (Early learning)	데이터 갭(Data gap)
	학교 교육 (Schooling)	20-24세 중 12학년 또는 Certificate III 성취율 (Attainment rate of Year 12 or Certificate III qualification for people aged 20-24 years)
	추가 교육 (Further education)	25-64세 중 전문대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aged 25-64 years with a vocational or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평생 학습 (Lifelong learning)	데이터 갭(Data gap)
	생활 기술 (Life skills)	데이터 갭(Data gap)
	연구(Research)	고등 교육 기관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출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higher education organisations)
	세대 간 학습 (Inter-generational learning)	데이터 갭(Data gap)

주제/요소	지표
커뮤니티 연결 및 다양성 (COMMUNITY CONNECTIONS AND DIVERSITY)	
커뮤니티 연결 및 다양성 (헤드 라인) (Community connections and diversity (headline))	인터뷰 직전 12 개월 동안 사회 및 커뮤니티 그룹에 개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had no involvement in social and community groups in the 12 months prior to being interviewed)
커뮤니티 관계 (Community relationships)	인터뷰 직전 12 개월 동안 사회 및 커뮤니티 그룹에 개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had no involvement in social and community groups in the 12 months prior to being interviewed)
지역 사회 지원 (Community support)	데이터 갭(Data gap)
차이점 존중 (Respect for difference)	데이터 갭(Data gap)
문화 활동 및 참여 (Cultural activity and participation)	데이터 갭(Data gap)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문화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cultures)	부족, 부족 그룹, 언어 그룹, 선교 또는 지역 그룹과 동등한 원 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의 비율 (Propor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who identify with a clan, tribal group, language group, mission or regional group)
공유된 신원 (Shared identity)	호주 시민권자인 해외 출생의 호주 거주자 (5 년 이상 여기에 거주 한 사람)의 비율 (Proportion of overseas-born Australian residents (who have lived here for five years or more) who are Australian citizens)
공정한 이동 (A FAIR GO)	
공정한 이동 (헤드라인) (A fair go)	데이터 갭(Data gap)

주제/요소	지표
(headline))	
기본 요구 사항 충족 (Meeting basic needs)	경제 자원이 부족하거나 재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하나 이상 있는 가구의 비율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have low economic resources and have experienced one or more financial stressors)
서비스(Services)	데이터 갭(Data gap)
교육, 훈련 및 정보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18-24 세의 사람들을 위한 교육 참여율 (Education participation rates for people aged 18-24 years)
고용 (Employment)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 (Employment as a proportion of all people who are in work or want to work)
수입(Income)	저소득 가구 및 중간 소득 가구의 평균 실질 가처분 소득 (Average real equivalised disposable household income for low and middle income households)
하부 구조 (Infrastructure)	데이터 갭(Data gap)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Assistance for vulnerable people)	데이터 갭(Data gap)
풍요로운 삶(ENRICHED LIVES)	
풍성한 삶 (헤드라인) (Enriched lives (headline))	데이터 갭(Data gap)
감정(Feelings)	데이터 갭(Data gap)
기부(Giving)	가구원 외의 사람들에게 무급으로 도움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that provided unpaid help to others living outside the household)

	주제/요소	지표
	시간과 기회 (Time and opportunity)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그리고 사회 및 지역 사회 상호 작용에 소비 된 평균 시간 (Average time spent on recreation and leisure, and social and community interaction)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Recreation and sport)	스포츠 및 체육 레크리에이션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for sport and physical recreation)
	대중문화와 예술 (Popular culture and the arts)	문화 행사 및 공연 참여율 (Attendance rate for cultural events and venues)
		문화 활동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for selected cultural activities)
	영감(Spirituality)	데이터 갭(Data gap)
경제 (Economy)	기회(OPPORTUNITIES)	
	기회 (헤드라인) (Opportunities headline)	수료증 III 이상의 사람 또는 숙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 (Proportion of persons with a Certificate III or above, or employed in a skilled occupation)
	고용 기회 (Employment opportunities)	일하거나 일하고 싶은 사람들 중 고용된 비율 (Employment as a proportion of people who are in work or want to work)
	사업 기회 (Business opportunities)	새로운 비즈니스 진입율 (New business entry rate)
	생활 표준 (Standard of living)	실질 순 국가 가처분 소득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기능(Capabilities)	수료증 III 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비율 (Proportion of persons with a Certificate III level qualification or above)
	복잡성 감소 (Reduced complexity)	데이터 갭(Data gap)
	직업(JOBS)	
	직업 (헤드 라인) (Jobs headline)	실업률(Unemployment rate)

	주제/요소	지표
	수입(Income)	낮은 임금을 받는 비관리자 직무의 비율 (Proportion of non-managerial jobs that are low paid)
	직업 만족도 (Job satisfaction)	평균 직무 만족도 (Average level of job satisfaction)
	유동성 있는 작업 준비 (Access to flexible work arrangements)	유연한 근무 시간을 위해 고용주와 합의한 직원 비율 (Proportion of employees with an agreement with their employer to work flexible hours)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이용 (Access to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업무 관련 부상률 (Incidence rate for compensated work related injuries)
	효과적인 산업 관계 환경 (Effective industrial relations environment)	근로자 1,000명당 총 산업 분쟁 수 및 손실된 근무일수 (Total number of industrial disputes and working days lost per thousand employees)
번영(PROSPERITY)		
	번영 (헤드라인) (Prosperity (headline))	1인당 순저축 및 실질 순자산의 기타 변화 (Net saving plus other changes in real net wealth per capita)
	효율적인 인력 (Efficient workforce)	노동력 미활용률 (Labour force underutilisation rate)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Efficient use of resources)	다중 요소 생산성 (Multifactor productivity)
	자원에 대한 접근 (Access to resources)	데이터 갭(Data gap)
	효율성을 위한 혁신 (Innovation for efficiency)	데이터 갭(Data gap)

주제/요소	지표
경쟁(Competition)	실질 단위 노동 비용(Real unit labour costs)
효과적인 규제 (Effective regulation)	데이터 갭(Data gap)
경제 위기(A RESILIENT ECONOMY)	
탄력 있는 경제 (헤드라인) (A resilient economy (headline))	다중 요소 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
경제적 유연성 (Economic flexibility)	평균 실업 기간(Average duration of unemployment)
보험 (Insurance)	데이터 갭(Data gap)
경제적 안정성 (Economic stability)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건전한 금융 부문 (Prudent financial sector)	총 자본베이스 비율(Total capital base ratio)
정보(Information)	데이터 갭(Data gap)
생활수준 향상(ENHANCING LIVING STANDARDS)	
생활수준 향상 (헤드라인) (Enhanced living standards (headline))	1인당 실질 순 국가 가처분 소득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구매력 (Buying power)	1인당 실질 순 국가 가처분 소득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정부 재정 (Government finances)	일반 정부 저축률(General government saving ratio)
경제 자원 (Economic resources)	1인당 비금융 자산(Non-financial assets per capita)
환경 자원 (Environmental resources)	데이터 갭(Data gap)
인적 자원의 존재와	노동력 참가율(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주제/요소	지표
	가용성 (Presence and availability of human resources)	
	변화를 위한 혁신 (Innovation for change)	혁신적인 비즈니스 속도에 의한 제품 확장 (Product expansion by innovative businesses rate)
최악의 결과(FAIR OUTCOMES)		
	공정한 결과 (헤드라인) (Fair outcomes (headline))	저소득 가구와 중간 소득 가구의 소득 비율 (Ratio of income received by low income households relative to middle income households)
	생활수준 (Living standards)	1인당 실질 순 가처분 소득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공평(Equity)	저소득 가구와 중간 소득 가구의 소득 비율 (Ratio of income received by low income households relative to middle income households)
	경제적 단점 (Economic disadvantage)	저소득 가구와 중간 소득 가구의 소득 비율 (Ratio of income received by low income households relative to middle income households)
	공동 기부와 책임 (Shared contribution and responsibility)	조세부담율(Resident taxation rate)
국제 경제 집행(INTERNATIONAL ECONOMIC ENGAGEMENT)		
	국제 경제 참여 (헤드라인) (International economic engagement (headline))	국제 무역 비율(International trade rate)
	무역 관계 개발 및 유지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rade)	국제 무역 비율(International trade rate)

	주제/요소	지표
	relationships)	
	이민 및 관광 (Migration and tourism)	해외 순유입 인구 비율 (Net overseas migration per capita)
	국제적인 책임과 협력 (Uphold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cooperation)	데이터 갭(Data gap)
	지식과 아이디어 공유 (Sharing of knowledge and ideas)	교육, 비즈니스 및 컨퍼런스를 위한 국제 행사 (International short-term movements for education, business and conferences per capita)
환경 (Environment)	건강한 자연 환경(HEALTHY NATURAL ENVIRONMENT)	
	건강한 자연 환경 (헤드라인) (Healthy natural environment (headline))	데이터 갭(Data gap)
	생물 다양성 (Biodiversity)	데이터 갭(Data gap)
	육지 및 식물(Land and vegetation)	데이터 갭(Data gap)
	강, 호수 및 지하수 (Rivers, lakes and ground water)	데이터 갭(Data gap)
	바다와 강어귀 (Oceans and estuaries)	데이터 갭(Data gap)
	대기 (Air and atmosphere)	수도권의 평균 공기질 지수 (Average air quality index for capital cities)
	숲(Forests)	데이터 갭(Data gap)
	환경에 대한 이해 (APPRECIATING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이해	자연 활동과 관련된 국내 여행 횟수

	주제/요소	지표
	(헤드라인) (Appreciating the environment (headline))	(Number of domestic trips involving nature activities per capita)
	환경의 본질적인 가치 이해하기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s intrinsic value)	데이터 갭(Data gap)
	환경의 경제적 가치 이해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s economic value)	데이터 갭(Data gap)
	자연 지역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가능성 (Access to and availability of nature areas)	자연 활동과 관련된 국내 여행 횟수 (Number of domestic trips involving nature activities per capita)
	문화적 연결 (Cultural connections)	데이터 갭(Data gap)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의 소속감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connection to country)	국토 또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있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주민의 비율 (Propor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who recognize an area as homelands or traditional country)
	품질 정보 (Quality information)	데이터 갭(Data gap)
환경 보호(PROTECTING THE ENVIRONMENT)		
	환경 보호 (헤드라인) (Protecting the	데이터 갭(Data gap)

주제/요소	지표
environment (headline)	
보호(Protect)	총 육상 및 해양 보호 (Total terrestrial and marine area protected)
추가 손상 방지 및 최소화 (Prevent and minimise further damage)	보존 목적으로 보호되는 농업 소유지의 토착 식물과 습지의 비율 (Proportion of native vegetation and wetlands on agricultural holdings being protected for conservation purposes)
복원(Restore)	데이터 갭(Data gap)
효과적인 프로그램 (Effective programs)	데이터 갭(Data gap)
환경 유지하기(SUSTAINING THE ENVIRONMENT)	
환경 유지 (헤드라인) (Sustaining the environment (headline))	호주의 순 온실 가스 배출량 (Australia's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천연 자원 (Natural resources)	1인당 자연 자본 (Natural capital per capita, chain volume measures)
토지 이용 (Land use)	데이터 갭 (Data gap)
물 사용(Water use)	데이터 갭 (Data gap)
폐기물 관리 (Waste management)	1 인당 폐기 물량(Amount of waste disposed per capita)
적응 기술 (Adaptive technology)	데이터 갭(Data gap)
적응 전략 (Adaptive strategies)	데이터 갭(Data gap)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호주의 순 온실 가스 배출량 (Australia's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건강한 환경 조성(HEALTHY BUILT ENVIRONMENTS)	

	주제/요소	지표
	건강한 환경 조성 (헤드라인) (Healthy built environments (headline))	도시가 좋은 도로망을 갖추고 교통 체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도시 거주자의 비율 (Proportion of capital city residents who feel that their city has a good road network and minimal traffic congestion)
	우수한 품질의 환경 (Quality built environment)	데이터 갭(Data gap)
	사람 친화적 (People friendly)	도시가 좋은 도로망을 갖추고 교통 체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자본 도시 거주자의 비율 (Proportion of capital city residents who feel that their city has a good road network and minimal traffic congestion)
	문화유산 (Culture and heritage friendly)	데이터 갭(Data gap)
	자연 지역에 대한 접근성 (Access to natural areas)	데이터 갭(Data gap)
	환경 친화적 인 (Ecologically friendly)	데이터 갭(Data gap)
	서비스 및 편의 시설 이용 (Access to services and amenities)	데이터 갭(Data gap)
	건강한 환경을 위해 하는 함께 노력 (WORKING TOGETHER FOR A HEALTHIER ENVIRONMENT)	
	더 건강한 환경을 위해 함께 일하기 (헤드라인) (Working together for a healthier environment)	데이터 갭(Data gap)

	주제/요소	지표
	(headline)	
	참여(Participation)	데이터 갭(Data gap)
	조정(Alignment)	데이터 갭(Data gap)
	협동(Collaboration)	데이터 갭(Data gap)
	책임 공유 (Shared responsibility)	데이터 갭(Data gap)
	국제 노동자 동맹 (International)	데이터 갭(Data gap)
정부 (Governance)	믿음(TRUST)	
	신뢰 (헤드라인) (Trust (headline))	일반적 신뢰 수준(Level of generalised trust)
	청렴(Integrity)	데이터 갭(Data gap)
	투명도 (Transparency)	데이터 갭(Data gap)
	책임 (Accountability)	데이터 갭(Data gap)
	정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대한 신뢰 (Trust in governance processes and systems)	호주 연방 선거에서 비공식 투표 (Informal votes in Australian federal elections)
	효과적인 정부(EFFECTIVE GOVERNANCE)	
	효과적인 정부 (헤드라인) (Effective governance (headline))	데이터 갭(Data gap)
	효과적인 정부 (Effective governance)	데이터 갭(Data gap)
	상호작용의 용이성 (Ease of interactions)	데이터 갭(Data gap)
보호 (Protection)	데이터 갭(Data gap)	

	주제/요소	지표
	원활한 상호 작용 (Seamless interactions)	데이터 갭(Data gap)
	자유와 규제의 균형 (Balance between freedom and regulation)	데이터 갭(Data gap)
	탄력성(Resilience)	데이터 갭(Data gap)
참여(PARTICIPATION)		
	참여 (헤드라인) (Participation (headline))	투표 참여 비율 (Proportion of eligible Australians enrolled to vote)
	의사 결정에 관여 (Involvement in decision making)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 투표율 (Voter turnout at federal elections)
	인식과 이해 (Awareness and understanding)	데이터 갭(Data gap)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Access and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decision making)	시민 또는 정치 집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rsons active in civic or political groups)
	책임감 (Taking responsibility)	해외에서 출생한 호주 거주자 (5년 이상 호주에 거주 한 사람)의 비율 (Proportion of overseas-born Australian residents (who have lived here for five years or more) who are Australian citizens)
통보된 공청회(INFORMED PUBLIC DEBATE)		
	알린 공개 토론 (헤드라인) (Informed public debate (headline))	데이터 갭(Data gap)

	주제/요소	지표
	개방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토론 (Open and informed debate)	데이터 갭(Data gap)
	진실 / 사실을 추구하고 접근 할 수 있는 자유 (Freedom to pursue and access truth/facts)	데이터 갭(Data gap)
	자유로운 매체 (A free media)	데이터 갭(Data gap)
	효과적인 규제 (Effective regulation)	데이터 갭(Data gap)
	국민의 권리와 책임(PEOPLES RIGHTS AND RESPONSABILITIES)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헤드라인) (Peopl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headline))	데이터 갭(Data gap)
	유지되는 권리와 의무 (Rights and responsibilities being upheld)	데이터 갭(Data gap)
	국가 법률 및 표준 (National laws and standards)	데이터 갭(Data gap)
	정의에 대한 접근성 (Access to justice)	선고받지 않은 죄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간 (Time on remand for unsentenced prisoners)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Proportion of people that feel they are able to have a say within the community on important issues)

	주제/요소	지표
	국제 협약 및 법률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laws)	데이터 갭(Data gap)

[부록표 8] 호주의 2006년 국가발전지표 목록

차원	주요지표	보조지표	기타지표
건강 (Health)	출생연령별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t birth)	25, 50, 75세별 생존율 (Proportion of people surviving to ages 25, 50 and 75)	국가별 연령별 기대여명 (International life expectancy at birth)
		유아사망율 (Infant mortality rate)	
		회피가능 사망자수 (Avoidable deaths)	장애인수 (Living with disability)
		암 발생수 (Incidence of all cancer)	
		심장마비 발생 수 (Incidence of heart attacks)	사망원인 (Causes of death)
		질병부담 (Burden of disease)	
교육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25-64세 인구 중 직업교육 또는 고등교육 이수자 (People aged 25 - 64 with a vocational or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15-19세 교육 참가율(Education participation rate for those aged 15 - 19)	고등교육에 대한 국제 15-64세의 고등교육 참여율 (International level of higher edu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for those aged 15 - 64)
		7~12세의 초등학교 재학율 (Year 7/8 to Year 12 apparent retention rate)	
		인적자본(Human capital stock)	
		15-64세의 교육 참가율 및 교육수준 (Education participation rates and attainment levels for those aged 15 - 64)	25-64세의 중등교육 이상의 최종학력자 비율 (Level of highest

차원	주요지표	보조지표	기타지표
		OECD의 문해율, 과학, 독해, 수학 수준 (OECD literacy rates, science, reading and mathematics)	non-school qualification for those aged 25 - 64 ※ non-school qualification: 중등교육 이상
		비토착교육 대비 토착교육 참가 및 성취비율 (Indigenous to non-Indigenous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ttainment ratios)	
		여학생 비율 (Female students as a proportion of all students)	
고용 (Work)	실업률 (Unemployment rate)	활용률이 낮은 노동력 (Labour force underutilisation rate)	불완전취업자 (Casual employees)
		취업자비율 (Proportion of people working)	파트타임근로자 및 (주당 50시간 이상) 과다근로자수 (People working part-time or longer hours (50 hours a week worked or more))
		장기실업률 (Long- term unemployment rate)	정규근로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 (Average hours per week, full-time workers)
		해고율(Retrenchment rate)	
		실업률 (Un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s)	
국민소득 (National income)	1인당 실질 순가처분소득 (Real net national)	1인당 실질GDP (Real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가구가처분소득의 균등에 대한 선택지표(Selected measures of equivalised
		1인당 실질최중소비	

차원	주요지표	보조지표	기타지표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Real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per capita)	household disposable income)
		1인당 실질가구 소비지출(Re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per capita)	국민소득의 국제비교: 총국민소득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national income: Gross National income)
		GDP대비 순저축비율(Net national saving as a proportion of GDP)	국민소득의 국제비교: 연평균GDP증가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national income: average annual GDP growth)
		실질산업총부가가치 (Real industry gross value added)	
		1인당 실질 총지역소득 (Real gross state income per capita)	
		교역조건(Terms of trade)	
	취업자수(Population in work)		
Economic hardship (경제적 어려움)	소득 2분위 및 3분위 가구의 주당 평균실질 가치분소득 (Average real equivalised weekly disposable income of households in the second and third deciles of the income distribution)	가구구성에 의한 경제적 상태지표 (Indicators of economic situation by household composition)	
국민부 (National)	1인당 실질국민순부	1인당 실질국민자산 및 부채 (Real national assets and liabilities)	

차원	주요지표	보조지표	기타지표
wealth)	(Real national net worth per capita)	per capita)	
		1인당 순자본 (Real net capital stock per capita)	
		경제적으로 입증된 1인당 (광물 및 에너지) 자원 (Economically demonstrated resources (minerals and energy) per capita)	
		실질순외채(Real net foreign debt)	
		1인당 실질총고정자본형성 (Real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per capita)	
		가구평균 순자산 (Mean household net worth)	
		가구의 자산 및 부채의 평균 (Mean value of selected household assets and liabilities)	
주거 (Housing)	주요지표 없음	없음	추가 방이 필요한 주택 내 가구수 (Households in dwellings requiring an additional bedroom)
Productivity (생산성)	Multifactor productivity 다요소 생산성	노동생산성(Labour productivity)	
		GDP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중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as a proportion of GDP)	
		GDP대비 소프트웨어 투자비율 (Investment in software as a proportion of GDP)	
		총고용 중 관리 및 전문직 비율	

차원	주요지표	보조지표	기타지표
		(Managers and professionals as a proportion of total employment)	
		웹사이트 또는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체 비율(Proportion of businesses with web site or home page)	
		근로시간 또는 질적 조정	
		근로시간(Hours worked and quality adjusted hours worked)	
		혁신기업 비율(Proportion of businesses innovating)	

[부록표 9] 호주의 2006년 국가발전지표의 보완지표 목록

보완영역	보완지표
문화 및 레저 (Culture and leisure)	문화적 장소 방문 및 문화행사 참가 (Attendance at cultural venues and events)
	스포츠행사 참가 (Attendance at sports events)
물가상승률 (Inflation)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국내최종수요가격지수(Domestic final demand price index)
	총최종소비지출(Total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총고정자본(Total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경쟁도 및 개방도 (Competitiveness and openness)	무역가중 환율(Trade weighted exchange rate)
	실질단위노동비용(Real unit labour costs)
	외국인이 소유한 호주기업 (Foreign ownership of Australian enterprise)
	호주무역개방도(Australian trade openness)
통신	가구의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접근도

보완영역	보완지표
(Communication)	(Computer ownership and internet access, households)
교통 (Transport)	인구 천 명당 승용차수 (Passenger vehicles per 1,000 people)
	도로 시설(Road fatalities)

[부록표 10] 아일랜드의 국가발전지표 목록

부문	Indicator	표제(Title)
사회 (Society)	1.1	아일랜드 : 연령대 별 인구 분포 (Ireland: Population distribution by age group)
	1.2	EU : 인구 (EU: Population)
	1.3	아일랜드 : 이주와 자연 증가 (Ireland: Migration and natural increase)
	1.4	아일랜드 : 출신 별 이민자 수 (Ireland: Immigration by country of origin)
	1.5	EU : 영유아 및 노인 부양비 (EU: Young and old age dependency ratios)
	1.6	EU : 총 출산율(EU: Total fertility rate)
	1.7	EU : 이혼율(EU: Divorce rate)
	1.8	EU : 빈곤의 위험 (EU: At risk of poverty rates)
	1.9	아일랜드 : 빈곤과 빈곤지속의 위험 (연령대별) (Ireland: At risk of poverty rates and consistent poverty rates by age group)
	1.10	아일랜드 : 빈곤과 빈곤지속의 위험 (가구 구성별) (Ireland: At risk of poverty rates and consistent poverty by household composition)
	1.11	아일랜드 : 빈곤과 빈곤지속의 위험 (주요 경제 상태별) (Ireland: At risk of poverty rates and consistent poverty by principal economic status)
	1.12	EU : 성별 임금 격차(EU: Gender pay gap)
	1.13	EU : 순 공식적 개발 원조

부문	Indicator	표제(Title)
		(EU: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14	EU :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구 (EU: Private households with internet access)
경제 (Economy)	2.1	아일랜드 : GDP 및 GNI (Ireland: GDP and GNI)
	2.2	EU : 현재 시장 가격의 GDP 및 GNI (EU: GDP and GNI at current market prices)
	2.3	EU : GDP 성장률(EU: GDP growth rates)
	2.4	EU : 1 인당 GDP(EU: GDP per capita in PPS)
	2.5	EU : 일반 정부 총 부채 (EU: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gross debt)
	2.6	EU : 공공 균형 (EU: Public balance)
	2.7	아일랜드 : 일반 정부 총 지출 (Ireland: 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
	2.8	EU : 총 고정 자본 (EU: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2.9	EU : 현재 계정 잔액(EU: Current account balance)
	2.10	EU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EU: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2.11	EU : 재화와 서비스 수입 (EU: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2.12	EU : 소비자 물가의 조화 지수 (EU: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2.13	EU : 가구의 최종 소비 물가 수준 (간접세 포함) (EU: Comparative price levels of final consumption by private households including indirect taxes)
	2.14	EU :성별 고용률 (EU: Employment rates by sex)
	2.15	아일랜드 : 근로시간 및 근로자 1인당 구매력 기준 GDP GDP(Ireland: GDP in purchasing power standards per hour worked and per person employed)
	2.16	EU : 실업률 (EU: Unemployment rates)
	2.17	EU : 장기 실업률(EU: Long-term unemployment rates)
	2.18	EU : 실업자 가정에 거주하는 18-59 세 인구 (EU: Population aged 18-59 living in jobless households)
2.19	아일랜드 : ESB 연결 (Ireland: ESB connections)	
2.20	아일랜드 : 주택 융자 (Ireland: Housing loans)	
환경	3.1	EU : 순 온실 가스 배출량

부문	Indicator	표제(Title)
(Environment)		(EU: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3.2	EU : 에너지 집약도 (EU: Energy intensity)
	3.3	아일랜드 : 도시의 미립자 문제 (Ireland: Particulate matter in urban areas)
	3.4	아일랜드 : 연간 평균 미립자 물질 농도 (Ireland: Annual average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3.5	아일랜드 : 온실 가스 배출량 (Ireland: Greenhouse gas emissions)
	3.6	아일랜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Ireland: Air pollutant emissions)
	3.7	아일랜드 : 총 도시 폐기물 발생, 회수 및 매립 (Ireland: Total municipal waste generated, recovered and landfilled)
	3.8	EU : 도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EU: Municipal waste generated and treated)
	3.9	EU : 1,000 명당 승객용 차량 (EU: Passenger cars per 1,000 inhabitants)
	3.1	EU : 내륙화물 운송의 분할 (EU: Modal split of inland freight transport)
교육 (Education)	4.1	아일랜드 : 교육에 대한 실질 공공지출 (Ireland: Real current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4.2	아일랜드 : 수준별 학생 수 (Ireland: Student numbers by level)
	4.3	EU :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EU: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4.4	EU : 교사 대 학생의 비율 (EU: Ratio of students to teachers)
	4.5	EU : 25 ~ 34 세 중 3 단계 교육을 받은 사람 (EU: Persons aged 25-34 with third-level education)
	4.6	EU : 독서, 수학 및 과학 문해력에 대한 학생의 성과 (EU: Student performance on the reading, mathematical and scientific literacy scales)
	4.7	EU : 성별에 따른 18 세에서 24 세 중 중 고용도 교육도 받지 않는 사람의 수 (NEET 비율) (EU: Young people aged 18-24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부문	Indicator	표제(Title)
		education and training by sex (NEET rates))
	4.8	EU : 수학, 이공계 전공 졸업생수 (EU: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s)
건강 (Health)	5.1	아일랜드 : 건강관리에 대한 공공 지출 (Ireland: Current public expenditure on health care)
	5.2	EU : GDP중 보건 의료에 대한 현재 지출(%) (EU: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care as a % of GDP)
	5.3	아일랜드 : 성별에 따른 출생 시의 기대 수명과 65 세의 기대 수명 (Ireland: Life expectancy at birth and at age 65 by sex)
	5.4	EU : 출생시 기대수명 (성별) (EU: Life expectancy at birth by sex)
	5.5	EU : 출생시 건강수명 (성별) (EU: Healthy life years at birth by sex)